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김성아 · 김문길 · 나원희 · 한영섭 · 강예은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협동연구총서 23-88-03

연구보고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저 자 김성아, 김문길, 나원희, 한영섭, 강예은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_나원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_한영섭(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_강예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88-01	청년종합연구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88-02	2023년 시설외소청년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배(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노혜진(강서대학교 교수)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원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영섭(갈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강예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박광옥 교수	김용득(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은영(강동대학교 교수) 이동림(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성명진(발달장애여성연구원 원장) 우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리)

보고서를 펴내며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일반 청년정책, 심지어 취약청년을 위한 정책 대상에도 미처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들을 ‘정책소외계층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유형과 정책소외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3개년 협동연구로 기획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1차 년도의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북한배경청년(통일연구원),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연구에 이어 올해 2차 년도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대한 2차 연구, 그리고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소외로 인해 일반 청년과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격차 완화 및 소외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유형과 실태 분석에서 확인된 취약성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접근으로는 세대 내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외청년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정책소외계층 청년들 역시 제도를 통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입 지점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견인하여 우리 사회 모든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금융 취약 실제(정책 수요)에 대응해 정합적 정책개발(정책 공급)을 제안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생산하는 데에 있음.

■ 연구내용

- 청년의 금융 취약 실제와 정책 정합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1) 금융취약청년의 개념과 선행연구 동향 검토
 - (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청년의 금융생활 실제 파악
 - (3) 실태조사를 통해 현세대 청년의 금융생활 실제 파악
 - (4)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심층집단인터뷰를 통해 금융취약청년 경험 청취
 - (5) 현세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영역의 금융 정책 현황 검토

■ 연구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함.
 - (1) 선행연구 검토
 - (2) 2차 자료 실증분석
 - (3)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4)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 실무자 심층집단인터뷰
 - (5)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 현황 분석
 - (6) 전문가 자문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청년은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생애 궤적에 따라 중년 후기에 최고점을 보이고 노년기에 점차 감소함.
- 최근 청년 부채율은 10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거주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등 양상이 변화함.
- 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는 청년 세대 내에서 이질적으로 드러나며, 이는 세대 내 격차의 문제로 이어짐.
 - 수도권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격차와 종사상 지위에 의한 격차가 두드러짐.
- 특히 과중채무, 체납 경험, 불법 사금융 등 금융취약청년이 존재하며, 이들의 금융취약성은 장애인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른 유형의 취약성과 중첩되어 등장함.
 - 청년의 금융취약성이 청년의 삶을 해칠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취약성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금융정책은 대출보증 혹은 대출에 의한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이나 상담 등 재무관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은 10% 이하에 불과함.
 - 금융생활의 청년 세대 내 격차뿐만 아니라 금융취약성에 노출된 청년이 존재하므로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비어 있음.
- 특히 금융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면서 청년이 금융취약성에 노출되거나 심화되는 경로가 존재하므로, 비어 있는 공적 지지체계로서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안전망이 요구됨.
 - 금융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의 접근성이 담보되어야 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전 생애 금융 건강성 확보를 위한 청년 지원
 - 원가족 등 보호를 받는 미성년기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임.
 -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앞두고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의 자산형성을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지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함.
 - 새로운 부채를 형성해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지우는 청년정책의 금융화를 지양하고 청년의 실제 삶에 가담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금융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과중채무, 불법사금융, 연체 등 다양한 금융취약 유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가진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금융취약 상태에서도 공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 및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과 실무자 역량이 필요함.
- 다중 취약청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
 - 청년의 금융취약성은 사회적 고립이나 저소득, 경제활동 중단 등의 또 다른 유형의 취약성과 연동되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 다차원적인 어려움이 보고됨.
 -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심리 분야, 도박 및 중독 분야, 자활 분야, 여성 및 장애인 지원 분야, 복지 분야, 그리고 다양한 청년정책과의 연계망이 필요함.
- 청년의 금융취약성 완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청년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기반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운영
 - 청년 인 지적 전문인력 확보 양성 및 보수교육
 - 법적 근거의 정합성 제고
 -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와 규제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협동연구총서 23-88-03

연구보고23-일반05-02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6

II. 선행연구 검토

- 1. 금융취약청년의 개념 11
- 2. 선행연구 동향 16
- 3. 이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구조 19

III. 청년 금융생활 실태 2차 자료 분석

- 1.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25
- 2. 청년 소득, 자산, 부채 현황 29
- 3. 청년 자산 및 부채 심층분석 34
- 4. 청년 부채 운용 특성 48
- 5. 소결 55

IV. 청년 금융취약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59
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	62
3. 청년 금융취약 원인 분석	85
4. 소결	89
V.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경험	
1. 질적 조사 개요	95
2. 청년의 금융취약성 유발 요인	98
3. 청년 금융취약 문제 발생과 심화 경위	105
4.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의 대응 노력	112
5. 정책적 시사점	117
VI. 청년금융정책 현황 분석	
1.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	126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사업	131
3. 비영리 분야의 청년금융사업	136
4. 소결	138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43
2. 정책제언	147
참고문헌	155
부 록	165
1.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조사표	167
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IRB 승인 결과	182
3.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부록표	183
4.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지 ·	190
5.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초점집단 인터뷰> IRB 승인 결과	196
Abstract	199

표 목차

표 Ⅲ-1. 가계금융복지조사 작성방법	26
표 Ⅲ-2. 분석자료의 연령집단 분포	28
표 Ⅲ-3. 연령집단별 개인 소득, 자산, 부채	31
표 Ⅲ-4. 연령집단별 가구 소득, 자산, 부채	32
표 Ⅲ-5.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부채 보유율	33
표 Ⅲ-6. 가구 및 개인 소득, 자산, 부채 간 상관관계	34
표 Ⅲ-7. 개인 자산 및 부채 여부 결정요인(Probit)	44
표 Ⅲ-8.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결정요인(OLS)	46
표 Ⅲ-9. 분석자료의 연령집단별 부채 건 분포	48
표 Ⅲ-10. 연령집단별 대출 형태	50
표 Ⅲ-11. 연령집단별 대출 세부 형태	51
표 Ⅲ-12. 연령집단별 대출 용도	53
표 Ⅲ-13. 연령집단별 대출 기관	54
표 Ⅳ-1. 응답자 특성	60
표 Ⅳ-2. 조사내용	61
표 Ⅳ-3. 응답자 현황	63
표 Ⅳ-4. 현재 기준(2023.4.) 부채 유무에 따른 부채 경험 현황	65
표 Ⅳ-5. 부채 건수별 부채 현황	70
표 Ⅳ-6. 부채 상황	70
표 Ⅳ-7.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의 연체 경험	71
표 Ⅳ-8. 3달/회 연체 경험	72
표 Ⅳ-9. 부채 부담 정도	73
표 Ⅳ-10. 금융관련 정보 습득 경로	78
표 Ⅳ-11.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81
표 Ⅳ-12. 가구 및 개인 총자산 현황	83
표 Ⅳ-13. 부채유무에 따른 재산 상속·증여 현황	84
표 Ⅳ-14. 금융취약성의 조작적 정의	85
표 Ⅳ-15. 청년 금융취약성 원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87
표 Ⅴ-1. 초점집단면접 진행 개요	97

표 V-2. 청년의 금융취약 경험 구조	118
표 VI-1. 청년금융정책 DB 구축 기준	125
표 VI-2. 중앙행정기관별 청년금융사업 기능	127
표 VI-3. 중앙행정기관별 청년금융사업 대상 분포	129
표 VI-4.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사업 대상별 기능	131
표 VI-5.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금융사업 기능	133
표 VI-6. 지방자치단체 청년금융사업의 특화대상	135
표 VI-7. 비영리 분야의 청년금융사업 현황	136
표 VII-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152
표 VII-2.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의 금융복지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152

그림 목차

그림 Ⅰ-1. 청년층 가계부채 주요 현황	3
그림 Ⅰ-2. 청년층 취약차주 비중	4
그림 Ⅰ-3. 청년 금융 관련 언론기사 추이	5
그림 Ⅱ-1. 모델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	12
그림 Ⅱ-2.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15
그림 Ⅱ-3. 연구 구조	20
그림 Ⅲ-1. 분석모형	29
그림 Ⅲ-2. 연령집단별 개인 소득, 자산, 부채(2022년)	30
그림 Ⅲ-3. 연령집단별 가구 소득, 자산, 부채(2022년)	31
그림 Ⅲ-4. 성별 및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35
그림 Ⅲ-5. 가구주와의 관계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36
그림 Ⅲ-6. 1인 가구 및 가족과의 동거 여부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37
그림 Ⅲ-7. 교육수준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38
그림 Ⅲ-8. 혼인상태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39
그림 Ⅲ-9. 종사상 지위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41
그림 Ⅲ-10. 거주지역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42
그림 Ⅳ-1. 취약계층 여부(중복응답)	64
그림 Ⅳ-2. 삶의 만족도 및 주변 도움 유무	65
그림 Ⅳ-3. 생애 최초 주된 부채	66
그림 Ⅳ-4. 부채보유 건수	67
그림 Ⅳ-5. 부채보유 건별 부채 종류, 부채기관	68
그림 Ⅳ-6. 부채보유 건별 담보형태, 부채용도	69
그림 Ⅳ-7. 연체 경험(3달/회 이상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날짜를 지나친 경험)	71
그림 Ⅳ-8. 3달/회 이상 연체 경험	72
그림 Ⅳ-9. 향후 부채계획 유무	74
그림 Ⅳ-10. 재무관리 현황	76
그림 Ⅳ-11. 재무관리 계획	77

그림 IV-12. 금융관련 정보 습득 경로	77
그림 IV-13. 재무/금융교육 및 상담 경험	79
그림 IV-14.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중 이용한 제도	80
그림 IV-15. 가구 일반 현황	82
그림 VI-1. 중앙행정기관별 청년금융사업 현황	126
그림 VI-2. 중앙행정기관 청년금융사업 기능	127
그림 VI-3.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 대상 구성	129
그림 VI-4.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 대상별 기능	130
그림 VI-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청년금융사업 현황	132
그림 VI-6.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금융사업 현황	132
그림 VI-7. 지방자치단체 청년금융사업 대상 현황	134
그림 VI-8. 민간 청년금융사업 현황(수행주체)	137
그림 VI-9. 민간 청년금융사업 현황(기능)	137
그림 VII-1.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	143
그림 VII-2. 청년 전세사기 관련 기사 추이	148
그림 VII-3. 지역 기반 청년 금융안전망 사례(광주청년드림은행)	150

○————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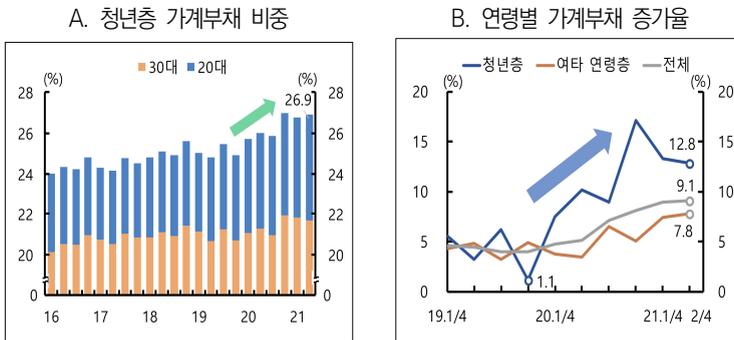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자산은 안정적 삶의 기반을 형성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여건이 된다(강시은, 한창근, 2018). 부채는 고소득자 및 고신용자의 경우 자산 증식을 위해 미래 자산을 끌어당겨 미리 쓰는 음(-)의 자산으로도 불린다. 부채는 자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 수단으로도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 전체 가계부채의 2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1의 A 참조).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권 및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그림 I-1의 B 참조).



* 자료: 한국은행, (2021.9).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 주: A 잔액 기준, 원자료는 한국은행(가계부채DB)임.
B 전년동기대비, 원자료는 한국은행(가계부채DB)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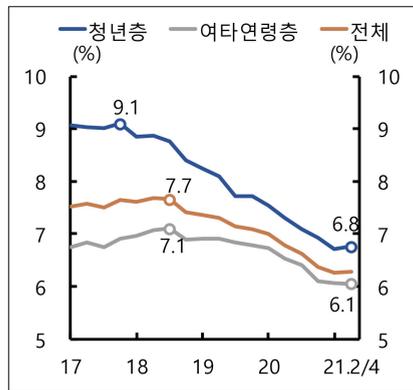
그림 I-1. 청년층 가계부채 주요 현황

1) 1장은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을 통한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이외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흐름에 따라 청년층의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중에서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3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는 금융 취약자 비중이 2018년 9.1%에서 2021년 2분기 6.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그림 1-2 참조).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의 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현대 청년이 자산가격 조정위험에 취약할 수 있으며 부채부담으로 인한 처분가능소득 유동성 제약 등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김미루(2023)는 팬데믹 이후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중장년과 고령자 집단에 비해 생애주기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금과 이자 부담 증가는 특히 신용이 낮고 채무액이 많은 취약차주 청년의 소비를 크게 감소시켰다.

과중한 채무는 사회적 배제와 박탈, 정신건강 등 부정적 생애 경험을 양산한다(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2017; 박호준, 박정민, 2019; 박호준, 박정민, 2021; 탁장한, 박정민, 2017). 특히 청년의 과중채무는 양질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을 어렵게 하거나(이용호, 2021; 이용호, 이원익, 2020) 혼인이행을 지연하는 등(배호중, 한창근, 2018; 백아름, 노혜진, 박정민, 2022) 중장년기와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상흔효과를 보인다(김은정,



* 원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DB

* 출처: 한국은행(2021.9).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 주: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대출 3건 이상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자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임. 청년층(여타) 전체 차주 수 대비 취약차주 수 비중임.

그림 1-2. 청년층 취약차주 비중



* 출처: 빅데이터에서 '청년' 및 '부채, 채무, 금융, 빚, 영끌, 부동산'을 키워드로 2023년 1월 17일 검색한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주: 비중은 해당연도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 건 수 대비 '부채, 채무, 금융, 빚, 영끌, 부동산'을 키워드로 포함하는 기사의 비중임.

그림 1-3. 청년 금융 관련 언론기사 추이

2022; 노혜진, 백아름, 권하늬, 박정민, 2022).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 청년의 부채 등 금융 관련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있다(박수민, 2022). 청년의 금융 관련 언론기사의 절대적 양뿐 아니라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언론기사 중 금융 관련 언론기사의 비중도 늘어나 현세대 청년의 삶에서 금융생활 실태 및 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실증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다(그림 1-3 참조).

그런데 현세대 청년의 금융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된 정의뿐 아니라 부채 수준, 종류, 질과 청년 당사자의 인식 등 종합적 현황 파악과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금융 취약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정의를 활용하고 있다(김성아, 노현주 외, 2021; 김성아 외, 2023; 노혜진 외, 2022; 백아름 외, 2022). 첫째, 과중채무는 소득 등 상환 능력 대비 채무액의 부담이다. 둘째, 체납은 연체를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셋째, 다중채무는 일정 개수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넷째, 채무의 질은 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내 금융권 이외 채무 여부이다. 다섯째, 신용 수준은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 등 재화나 서비스 등 구입을 위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채무 이행능력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부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부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발표자료에서는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을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의 특성을 일방향으로 파악하는 데에 그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금융 취약 실체에 대응해 정합적 정책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생산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 금융 취약 실태를 실증 분석하고,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청년 금융 실태를 파악하며, 셋째, 현행 청년 대상 금융정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세대 청년 금융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목적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애주기 관점에서 소득 활동을 시작하여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년기 금융 생활의 이론적, 실천적 의의 및 요인,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를 탐색한다. 두 번째로 현세대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수행한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 범위 내에서 청년 개인 및 가구 단위 재산 및 부채 종류 및 수준, 청년 개인 및 가구 단위 부채 용도 및 운용 상환 계획, 청년 개인 및 가구 특성별 부채부담 수준 등을 파악한다. 세 번째로 현세대 청년의 부채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한다. 청년들이 가지는 부채 종류 및 수준,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이용 현황, 개인 생애 재무 계획, 채무조정 이용 경험, 재무관리 교육 경험 및 지식 수준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금융 취약성 등을 탐색한다. 또한 양적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의 금융생활 경험을 청취하고,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 분석 및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다. 청년의 금융생활 및 금융취약 실태와 정책 간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발견 및 지원하고 정책소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청년 금융 생활의 의의와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청년 금융 취약 실태 분석틀을 구상하며, 청년금융정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청년 금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2차 자료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금융생

활 및 금융취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부채를 가진 청년과 부채를 가지지 않은 청년 최소 2,000명을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온라인조사를 수행하며, 표집은 전문조사업체의 온라인 패널과 청년친화적 정책전달체계를 활용한다. 그리고 금융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종사자 및 청년 당사자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청년의 경험을 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문회의 및 정책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 금융취약청년의 개념
- 2. 선행연구 동향
- 3. 이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구조

1. 금융취약청년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³⁾ ‘금융’은 “금전을 융통하는 일”로서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말한다. ‘대차’는 “꾸어 주거나 꾸어 오는” 행위이다. 행복한 양질의 삶은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소득 및 지출의 유량(flow)과 자산 및 부채 저장(stock)의 경제력으로 구성된다. 유량은 말 그대로 시간에 따른 흐름으로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측정하고, 저장은 축적되어 특정 시점에 측정할 수 있다. 금전을 꾸어주거나 꾸어오는 일과 그 행위의 금융생활은 저장의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다.

금융생활을 포함하여 소득과 지출 행위, 자산과 부채를 형성하는 경제적 활동은 한 사람이 태어나 사망하기까지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자인 모딜리아니(F. Modigliani)는 생애주기 가설로 전 생애를 아우르는 경제적 행위를 설명한다.⁴⁾ 여기에 따르면, 한 사람의 지출 수준은 전 생애 동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기에 시작하여, 노년기에 접어들 무렵 은퇴한다.

그림 II-1과 같이, 소득 수준이 평균적인 소비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활동기에는 소득의 초과분(S_1)을 자산으로 축적한다. 소득 수준이 항상소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이전되고 ($-S_2$),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축적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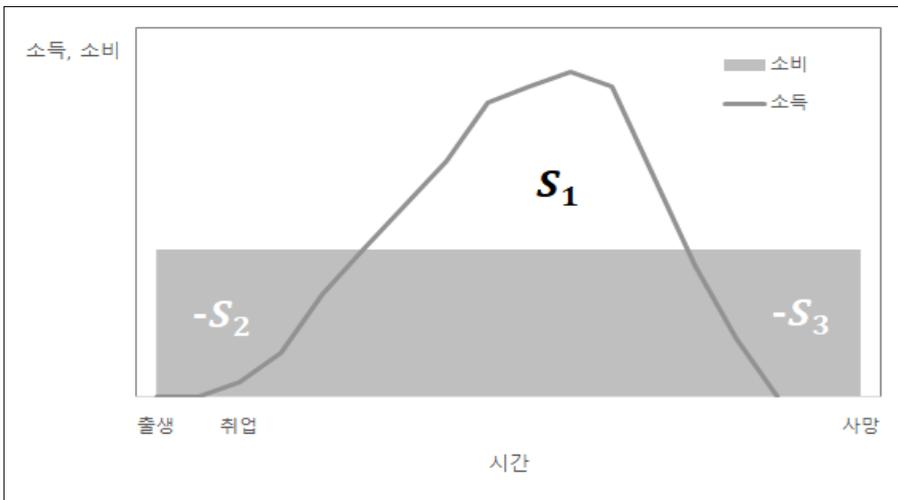
2) 2장은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금융’ 및 ‘대차’를 키워드로 2023년 4월 25일 검색한 결과이다.

4) Modigliani, 1986(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재인용).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장 제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S_3$). 물론 이때 사회보장기여금 또한 축적한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이전된다.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한 사람은 전 생애 동안 자산 축적분(S_1)을 공사적이전 및 노후소득원 등으로 유동화하여 모두 소진한다 ($S_1 = S_2 + S_3$).

취창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초기는 자신의 할 일과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이므로 소득 수준이 숙련된 중장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거주주택 임대 및 매매 등 실물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하거나 고등교육 등 인적 자산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미래 자산을 부채의 형태로 융통할 수 있다. 이를 음(-)의 자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금융은 자산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래 자산을 신용이나 담보를 바탕으로 융통하는 부채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 출처: 김성아, 이태진 외(2021). p.26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II-1.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

금융을 활용해 축적하고 활용하는 자산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 강시온과 한창근(2018)은 자산이 유인할 수 있는 다차원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미래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인적 자본을 더욱 발달시킨다. 넷째, 기술 및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소득 상실이나 파산 등의 실패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여섯째,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곱째, 사회참여를 독려하며, 여덟째, 다음 세대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고(최효진, 2021), 청년이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안정감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 혹은 기회가 우울감을 감소시키기도 한다(강시온, 한창근, 2018). 소득 수준이 향상소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초기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 자체가 가지는 영향은 그래서 사실상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런데 부채가 미래 자산을, 혹은 미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할 경우 금융생활에서의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문헌에서는 채무부담에 주목하여 과중채무(over-indebtednes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국내 문헌과 종합하면 역량 대비 과중한 채무, 혹은 금융취약성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소득 등 상환 능력 대비 채무액의 규모가 과중할 경우, 과중채무라고 볼 수 있다. 과중채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가구원 1인당 총 채무액, 순부채의 비율,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 소득 대비 부채액의 비율, 자산 대비 부채액의 비율 등이 있다(Betti, Dourmashkin, Rossi, & Ping Yin, 2007). d'Alessio와 Iezzi(2013)는 이탈리아 은행에서 상환액이 월 총소득의 30% 혹은 50%를 초과하거나, 무담보 상환액이 월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거나, 상환액을 납부한 이후 월소득 잔액이 빈곤선 미만일 경우 과중채무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지표에 의해 과중채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선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둘째, 체납은 일정 기간 이상 연체를 지속한 경험의 여부를 말한다(김성숙, 이윤, 이재민, 홍연금, 2019; 유연주, 김소연, 여정성, 2021; 이종희, 2020). 연체, 혹은 체납은 해외 문헌에서 금융취약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다(Betti et al., 2007; d'Alessio & Iezzi, 2013; Disney et al., 2008). 유럽연합(EU)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는 유럽 내 국가 간 금융취약계층 규모와 실태 비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부채, 전화 등 생활요금 등의 금융 행위 중 2건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금융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다(Eurofound, 2020).

셋째, 다중채무는 일정 개수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금융 취약자는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3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한국은행, 2021.9). 이탈리아 은행 등 해외 문헌에서 나타나는 금융취약계

층을 측정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Betti et al., 2007; d'Alessio & Iezzi, 2013; Disney et al., 2008).

넷째, 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내 금융권 이외 채무 여부이다(박수민, 2022). 불법사금융은 휴대폰 개통 후 유심칩 제공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휴대폰요금을 납부하거나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는 등의 내구제 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휴대폰소액결제 등으로 상품권 구입을 유도하여 실제 구입액보다 적은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초고금리 대출과 동일한 피해를 유발하는 상품권깡,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사례 등 다각화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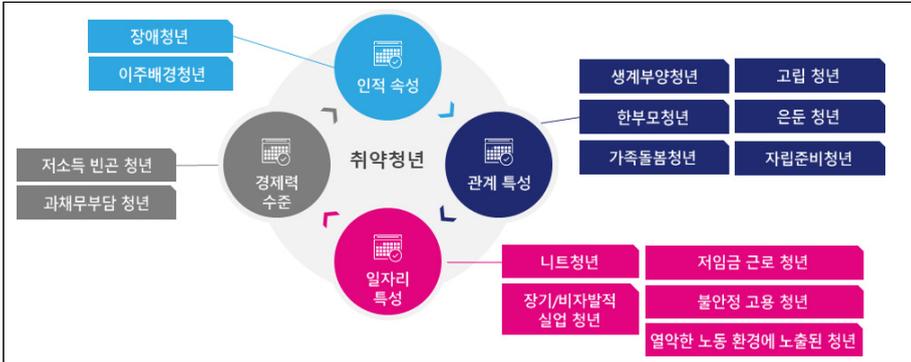
다섯째, 신용 수준은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 등 재화나 서비스 등 구입을 위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채무 이행능력을 반영한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금융 취약자의 요건 중 신용점수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한국은행, 2021.9).

여섯째,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책 지원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노혜진 외, 2022; 백아름 외, 2022; 신규수, 2019; 탁장한, 박정민, 2017). Dobbie와 Song(2020)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 MMI(Money Management International)의 훈련된 전문 상담사에 의한 채무상담프로그램 참여자를 금융취약문제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부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금융취약계층의 규모와 실태를 탐색하려는 해외 문헌에서 다수 확인되는데, '수지타산을 맞추며 근근히 살아가기(makes ends meet)' 매우 어렵거나(with great difficulty) 어려운(with difficulty) 경우 역량 대비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Betti et al., 2007, Disney et al., 2008; d'Alessio & Iezzi, 2013; Eurofound, 2020). 김성아 외(2023)는 금융취약 청년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중하거나 불법사금융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한 청년 중에서도 부채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고려하였다.

금융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된 방식은 없다. 오히려 금융취약성의 다차원적 구조를 고려하면 복수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Alessio & Iezzi, 2013; Eurofound, 2020).

청년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이행기를 겪고 있어, 금융취약성이 가지는 의미가 상이할



* 출처: 김성아, 노현주 외(2023)에서 김성아 외(2021). pp.47-66의 그림을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그림임.

그림 II-2.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수 있다. 김성아, 노현주 외(2021)는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청년의 유형을 그림 II-2와 같이 분류하였다. 경제력 수준에 의한 취약청년의 유형 중에 과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취약청년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 취약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취약청년은 김성아, 노현주 외(2021)에 의한 다른 유형의 취약청년과 배타적이지 않다. 김성아 외(2023)에 따르면, 김성아, 노현주 외(2021)의 취약청년 유형에 따른 다차원적인 취약성은 청년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소액 생계비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검색하고, 이 과정에서 사채⁵⁾와 같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도 한다(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2021.7.21). 고립·은둔 청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카드 리볼빙... 그냥 다 빚”을 지면서 “그냥 버티고만 있기”도 하다(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153; 피एम아이, 2022:191). 가족의 보호체계로부터 벗어난 소위 가정 밖 초기 청년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지식 없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빚이 불어나기도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하기도 한다(김은정, 2022).

최근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불법사금융⁶⁾에 노출되는 청년의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할부 또는 렌탈해 물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5) 사채나 대부업체 등의 여신 전문기관에 의한 불법사금융은 「이자제한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금융을 말한다.

6) 내구제대출이나 직업대출은 공식적인 행정 용어나 합의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술 용어는 아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신종 용어이므로 이용하는 데에 주의를 요한다.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사금융을 일컫는 용어이다(박수민, 2022:24). 신용이나 담보와 무관하게 소액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광고하고, 생계비가 필요하지만 가족 등 의논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불안전하고 금융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소위 내구제대출을 통해 변종 금융 사기에 연루되거나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유인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작업대출도 등장했다. 취업의 조건으로 대출을 내건 형태도 있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특히 취약한 편이다.

실제로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자료의 이용가능성으로 인한 15개 취약 유형⁷⁾ 중 1개 이상의 취약성을 가진 청년이 전체의 46.7%이고, 2개 이상의 다중 취약성을 가진 청년은 15.6%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과채무부담의 취약성이 중복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김성아 외, 2023).

종합하면, 금융취약청년은 유량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특히 부채의 측면에서 취약한 청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취약청년은 다차원적인 취약성과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어떤 유형으로든 취약한 청년들이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이행기 과업을 수행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이 강화될 확률이 높다.

2. 선행연구 동향

부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 취약성과 청년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우선 계층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박상현과 김태일(2014)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계량 분석하여 고소득층이 금융부채를 지는 주된 이유가 자산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 반면, 저소득층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소비지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거주주택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유연주 외(2021)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머신러닝 방법으로 분석하여 고소득층이 신용카드 관련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비 목적 대출인 경우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7) 인적 속성에 의한 ①장애청년, ②활동제한청년, ③이주배경청년, ④다문화가족자녀청년, 관계 특성에 의한 ⑤한부모가족청년, ⑥가족돌봄청년, ⑦은둔청년, ⑧자립준비청년, 일자리 특성에 의한 ⑨불안정 고용 청년, ⑩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 ⑪비자발적 실업 청년, ⑫구직단념청년(니트), 경제력 수준에 의한 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청년, ⑭과채무부담청년, ⑮신용불량청년임(김성아 외, 2023)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액 수준과 거주형태, 신용카드 관련 대출인 경우, 중간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액 수준과 거주형태와 신용카드 관련 대출인 경우뿐 아니라 또 다른 채무 상환을 위한 대출인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경우, 소득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소득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연체행동이 강화되는 현상을 확인한 김성숙 외(201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머신러닝 방법으로 분석하여 중장년의 연체 가능성에 주목한 이종희(2020)의 연구결과에서는 소득 대비 부채 총액이 과도한 과중채무자이거나 비자가 거주자, 사업 용도의 대출을 구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지지체계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특히 청년기에 가족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핍된 경우 금융 취약성에 취약하다. 이러한 실태를 백아름 등(2022)은 과중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청년들을 면담한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했는데,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박정민, 이기원, 하은솔(2018)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녀인 청년이 채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가족의 청년의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이전받을 수 있는 부모나 가족 등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핍이 과채무부담 등의 금융 취약성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성인 면담 연구결과(노혜진 외, 2022)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과중채무자 209명을 면접조사한 서베이자료, 그리고 한국복지패널을 비교 분석한 탁장한과 박정민(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사적인 지지체계가 결핍된 이들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 교육이나 상담 등 금융 취약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공정책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박수민, 2022; 장동호, 성열서, 2017).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자체가 금융취약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기도 한다. 불법사금융을 구별할 수 있고 필요시 이자율이 낮은 채무를 유지하는 등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경우 과중채무가 심화된(Gathergood, 2012; Ponce, Seira, & Zamarripa, 2017).

둘째, 금융 취약성으로 인한 영향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동반하는 부채는 가구

의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켜 실질적인 경제적 웰빙 수준을 저해하며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원승연, 2015). 특히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박상현, 김태일, 2014).

과중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된 금융취약계층은 경제적 생활 수준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당장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의 질이 낮고 주거가 열악하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모두 해치게 되는 등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상당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특히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준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현재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이 고립이 심화되는 사회적 관계 차원의 결핍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기도 한다(노혜진 외, 2022; 탁장한, 박정민, 2017; Sweet, Nandi, Adam, & McDade, 2013).

독립된 삶을 준비하는 청년의 부채는 청년 당사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이용호, 2021; 이용호, 신혜형, 이원익, 2022; 이용호, 이원익, 2020; 이용호, 이원익, 2022). 특히 과중채무나 불법사금융 등 청년의 금융 취약성은 심리적 불안정을 유발하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다치는 대로 계속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김은정, 2022). 부채로 인한 불안정성이 청년의 고용과 삶의 불안정성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노혜진 외, 2022; 박나리, 김교성, 2021). 그러다보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박탈된다. 청년기 첫 일자리가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잇는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박성재, 2005), 무슨 일이든 일단 하도록 내몰리는 상황은 부채로 인한 금융 취약성이 전 생애에 잔존할 가능성을 높인다. 일을 하고 내 집을 사는 등 자산을 모으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보통의 삶을 바라지만(노혜진 외, 2022; 김성아 외, 2023), 금융취약성은 삶을 고되게 한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과중채무의 고비는 발전의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김은정, 2022; 백아름 외, 2022).

부채 자체는 중립적인 상태이고, 자산을 형성하고 확장하도록 관리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강시은, 한창근, 2018; 박상현, 김태일, 2014). 하지만 채무 금액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거나 원금 혹은 이자 상환을 연체하거나 신용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등의 상황은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저해한다(Gutiérrez-Nieto, Serrano-Cinca, & CuestaGonzález, 2017). 그런데 금융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과 그로 인한 영향이 독립적인 관계일 수는 없다. 취약한 요인으로 인해 금융 취약성이 발현되고, 그로

인한 영향이 취약한 요인을 강화할 수 있다.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청년기의 금융 취약성은 생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존속하는 상흔효과(scarring effect)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당장의 채무 변제는 일시적으로 금융취약 문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과 노동시장 성과를 증진시킨다(Dobbie & Song, 2020).

그러므로 금융취약청년의 금융 취약성을 보완하여 보통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금융 취약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혹은 금융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 등 사적 지지체계가 결핍된 경우 금융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년들이 서슴없이 금융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청년친화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3. 이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구조

이 연구는 청년의 금융 취약 실체에 대응해 정합적 정책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취약청년의 정책소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유관 정책 공급 현황과의 정합성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금융취약청년 혹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2차 자료를 이용하거나(박나리, 김교성, 2021; 박정민 외, 2018; 이용호, 2021; 이용호, 이원익, 2020; 이용호, 이원익, 2022; 이용호 외, 2022)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거나(장동호, 2018) 청년 대상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김은정, 2022, 백아름 외, 2022). 김성아 외(2023)의 연구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2차 자료 분석과 심층면접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채 관련 청년의 공공정책 수요 측면만을 파악했다는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장동호와 성열서(2017)의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로서 청년 부채에 대한 이론과 국내외의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차 자료 분석과 실태조사, 그리고 부채를 가진 청년과 현장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병행하고, 광주광역시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광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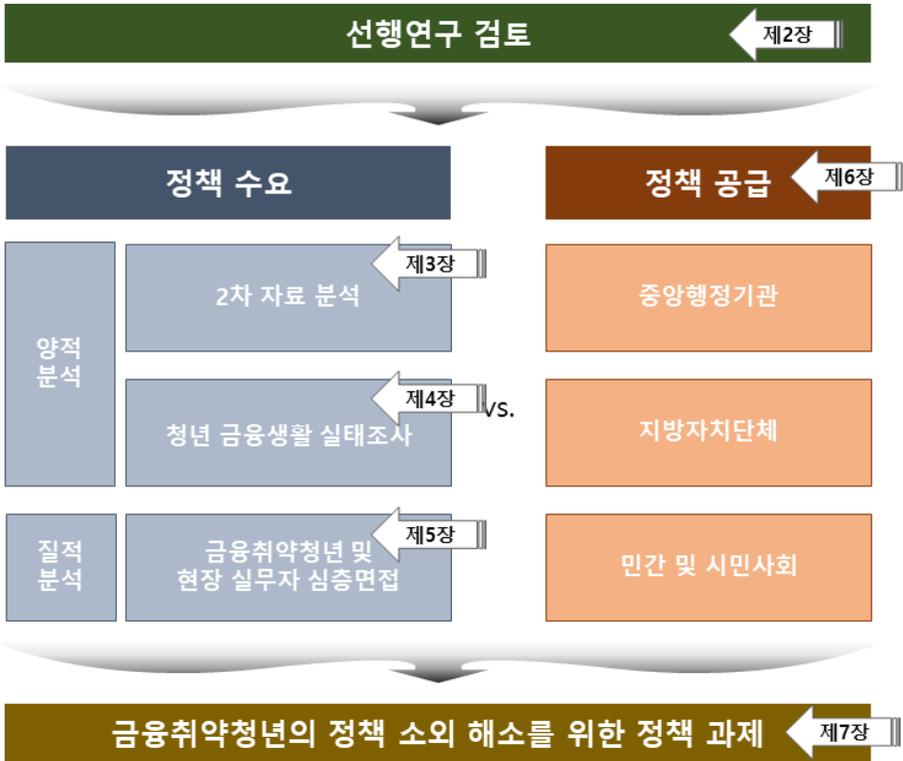


그림 II-3. 연구 구조

청년의 부채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공급 현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자 했지만, 지리적 범위가 광역자치단체에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2장에서 논의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전국을 지리적 범위로 한다. 금융취약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분석으로서, 제3장에서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4장에서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청년의 존재와 삶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양적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제5장에서 금융취약청년 및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 및 분석방법은 개별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시민사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금융취약청년의 정책 수요와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금융정책의 공급 현황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금융취약청년의 정책소외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지리적 범위와 정책 수요를 정책 공급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에서 이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3장 청년 금융생활 실태

2차 자료 분석

- 1.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 2. 청년 소득, 자산, 부채 현황
- 3. 청년 자산 및 부채 심층분석
- 4. 청년 부채 운용 특성
- 5. 소결

1.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가계 단위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하는 원자료이다. 이 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는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된다⁹⁾. 가구주는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주와 상관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같은 처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구성원'과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 '학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미혼 자녀' 등을 포함한다. '현역군인,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한 가족',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에 (12개월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가족', '함께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가사사용인, 하숙생 등 동거인'은 조사 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등록센서스에서 아파트 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인 조사구 내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한다.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활용해 추출한 445개 조사구의 6,443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부적격 조사구에 대해서는 대체 조사구를 3회 이내 대체하여 표집오차를 통제한다. 최종 4,545가구 조사완료율 목표를 조사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표집오차를 가중치로 보완하여 가구 단위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다(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 2021.8).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금융부문과 복지부문으

8) 3장은 김성아 부연구위원, 강예은 연구원이 집필하였다.

9)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p.4

표 III-1. 가계금융복지조사 작성방법

작성 방법	조사연도 (소득·지출 기준연도)									
	'12년 ('11년)	'13년 ('12년)	'14년 ('13년)	'15년 ('14년)	'16년 ('15년)	'17년 ('16년)	'18년 ('17년)	'19년 ('18년)	'20년 ('19년)	
조사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7년)				
행정자료 보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이후)				

* 출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공공용)"

로 분리하여 수행하였다.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문항은 공통 문항을 활용하되, 금융부문은 부채상환능력을, 복지부문은 노후생활을 부가 질문으로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는 조사표를 통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7년부터는 서베이 결과를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있다(표 III-1). 다만 2017년은 전년과의 비교를 위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를 사용한다. 성별과 생년월일, 주소, 성명 등 개인고유정보를 활용한 식별키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한다. 활용하는 행정자료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근로·자녀장려금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 사회수혜금 급여지급액,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 연금공단의 연금 소득 및 기여금 자료 등이다.

소득과 지출은 조사시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유량(flow)을 파악하고,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 3월 31일 기준의 저장(stock)을 파악한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및 사적 이전지출,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한다. 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등 소비지출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사적 이전지출의 비소비지출을 조사한다. 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저축 등 금융자산을 조사하며, 부채는 담보대출 등 금융부채를 조사한다. 소득과 자산, 부채는 가구원 개인 단위 정보를 조사하여 가구 단위로 합산하고, 지출은 가구가 공유하는 총 생활비를 조사한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용 서비스에서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모두 가구 단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원격접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 개인의 금융생활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개인 단위 정보를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단위 정보는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구 가중치를 이용해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며, 개인 단위 정보는 가구 가중치에 가구규모를 곱하여 산출한 개인 가중치를 이용한다. 개인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UN(2011) 등에서 합의해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 LIS) 등 가계 자료 분석 시 통용되는 것이다¹⁰). 분석 과정에서 분석 내용과 자료의 구조에 따라 가구 가중치 혹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가구 단위 혹은 개인 단위 분석 결과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세대 청년의 금융취약성과 정책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판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시도한다.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개인 단위 분석을 수행한다. 가구 단위에서 소득 혹은 자산을 공유하지만, 여기에서는 '청년'의 금융취약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단위 실태와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청년 세대 금융생활 실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채를 이용하는 행태는 생애주기에 따른 일련의 과정, 즉 연령 효과(age-effect)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채를 중심으로 보는 '청년기' 금융취약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 즉 생애 과정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중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한 소득, 자산, 부채를 보유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세대 청년의 특이성을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2년 자료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다만, 2022년 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반면, 2012년 자료는 조사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료 작성 방법에 따른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 표는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자료의 연령집단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미성년기인 18세 이하는 제외하였다. 2022년 기준 조사된 가구원, 즉 개인은 43,781명이

10) 룩셈부르크소득조사. <https://www.lisdatacenter.org/data-access/key-figures/methods/>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다. 그 중에서 가중치를 적용한 청년의 비율은 19~24세 9.8%, 25~29세 7.6%, 30~34세 9.4%로 26.8%를 점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전체 35,907명 중에서 19~24세 7.6%, 25~29세 6.8%, 30~34세 6.7%로 총 21.1% 수준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응답자 집단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집단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년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유효표본을 보면, 2022년 19~24세 청년이 4,330명, 25~29세 청년이 3,276명, 30~34세 청년이 3,982명으로 연령집단 및 세부 집단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표 III-2).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년의 금융취약성, 특히 부채 운용에서 드러나는 행태는 개인 단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부채를 지고 있다면, 부채의 규모가 1개 이상일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이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각각의 건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청년의 부채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라기보다 부채 건이 된다.

표 III-2. 분석자료의 연령집단 분포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12년	
	유효표본 (가중치 미적용)	비율 (가중치 적용)	유효표본 (가중치 미적용)	비율 (가중치 적용)
19~24세	4,330	(9.8)	2,538	(7.6)
25~29세	3,276	(7.6)	2,153	(6.8)
30~34세	3,982	(9.4)	1,937	(6.7)
35~39세	4,294	(10.1)	2,283	(8.6)
40~49세	9,497	(21.6)	6,048	(19.2)
50~59세	8,136	(18.4)	6,852	(20.1)
60~64세	2,717	(6.2)	3,889	(9.7)
65~74세	4,635	(10.4)	5,699	(12.1)
75세 이상	2,914	(6.5)	4,508	(9.2)
전체	43,781	(100.0)	35,907	(1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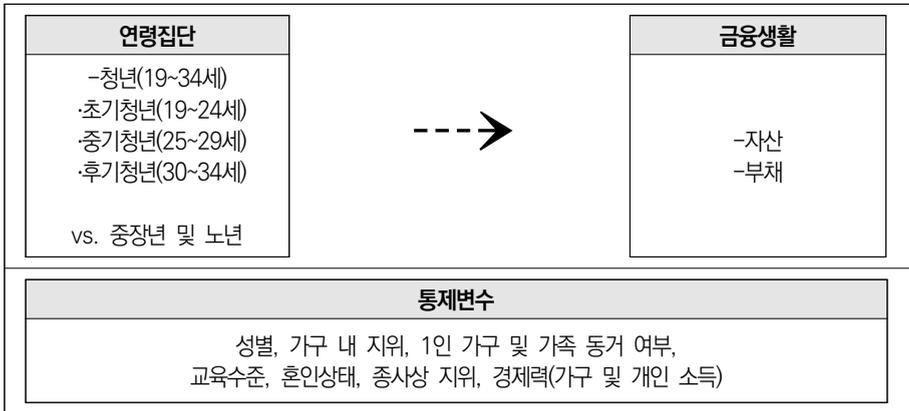


그림 Ⅲ-1.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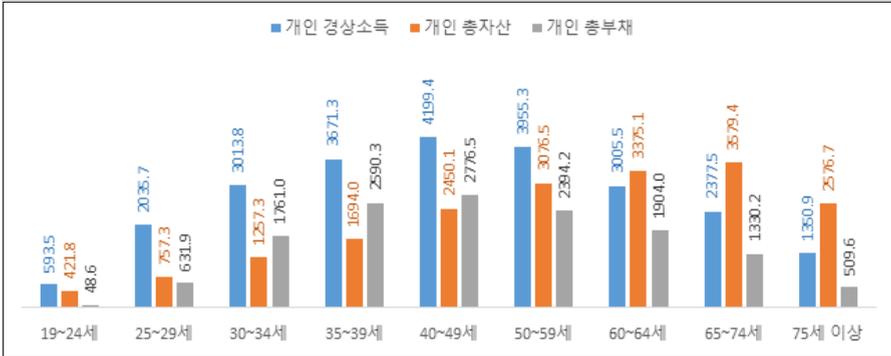
2) 분석모형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의 금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그림 Ⅲ-1과 같이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우선 전 생애에서 청년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성년기 이후 19~34세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중장년 및 노년기와 비교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금융생활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가구 내 지위, 1인 가구 및 가족 동거 여부,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가구 및 개인 소득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2. 청년 소득, 자산, 부채 현황

제2장에서 생애주기 가설을 통해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과 소비 운용 경향에 대한 이론을 확인했다. 항상소비수준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를 완료하는 청년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한다. 중장년기까지 숙련을 쌓아가면서 소득이 점차 증가해 항상소비수준을 초과하는 몫을 자산으로 형성하고, 중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줄어들면서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노후소득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부채를 이용한다.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하거나 자가 혹은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채를 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양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부채의

(단위: 만 원/년, 만 원)



* 출처: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 값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부채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함.

그림 III-2. 연령집단별 개인 소득, 자산, 부채(2022년)

규모가 개인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거나 악성부채를 이용하는 등의 경우 금융취약성에 노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 장에서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인 경상소득은 50대에 최고점을 보이는 역U자를 보인다. 자산은 점차 증가해 60대에 최고점을 보이며, 부채는 30대부터 형성하기 시작해 40대에 최고점을 보이고 점차 상환한다(그림 III-2). 청년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모달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년기에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미래 자산을 부채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림으로 살펴본 연령집단별 개인 소득, 자산, 부채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면 표 III-3과 같다.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2022년 소득, 자산, 부채 수준은 2012년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40대에 개인 경상소득이 최고점을 보이는 연령집단별 소득 추이는 2022년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2012년에는 개인 총자산과 총부채는 50대에 최고점을 보이지만, 2022년에 이르러 총자산이 최고점을 보이는 연령집단이 60대로 늦춰졌다. 총부채가 최고점을 보이는 연령집단은 40대로 당겨졌다. 지난 10년 동안 부채를 이용해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생애시기가 앞당겨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총 기간은 연장되었을 수 있다.

표 III-3. 연령집단별 개인 소득, 자산, 부채

(단위: 만 원/연,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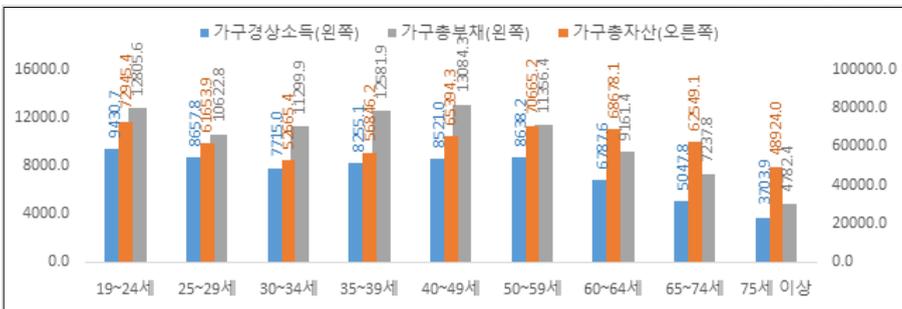
구분	2022년			2012년		
	개인 경상소득	개인 총자산	개인 총부채	개인 경상소득	개인 총자산	개인 총부채
19~24세	593.5	421.8	48.6	298.3	236.1	78.8
25~29세	2035.7	757.3	631.9	1310.7	455.9	263.2
30~34세	3013.8	1257.3	1761.0	2029.3	793.7	806.9
35~39세	3671.3	1694.0	2590.3	2437.6	1171.0	1316.2
40~49세	4199.4	2450.1	2776.5	2950.1	1745.3	1636.3
50~59세	3955.3	3076.5	2394.2	2601.2	2321.0	1792.3
60~64세	3005.5	3375.1	1904.0	1730.5	2397.9	1176.3
65~74세	2377.5	3579.4	1330.2	1059.9	2105.6	720.3
75세 이상	1350.9	2576.7	509.6	617.3	1532.5	388.3
전체	2894.6	2507.7	1706.9	1935.2	1528.2	1093.1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부채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함.

그림 III-3에서는 가구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의 연령집단별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림 III-2의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시기와 20대 청년기의 소득과 자산, 부채가 비교적 낮지 않고, 30대 초반에 이르러 감소했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한다. 원가족 등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기와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20대에는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부모 세대의 소득, 자산, 부채를 식별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개인 단위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이다.

(단위: 만 원/연, 만 원)



* 출처: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의 값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부채가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함.

그림 III-3. 연령집단별 가구 소득, 자산, 부채(2022년)

표 III-4. 연령집단별 가구 소득, 자산, 부채

(단위: 만 원/연, 만 원)

구분	2022년				2012년			
	가구 처분 가능소득	가구 경상소득	가구 총자산	가구 총부채	가구 처분 가능소득	가구 경상소득	가구 총자산	가구 총부채
19~24세	7579.3	9430.7	72945.4	12805.6	4681.5	5761.7	41935.9	8101.7
25~29세	7135.1	8657.8	61653.9	10622.8	4490.9	5475.2	40478.4	7255.0
30~34세	6349.9	7715.0	52665.4	11299.9	4085.1	4902.5	27327.8	4802.9
35~39세	6636.4	8255.1	56846.2	12581.9	4275.4	5219.6	30748.1	5825.6
40~49세	6787.5	8521.0	65394.3	13084.3	4613.2	5701.0	38193.8	7318.3
50~59세	6951.4	8638.2	70665.2	11356.4	4314.9	5305.3	46308.7	7914.6
60~64세	5648.1	6787.6	68678.1	9161.4	3194.0	3805.4	42764.2	6043.6
65~74세	4310.5	5047.8	62549.1	7237.8	2201.4	2569.2	34479.3	3958.9
75세 이상	3187.4	3703.9	48924.0	4782.4	2065.2	2452.7	27782.4	3620.4
전체	6118.3	7511.7	63643.9	10529.6	3968.5	4840.3	37673.9	6444.9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 소득은 조사시점 전년도의 값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표 III-4는 그림 III-3의 결과와 2012년 실태를 수치로 확인한 것이다. 2022년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면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초반에 가장 낮은 가구 소득과 총자산, 총부채를 보인다. 아동·청소년 시기와 20대 청년기에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을 공유하고, 독립 이후 점차 소득이 증가하고 부채와 함께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구 단위 소득과 자산, 부채로는 초기 청년의 경제력에 대한 정보가 가구 경제력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개인 단위 경제력에 주목함으로써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내구제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지출을 통해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금융생활을 드러내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가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표 III-5는 개인 단위 자산과 부채 보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20대 초반 청년의 자산 보유율은 86.6%, 20대 후반에는 92.8%, 30대 초반에는 96.1%로 점차 증가한다. 30대 후반부터 중장년기와 노년기에는 90% 이상이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20대 초반 청년의 부채 보유율은 3.6%에 그치는 수준이다. 20대 후반에는 17.8%, 30대 초반에는 33.7%로 점차

표 III-5.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부채 보유율

(단위: %)

구분	2022년		2012년	
	개인 자산 보유율	개인 부채 보유율	개인 자산 보유율	개인 부채 보유율
19~24세	86.6	3.6	83.6	9.1
25~29세	92.8	17.8	92.4	23.0
30~34세	96.1	33.7	96.5	37.7
35~39세	96.8	44.7	97.3	47.5
40~49세	97.8	48.0	97.3	48.3
50~59세	98.2	44.3	96.5	42.2
60~64세	97.9	34.6	94.7	28.7
65~74세	97.1	22.3	91.7	18.8
75세 이상	93.8	9.8	86.0	7.7
Total	96.0	32.6	93.9	33.4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자산 및 부채가 0원 이상인 경우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증가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개인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30대 후반에는 개인 부채 보유율이 44.7%로 증가하고 40대에는 거의 절반에 이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부채를 상환하여 부채 보유율은 75세 이상 후기 노인 집단에서 9.8%에 그친다. 20대 초반 청년기에 부채를 가지기 시작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 보유율이 증가해 40대에 5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은 2012년에도 확인된다.

표 III-6은 가구 및 개인 소득, 자산, 부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가구 경상소득 간 상관계수는 약 0.97로 높다. 이는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가구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값이기 때문이다. 가구 총자산은 가구 처분가능소득 및 경상소득과 상관계수 0.5 내외의 수준에서 상관성을 보인다. 가구 총부채와 가구소득의 상관계수는 0.2~0.3 정도 수준인데, 가구 총자산과의 상관계수는 0.6 정도로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간 상관계수는 0.4 정도 수준이고, 개인 자산과의 상관계수는 0.1 정도로, 개인 부채와의 상관계수는 0.1 내외로 더 낮아진다. 개인 소득과 개인 총자산, 개인 총부채 간 상관계수는 0.3 수준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확인한 가구와 개인 경제력의 모든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형성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 가구 및 개인 소득, 자산, 부채 간 상관관계

구분	가구 처분가능소득	가구 경상소득	가구 총자산	가구 총부채	개인 경상소득	개인 총자산
가구 경상소득	0.9707***	1				
가구 총자산	0.4487***	0.5335***	1			
가구 총부채	0.2261***	0.3384***	0.6048***	1		
개인 경상소득	0.4363***	0.4529***	0.2563***	0.1481***	1	
개인 총자산	0.1291***	0.1651***	0.4677***	0.2851***	0.3431***	1
개인 총부채	0.0718***	0.1266***	0.2448***	0.4124***	0.2901***	0.2825***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1)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자산 및 부채가 0원 이상인 경우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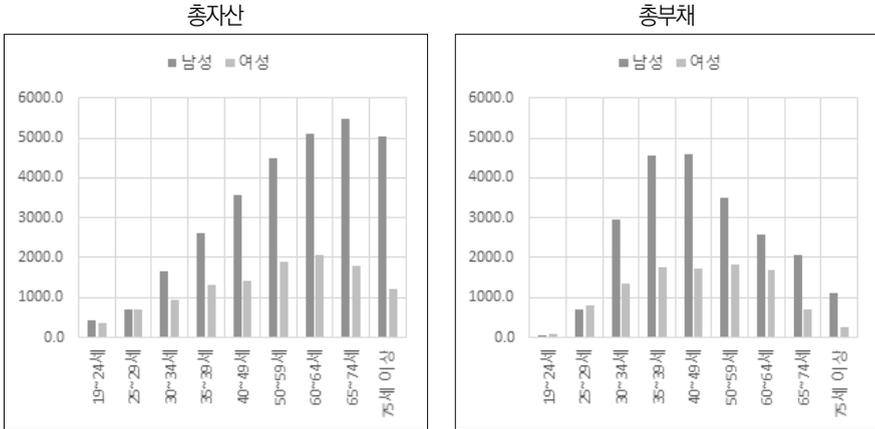
3. 청년 자산 및 부채 심층분석

여기에서는 청년 개인 자산과 부채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로 확인하는 가구 내 지위, 1인 가구 및 가족 동거 여부,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사상 지위,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의 자산 및 부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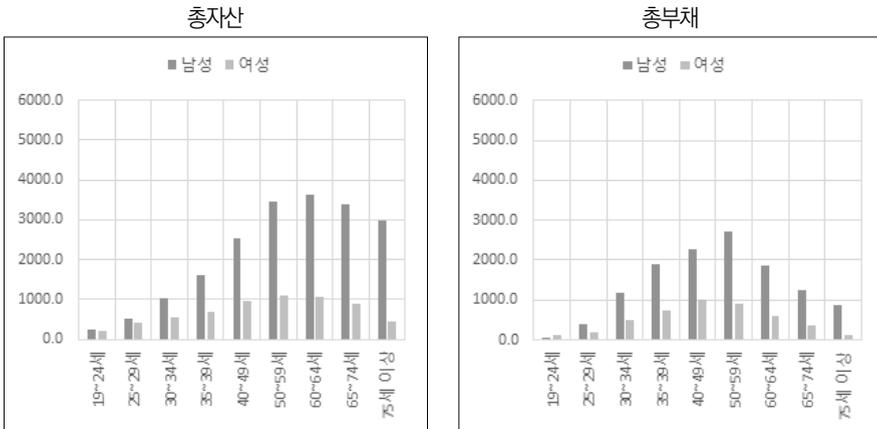
1) 청년 집단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령집단별 비교

성별에 따른 연령집단별 자산과 부채 수준은 그림 III-4와 같다. 2022년 기준 20대부터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해 30대부터 개인 자산을 축적하고, 남성은 65~74세에서, 여성은 60~64세에서 최고점을 보인다. 총부채는 20대 후반부터 이용하기 시작해서 남성은 40대에, 여성은 50대에 최고점을 보인다. 총자산과 총부채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특히 30대부터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대비 2012년에는 전반적인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중고령 집단에서 총자산과 총부채의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산 및 부채 수준이 높은 격차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2022년〉



〈2012년〉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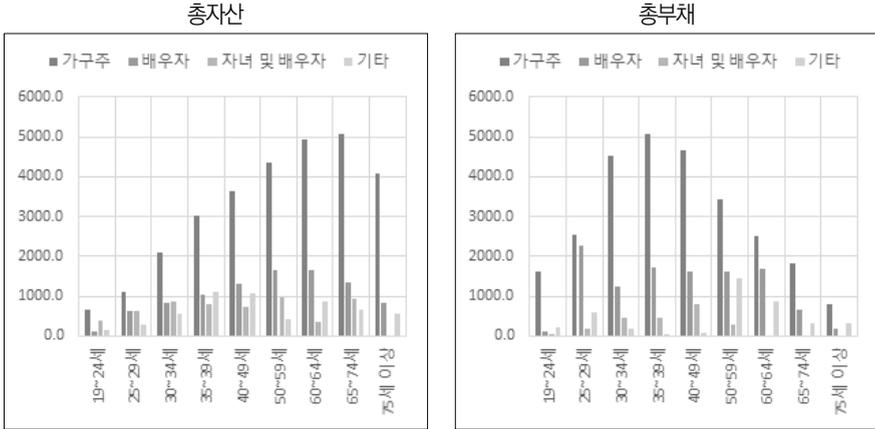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Ⅲ-4. 성별 및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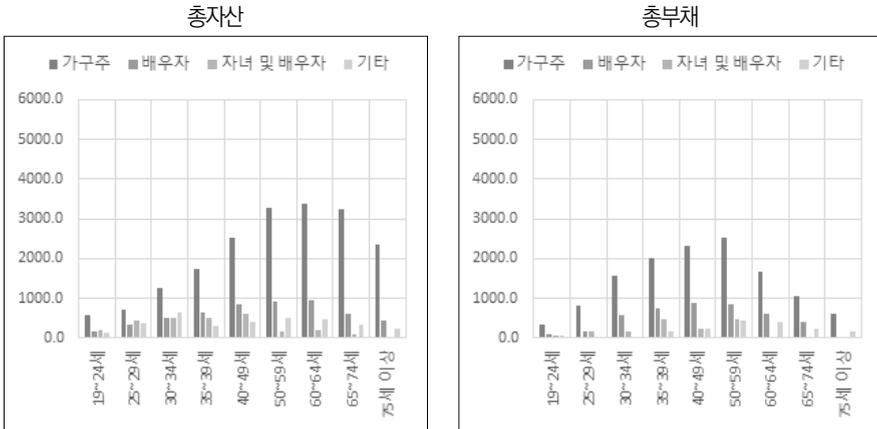
이번에는 가구주와의 관계로 확인하는 가구 내 지위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수준을 확인하였다(그림 Ⅲ-5). 2022년 기준 청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구주의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이 가장 높다. 청년이 배우자일 때, 특히 30대일 때 총부채 수준이 가구주에 이어 높은 편이다. 가구주와 가구의 자산을 형성하면서 배우자 또한 부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4세 청년이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일 때 총자산이 약간 높은

편이다. 2022년 대비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만, 2012년에도 가구 내 지위에 다른 총자산과 총부채 보유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2022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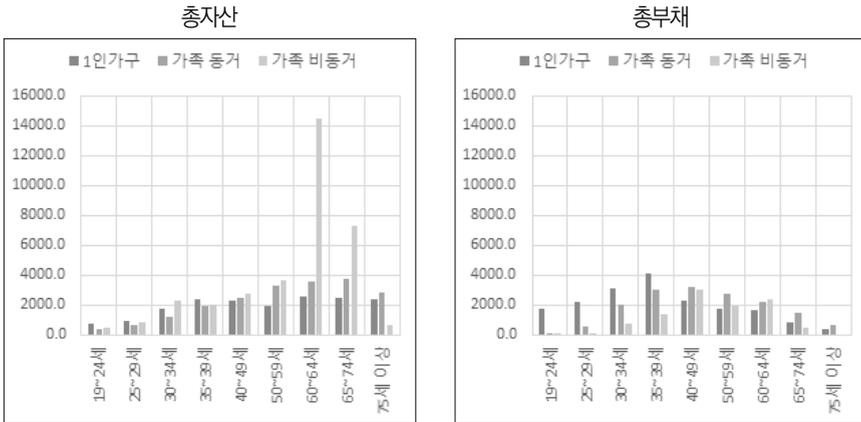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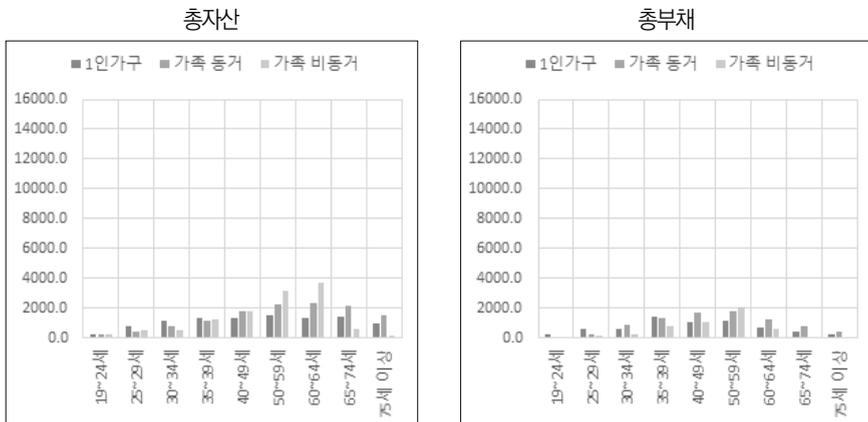
그림 Ⅲ-5. 가구주와의 관계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이번에는 1인 가구 혹은 가족과의 동거 여부에 따른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과 부채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림 Ⅲ-6에서 보듯이 2022년에는 30대까지 1인 가구의 총자산이 약간 더 높은 편이지만, 40대부터는 가족과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총자산이 더 높다. 총부채 또한 30대까지 1인 가구의 수준이 가장 높다가, 40대부터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총부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22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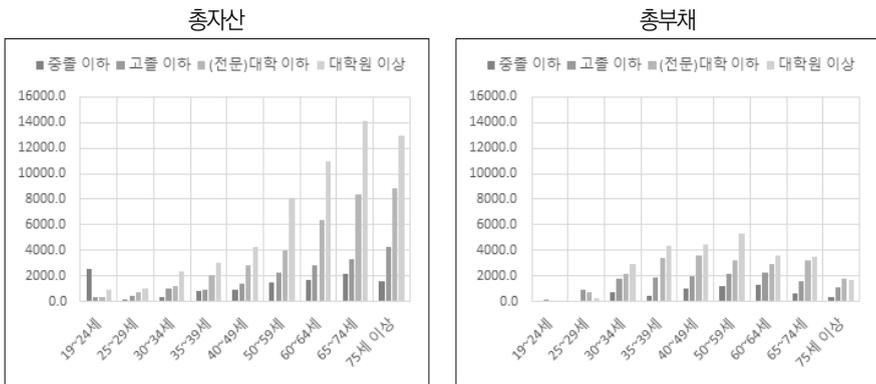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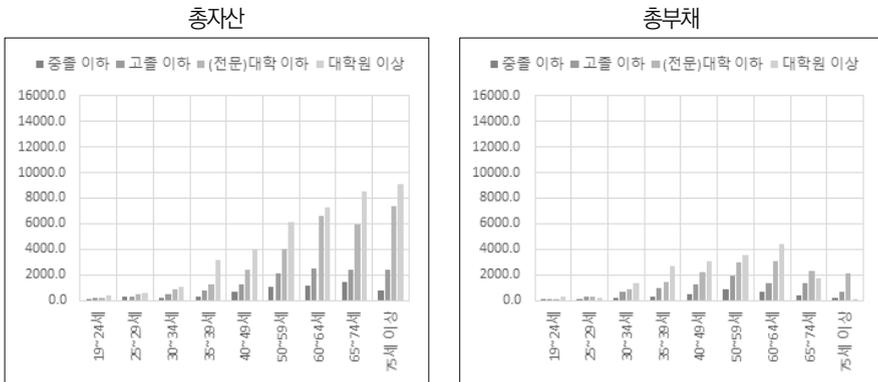
그림 Ⅲ-6. 1인 가구 및 가족과의 동거 여부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그림 III-7은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집단별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기준 모든 연령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으로 드러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즉 숙련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생산성인 소득이 높은 현상이며, 2012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22년 20대 초반 청년 중졸 이하 집단에서 총자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진 최근 중졸 이하 청년 집단 규모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이상치(outlier)일 수 있다.

〈2022년〉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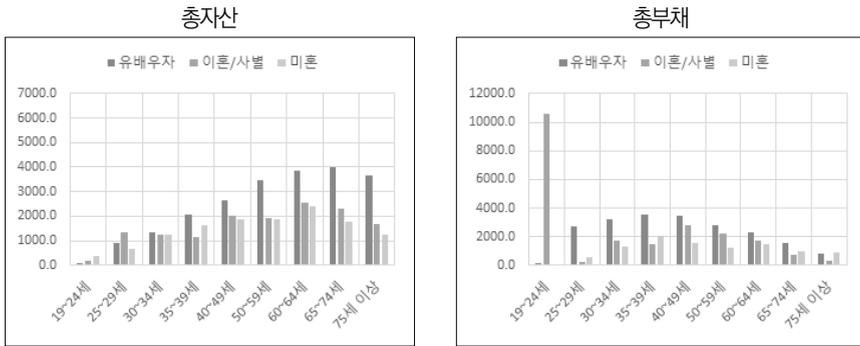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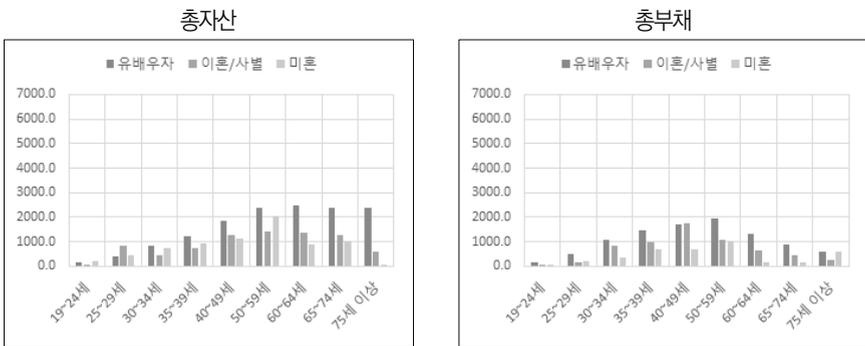
그림 III-7. 교육수준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그림 III-8은 혼인상태에 따른 연령집단별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을 도식화한 것이다. 2022년에 20대 후반 집단에서 이혼했거나 사별한 집단의 총자산이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연령집단에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 총자산 또한 높게 나타난다. 20대 후반을 제외한 30대까지는 미혼 집단의 총자산이 이혼했거나 사별한 집단의 총자산보다 약간 더 높는데, 40대부터는 두 집단 간 총자산 수준의 경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총부채 또한 20대 초반 집단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다. 청년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부채 수준이 총자산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자금 및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일 가능성이 있다. 2022년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20대 초반은 혼인율이 낮고, 특히 결혼 후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례가 적기

〈2022년〉



〈2012년〉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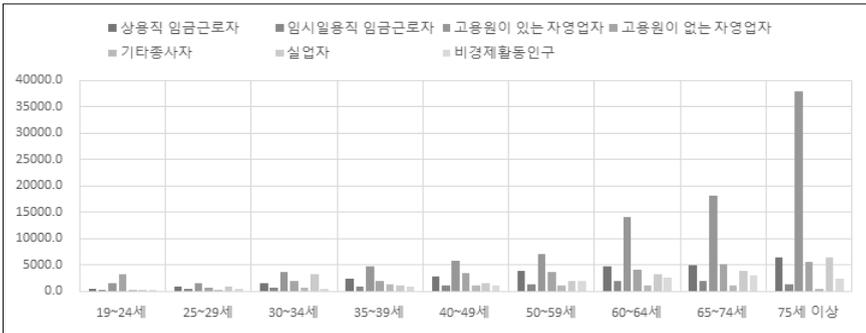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III-8. 혼인상태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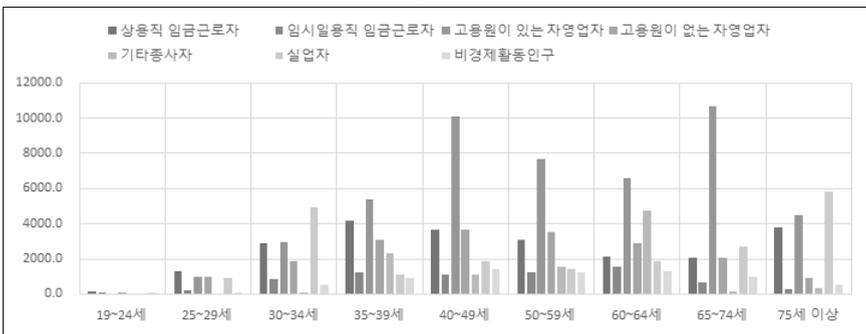
때문에 이상치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청년 집단의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의 차이는 2012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번에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연령집단별 개인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을 확인하였다. 2022년 기준 모든 연령집단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총자산이 가장 많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총자산은 그림 III-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고령층의 총자산이 가장 많은 역U자 경향과 상이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영업자는 은퇴하지 않고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자산을 노후소득원으로 이용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축적할 개연성이 높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외에는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함께 역시 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총자산이 상대적으로 높다. 총부채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준이 가장 높다. 자산이 많은만큼 부채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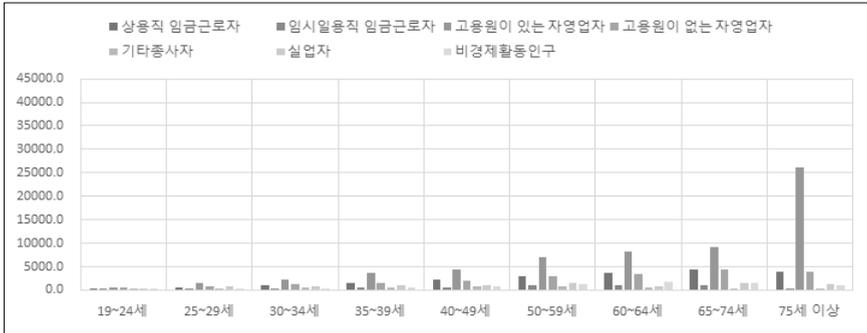


총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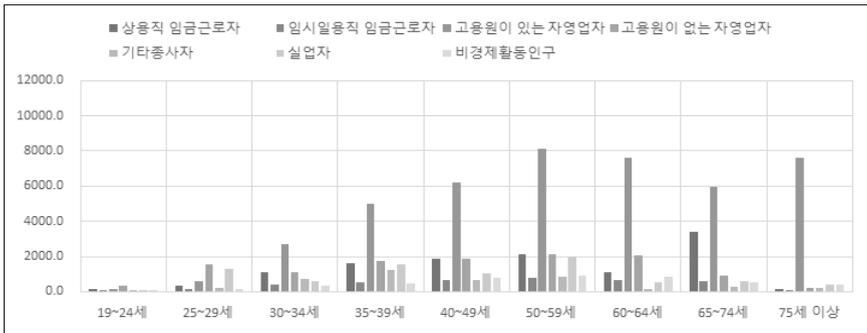


〈2012년〉

총자산



총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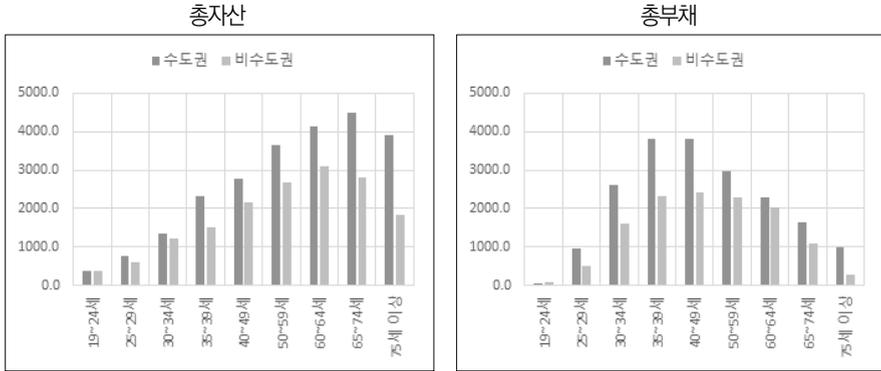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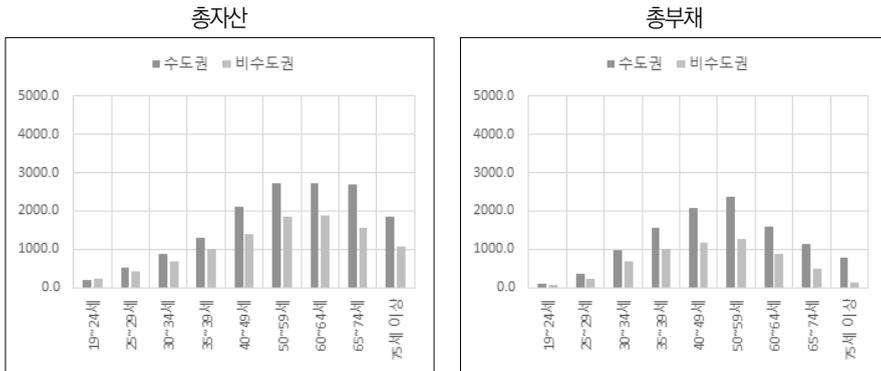
그림 III-9. 총자산 지위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그림 III-10은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연령집단별 개인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이다. 2022년에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 모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높다. 30대 초반 청년기까지는 수도권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총자산 수준이 유사하다. 하지만 30대 후반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총부채와 연동하여 총자산 수준의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해, 미래 자산형성을 계획하는 청년기에 자산의 수준만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더 유리하게 생각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총자산과 총부채 간 차이의 경향은 2012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2012년〉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자산 및 부채는 조사시점의 값임.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그림 Ⅲ-10. 거주지역별 연령집단별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2) 청년 자산 및 부채 결정요인

여기에서는 청년 자산과 부채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앞서 심층분석한 성별과 가구 주와의 관계, 1인 가구 및 가족 동거 여부,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과 개인 경상소득의 자연로그값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연령의 효과는 표 Ⅲ-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차 함수의 형태를 고려해 만나이와 만나이 제곱항을 투입하였다. 다만, 회귀계수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이 제곱항은 100으로 나누었다. 개인 자산과 부채 보유 여부의 결정요인은 이항변수를 결과변수로 하므로 프로빗

(probit) 분석을, 개인 자산과 부채 수준의 결정요인은 자연로그값을 결과변수로 하므로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분석을 활용했다.

표 III-7과 표 III-8은 청년 자산과 부채 보유여부와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청년 자산과 부채 결정요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분석자료와 분석 대상을 구성하였다. (1)~(4)열은 2022년 자료의 분석 결과이고, (5)~(8)열은 2012년 자료의 분석 결과이다. (1), (2), (5), (6)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총자산 및 총부채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고, (3), (4), (7), (8)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19~34세 청년의 분석 결과이다.

표 III-7은 청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표 III-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산 보유율이 80~90% 수준임을 감안하면 성별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¹¹⁾ 성별에 따른 부채 보유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전체 연령집단의 연령에 따른 자산 보유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연령집단의 부채 보유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U자형을 보이는데, 그림 III-4와 표 III-5의 기술통계량을 고려하면 30대부터 급증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기타 가구원 대비 가구주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배우자는 자산 보유 확률이 높고, 자녀일 경우는 부채 보유 확률이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하게 낮다. 청년은 가구주일 때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고, 배우자일 때는 두 개 년도를 통합한 분석 결과에서, 자녀이거나 자녀의 배우자일 때는 2022년 분석 결과에서 자산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족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1인 가구의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편이다. 가족이 있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부채 보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 청년 대상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2022년 청년 대상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1) 기술통계량을 보면 여성의 자산 및 부채 관련 실태가 남성에 비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중상위 지위와 혼인상태를 통제하면 여성의 자산 보유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산 보유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지만, 노동시장 특성과 혼인 행태에 의해 설명력이 상쇄되거나 반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7. 개인 자산 및 부채 여부 결정요인(Probit)

구분	2022년				2012년			
	전체		청년(19~34세)		전체		청년(19~34세)	
	(1)	(2)	(3)	(4)	(5)	(6)	(7)	(8)
	개인자산	개인부채	개인자산	개인부채	개인자산	개인부채	개인자산	개인부채
여성 더미	0.181***	0.018	0.159**	-0.098	0.126*	0.010	0.058	0.044
만나이	0.014*	0.058***	-0.039	0.129	-0.000	0.058***	0.077	0.100
만나이 제곱 (/100)	-0.014*	-0.073***	0.112	-0.193	-0.007	-0.074***	-0.110	-0.139
가구주와의 관계(준거집단=기타 가구원)								
가구주	1.496***	0.630***	1.042***	1.046***	1.123***	0.390***	0.993***	0.749***
배우자	0.429***	0.037	0.345	-0.035	0.324***	0.105+	0.044	0.333*
자녀	0.136	-0.632***	0.355*	-0.272	-0.157	-0.239***	-0.318+	0.142
1인 가구 및 가족 동거 여부(준거집단=가족 비동거)								
1인 가구	0.749***	0.235*	1.048**	-0.009	1.628***	0.076	0.000	0.154
가족 동거	0.327***	0.203*	0.212*	-0.122	0.568***	0.161**	0.496***	0.139+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이하	0.161**	0.224***	0.219	0.367	0.081	0.148***	0.417	0.363+
(전문)대학 이하	0.343***	0.252***	0.412	0.247	0.213**	0.194***	0.588*	0.469*
대학원 이상	0.276*	0.199***	0.308	0.258	0.099	0.162***	0.232	0.428*
혼인상태(준거집단=유배우자)								
이혼/별거	0.003	0.007	0.338	-0.353	-0.089	0.065+	0.285	-0.180
미혼	-0.051	-0.259***	-0.185	-0.457**	0.094	-0.242***	0.101	-0.278***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7	-0.187***	-0.056	-0.256*	-0.168**	-0.130***	0.054	-0.14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34	0.389***	0.000	-0.157	0.088	0.303***	-0.085	0.20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117	0.176***	-0.019	0.178	0.197*	0.155***	0.519+	-0.104
기타종사자	-0.047	-0.024	-0.368	-0.441	-0.098	-0.063	-0.193	0.837+
실업자	0.178	0.079	0.522	0.183	0.168	0.178**	0.240	0.040
비경제 활동인구	-0.243***	-0.231***	-0.287**	-0.421***	-0.117+	-0.127***	0.024	-0.125+
로그 균등화 가구차분 가능소득	0.075**	-0.141***	-0.025	-0.138**	0.141***	-0.189***	0.161**	-0.262***
로그 개인 경상소득	0.069***	0.110***	0.056**	0.084**	0.154***	0.196***	0.141***	0.153***
상수	-0.768*	-1.706***	0.693	-2.377+	-1.098***	-1.886***	-2.608+	-2.260*
유효표본	36179	36179	6292	6339	32510	32510	6105	6683
유사 R ²	0.222	0.220	0.115	0.346	0.268	0.151	0.201	0.145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1) 프로빗 분석 결과임. (1)-(4)열은 거주지역 고정효과(서울, 서울 외 수도권,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함. (5)-(8)열은 거주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함. 잔차항의 이분산성에 강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지면의 한계로 표준오차는 생략함.

2) + $\alpha.1$ * $p < .05$, ** $p < .01$, *** $p < .001$

비해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낮다. 청년일 경우에는 2022년 자료에서 이혼했거나 별거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낮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낮고,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청년으로 국한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일 때 유의하게 자산과 부채 보유 확률이 모두 유의하게 낮다.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개인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부채 보유 확률은 가구 처분가능소득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지만, 개인 경상소득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표 III-8은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 표본에 한해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개인 자산 수준에 대한 성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총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청년 여성의 총부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2022년에는 청년의 총부채 수준에 대한 성별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에 따른 총자산은 2022년과 2012년 모두에서 역U자형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그림 III-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향과 동일하다. 총부채에 대해서는 연령의 영향이 유의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2012년에는 청년 표본에 한해 연령에 따른 U자형의 형태가 드러난다. 하지만 청년 표본에서 총부채 수준에 대한 연령 효과는 2022년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청년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를 형성하는 경향이 과거 10년 동안 변화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기타 가구원 대비 가구주와 배우자, 자녀의 자산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연령집단과 청년 표본에서 일관되게 드러난다. 2012년에 전체 연령집단에서 부채 수준은 기타 가구원에 비해 가구주와 배우자, 자녀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2022년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기타 가구원에 비해 총부채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가구주의 부채 수준이 이전 2012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청년 표본에서는 2012년에 가구주에 한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2022년에는 가구 내 지위에 의한 부채 수준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표 III-8. 개인 자산 및 부채 수준 결정요인(OLS)

구분	2022년				2012년			
	전체		청년(19-34세)		전체		청년(19-34세)	
	(1) 로그 개인자산	(2) 로그 개인부채	(3) 로그 개인자산	(4) 로그 개인부채	(5) 로그 개인자산	(6) 로그 개인부채	(7) 로그 개인자산	(8) 로그 개인부채
여성 더미	0.038	-0.191***	-0.053	-0.181	0.066*	-0.470***	-0.041	-0.621***
만나이	0.050***	-0.006	-0.039	-0.094	0.087***	0.038***	0.101+	-0.783***
만나이 제공 (/100)	-0.030***	-0.001	0.152	0.226	-0.062***	-0.024*	-0.066	1.384***
가구주와의 관계(준거집단=기타 가구원)								
가구주	1.336***	-0.140	1.176***	0.409	1.321***	-0.356*	0.855***	0.675*
배우자	0.487***	-0.367+	0.471*	0.113	0.606***	-0.578**	0.267+	0.312
자녀	0.294***	-0.602*	0.232+	-0.221	0.635***	-0.995***	0.142	-0.233
1인 가구 및 가족 동거 여부(준거집단=가족 비동거)								
1인 가구	-0.363***	-0.145	-0.580***	-0.528	-0.357***	-0.415**	-0.342**	-1.032**
가족 동거	-0.145*	-0.067	-0.384***	-0.392	-0.163**	-0.328*	-0.182*	-0.571*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이하	0.300***	0.130*	0.175	-0.735	0.276***	0.076	-0.009	0.422
(전문)대학 이하	0.660***	0.392***	0.606**	-0.530	0.619***	0.370***	0.240	0.610
대학원 이상	0.925***	0.559***	0.953***	-0.705	0.807***	0.500***	0.259	0.754+
혼인상태(준거집단=유배우자)								
이혼/별거	-0.445***	-0.235***	-0.018	-0.458	-0.399***	-0.145*	-0.442**	-0.223
미혼	-0.230***	-0.479***	-0.030	-0.578*	-0.118*	-0.591***	-0.060	-0.658***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75***	-0.414***	-0.421***	-0.597**	-0.400***	-0.059	-0.490***	0.16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661***	0.507***	0.707***	-0.119	0.672***	0.866***	0.772***	0.52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445***	0.094+	0.288**	-0.325	0.703***	0.272***	0.251**	0.592**
기타종사자	0.104+	0.835***	-0.228	-0.422	0.392***	1.333***	0.807*	1.478*
실업자	-0.145*	-0.228+	-0.083	0.083	-0.129*	0.150	-0.053	0.307
비경제 활동인구	-0.207***	0.080	-0.545***	0.070	0.089*	0.411***	-0.262***	0.356*
로그 균등화 가구처분 가능소득	0.638***	0.032	0.569***	0.215+	0.685***	-0.195***	0.699***	-0.108
로그 개인 경상소득	0.062***	0.276***	0.023	0.199*	0.275***	0.433***	0.117***	0.351***
상수	-1.669***	6.078***	0.445	6.835+	-4.896***	4.877***	-3.293***	15.790***
유효표본	34767	10507	5844	1058	31440	12556	6380	2129
조정 R ²	0.333	0.150	0.246	0.190	0.381	0.205	0.305	0.229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1) (1)-(4)열은 거주지역 고정효과(서울, 서울 외 수도권, 동북권,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함.
(5)-(8)열은 거주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함. 잔차항의 이분산성에 강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자연의 한계로 표준오차는 생략함.

2) + α .1 * p < .05, ** p < .01, *** p < .001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1인 가구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총자산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총부채 수준은 2012년에 1인 가구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지만 2022년에는 가족 동거 여부가 보이는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청년 표본에서는 2022년에 대학 이상인 경우 총자산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 전체 연령집단에서 미혼인 경우 2012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22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부채 수준에 대한 혼인상태의 영향력이 과거 10년 동안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청년 표본에서는 2012년에는 이혼했거나 별거한 경우 총자산이, 미혼인 경우 총부채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2022년에는 미혼인 경우 부채에 한해서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총자산이 유의하게 낮고, 청년 집단도 실업자를 제외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총자산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2012년에는 기타종사자 집단 또한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총자산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 모든 연령집단의 총부채는 2022년에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나 실업자가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난다. 반면, 자영업자나 기타종사자의 총부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청년 집단에서 총부채는 2022년 최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만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모든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개인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총자산 또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사한데, 2022년에는 개인 경상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총 부채는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개인 경상소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 집단에서도 유사하다.

소결하면, 전체 연령집단의 총자산 혹은 총부채 수준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

력은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즉, 청년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자산 및 부채 형성의 특성과 청년기 특성은 상이할 수 있다. 청년의 금융생활, 특히 금융취약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서 청년기의 특수성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2년의 분석 결과와 2022년의 분석 결과가 다소 상이하다. 인구사 회학적 특성의 영향력 경향은 유사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차이를 보인다. 청년의 자산과 부채 운용 특성이 해를 거듭하면서 상이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의 금융취약성에 대응하는 정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 행태의 시의 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4. 청년 부채 운용 특성

여기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청년의 부채 운용 특성을 확인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부채를 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채 특성은 개인 단위 분석이 아닌 부채 건별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연령집단별 명의 기준 부채의 건수와 비중, 대출 형태, 대출 용도, 주요 대출 기관의 분포와 지난 2012년 대비 변화를 확인한다.

여기에서는 표 III-9에서 확인한 것처럼 개인 부채 총액이 결측치이거나 0인 경우에

표 III-9. 분석자료의 연령집단별 부채 건 분포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12년	
	유효표본 (가중치 미적용)	비율 (가중치 적용)	유효표본 (가중치 미적용)	비율 (가중치 적용)
19~24세	439	(2.1)	107	(0.6)
25~29세	933	(4.4)	509	(3.1)
30~34세	2,163	(10.1)	928	(6.7)
35~39세	3,172	(14.7)	1,451	(11.6)
40~49세	7,251	(33.1)	4,752	(30.0)
50~59세	5,300	(23.9)	4,786	(28.3)
60~64세	1,152	(5.1)	1,918	(9.9)
65~74세	1,161	(5.4)	1,757	(7.5)
75세 이상	262	(1.2)	503	(2.2)
전체	21,833	(100.0)	16,711	(1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III-9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령집단별 건별 부채 분포이다. 또한 변수별 유효표본 크기가 상이하어 분석 내용을 상호 비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22년 부채 건의 유효표본은 21,833건이고 2012년 부채 건의 유효표본은 16,771건이다. 연령집단별로는 40~49세 집단 명의의 부채 건수와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50~59세 집단, 30~39세 집단이다. 즉, 생애주기에 따라 점차 청년기부터 부채를 활용하기 시작해 40대 집단이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점차 부채를 상환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9를 보면, 유효표본에서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건은 2022년 439건이 확인된다. 같은 시기 25~29세 청년 명의의 부채 건은 933건, 30~34세 청년 명의의 부채 건은 2,163건으로 명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 건수가 늘어난다. 특히 30대부터 증가폭이 큰 편이다. 기중치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건은 전체 부채 건 중 2.1%, 25~29세 청년 명의의 부채 건은 4.4%, 30~34세 청년 명의의 부채 건은 10.1%이다.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19~34세 청년 명의의 부채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 형태는 담보대출이다(43.6%). 신용대출이 29.3%, 외상 및 할부 값을 돈이 18.5%로 다음을 잇는다. 2012년에 담보대출의 비중이 38.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하였고, 외상 및 할부의 비중이 28.8%에서 다소 감소한 것이다.

청년층에 주목해서 보면,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대출(46.5%)이다. 신용대출에 학자금 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일 수 있다. 그 다음은 외상 및 할부 값을 돈이 27.7%로 높은 편이고, 담보대출은 19.9%로 다른 연령집단 명의의 부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25~29세 청년 명의의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도 신용대출이지만 그 비중이 34.2%로 다소 감소한다. 20대 후반부터 대출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외상 및 할부 값을 돈의 비중이 22.3%로 다소 감소하고 담보대출의 비중이 34.2%로 증가한다. 30~34세 청년 명의 부채의 대출 형태 구성이 20대 청년 명의 부채와 상이해지기 시작하는데, 담보대출의 비중이 42.5%로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의 비중이 34.2%로, 외상 및 할부 값을 돈의 비중이 19.0%로 다소 감소한다.

2012년에는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중 54.0%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대출

표 III-10. 연령집단별 대출 형태

(단위: %)

〈2022년〉						
집단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널 깃돈	전체
19~24세	19.9	46.5	2.5	27.7	1.4	100.0
25~29세	34.2	37.4	4.9	22.3	0.2	100.0
30~34세	42.5	34.2	3.0	19.0	0.0	100.0
35~39세	43.0	34.3	2.7	17.6	0.0	100.0
40~49세	42.4	31.5	4.7	18.4	0.1	100.0
50~59세	43.7	27.4	6.4	17.8	0.4	100.0
60~64세	46.2	24.0	5.3	20.0	0.5	100.0
65~74세	48.8	20.6	5.4	18.8	0.4	100.0
75세 이상	54.0	19.0	2.6	16.1	0.0	100.0
전체	43.6	29.3	4.9	18.5	0.2	100.0

〈2012년〉							
집단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널 깃돈	기타 (빌린 돈 등)	전체
19~24세	14.0	54.0	3.1	28.6	0.4	100.0	100.0
25~29세	20.7	26.7	5.3	47.1	0.3	100.0	100.0
30~34세	31.6	24.8	6.7	36.4	0.5	100.0	100.0
35~39세	36.2	25.7	6.8	30.9	0.9	100.0	100.0
40~49세	37.9	25.9	7.4	28.1	0.7	100.0	100.0
50~59세	41.1	25.4	6.1	26.6	0.8	100.0	100.0
60~64세	46.6	26.4	4.7	22.0	0.4	100.0	100.0
65~74세	49.7	26.7	4.1	18.4	1.2	100.0	100.0
75세 이상	53.2	32.5	1.2	12.2	1.0	100.0	100.0
전체	37.8	26.4	6.4	28.8	0.7	100.0	1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012년의 유효표본은 21,909건, 2022년의 유효표본은 16,728건임.

이 다수이고, 명의자 청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외상 및 할부 값을 돈의 비중이 명의자 청년 연령이 20대 후반일 때 높아져 19~24세 청년은 28.6%이지만, 25~29세 청년은 47.1%, 30~34세 청년도 36.4%로 다른 유형의 대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과 최근의 경향은 다소 상이하다.

연령집단별 대출 세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 III-11을 보면, 청년 명의의 담보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예금 및 적금 담보 대출이다. 명의자 청년의 높아질수록

거주주택과 기타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주주택 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다른 연령집단의 경향과는 다소 상이한 것이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표 III-11. 연령집단별 대출 세부 형태

(단위: %)

〈2022년〉

집단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외상 및 할부		널 깃돈	전체
	거주주택	기타부동산	예금 및 적금 담보	신용대출	마이뉴스통장		신용카드 할부	할부금융, 외상		
19~24세	3.1	0.3	16.6	44.8	1.6	2.5	15.9	11.8	3.3	100.0
25~29세	7.3	2.0	25.0	30.7	6.7	4.9	13.7	8.6	1.2	100.0
30~34세	16.6	3.6	22.3	27.2	6.9	3.0	11.1	7.8	1.4	100.0
35~39세	23.6	4.6	14.7	24.6	7.9	2.7	10.8	6.8	2.4	100.0
40~49세	27.1	5.5	9.8	21.1	10.4	4.7	12.0	6.4	3.0	100.0
50~59세	25.6	9.4	8.7	18.6	8.8	6.4	11.1	6.7	4.8	100.0
60~64세	26.1	10.8	9.3	15.2	8.8	5.3	12.5	7.5	4.6	100.0
65~74세	27.9	13.7	7.1	11.8	8.8	5.4	13.1	5.7	6.5	100.0
75세 이상	31.8	16.7	5.5	10.0	8.9	2.6	12.5	3.6	8.2	100.0
전체	24.9	7.6	11.1	20.1	9.1	4.9	11.7	6.8	3.8	100.0

〈2012년〉

집단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외상 및 할부	널 깃돈	전체
	거주주택	기타부동산	예금 및 적금 담보	신용대출	마이뉴스통장				
19~24세	4.2	1.2	18.3	43.5	0.8	3.5	27.8	0.6	100.0
25~29세	11.7	3.2	20.9	16.7	4.9	4.1	27.1	0.5	100.0
30~34세	22.4	4.8	19.4	12.8	6.7	5.3	27.7	0.7	100.0
35~39세	28.6	6.2	16.9	10.1	9.4	6.0	22.1	0.7	100.0
40~49세	29.5	9.7	15.0	10.0	9.0	6.0	19.9	0.9	100.0
50~59세	32.1	12.4	12.8	10.1	8.2	4.8	18.5	1.1	100.0
60~64세	39.3	14.4	11.0	10.9	7.3	3.1	13.6	0.5	100.0
65~74세	38.1	15.1	10.0	11.5	7.6	3.9	12.4	1.5	100.0
75세 이상	42.9	12.8	12.3	17.3	4.0	1.6	7.9	1.3	100.0
전체	29.4	9.6	14.9	11.4	8.1	5.2	20.5	0.9	1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012년 대출 세부 형태 유효값은 15,246건이므로 대출 형태 분석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2022년 유효표본은 16,728건으로 대출 형태 분석 결과와 일관됨.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다. 마이너스 통장의 비중 또한 명의자 청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한다. 외상 및 할부 값을 돈 중에서는 신용카드 할부의 비중이 휴대폰 등 할부 금융에 의한 값을 돈의 비중보다 다소 높다.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면 신용카드 할부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인데, 이는 그 외 형태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10년 전인 2012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2년에는 외상 및 할부에 의해 값을 돈의 세부 대출 형태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청년 집단의 신용카드 할부 및 내구제 할부금융 이용 현황 변화는 확인하지 못한다.

표 III-12는 연령집단별 대출 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 건의 비중이 36.9%로 가장 많다. 2012년에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 건의 비중이 44.3%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은 거주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가 2022년 22.1%로, 2012년 17.0%와 비교하면 최근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비중이 2012년 15.9%였던 반면, 최근에는 13.4%로 다소 감소하였다.

청년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보면, 2022년 최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 건의 비중이 19~24세 청년 명의 기준 40.7%, 25~29세 28.0%, 30~34세 35.1%로 높다. 명의자 청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중 생활비 마련 목적의 부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이다(28.9%). 20대 후반부터는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19~24세 청년 명의 18.9%, 25~29세 28.7%, 30~34세 23.5%로 높은 편이다.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도 19~24세 청년 명의 부채의 비중이 3.1%이었던 것에 비해, 25~29세 9.6%, 30~34세 19.1%로 명의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높아진다.

2012년에는 청년, 특히 20대 후반 명의의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채가 생활비 마련으로 50%를 넘는 수준이다.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비 마련에 의한 부채의 비중이 54.4%에 달한다. 2022년과 유사하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은 20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지만 그 수준은 최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최근 특히 20대 후반부터 매매나 임대 등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주택담보대출 확대나

표 III-12. 연령집단별 대출 용도

(단위: %)

〈2022년〉

집단	거주 주택 마련	기타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금융 자산	부채 상환	사업 자금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전체
19~24세	3.1	0.3	18.9	0.0	5.7	0.9	28.9	40.7	1.5	100.0
25~29세	9.6	2.8	28.7	1.6	2.7	4.6	7.6	28.0	4.5	100.0
30~34세	19.1	4.7	23.5	3.3	2.2	5.7	2.2	35.1	4.0	100.0
35~39세	25.5	6.2	16.1	3.1	3.2	8.3	0.6	33.8	3.2	100.0
40~49세	25.8	6.0	8.4	2.5	3.5	11.4	1.1	38.5	2.9	100.0
50~59세	21.4	8.4	5.8	2.2	3.5	16.4	2.2	36.8	3.4	100.0
60~64세	18.0	8.9	6.2	1.5	3.3	20.5	0.8	36.8	3.9	100.0
65~74세	18.9	8.4	4.6	0.5	3.8	19.8	0.5	36.8	6.7	100.0
75세 이상	23.4	7.9	4.6	0.7	3.3	14.3	0.7	37.4	7.7	100.0
전체	22.1	7.0	9.7	2.2	3.4	13.4	1.7	36.9	3.7	100.0

〈2012년〉

집단	거주 주택 마련	기타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금융 자산	부채 상환	사업 자금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전체
19~24세	2.2	0.6	1.2	0.5	0.0	2.4	54.4	34.4	4.3	100.0
25~29세	7.2	1.8	10.6	0.6	1.0	3.4	12.6	57.0	5.9	100.0
30~34세	17.2	2.3	13.5	0.8	1.9	7.3	1.2	51.5	4.4	100.0
35~39세	19.3	3.8	8.8	1.2	2.3	11.9	0.9	48.5	3.4	100.0
40~49세	18.2	5.4	5.1	0.7	2.4	16.7	3.0	45.7	2.8	100.0
50~59세	16.6	6.2	3.8	0.7	3.0	19.6	4.1	41.2	4.9	100.0
60~64세	17.1	5.2	2.6	0.7	4.3	26.1	1.9	34.4	7.6	100.0
65~74세	17.6	6.8	3.5	0.4	4.2	24.9	1.0	31.2	10.4	100.0
75세 이상	17.9	3.8	7.4	0.0	3.5	28.4	1.0	28.4	9.7	100.0
전체	17.0	4.8	6.1	0.8	2.6	15.9	4.1	44.3	4.4	1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012년의 유효표본은 21,909건, 2022년의 유효표본은 16,728건임.

2010년대 전월세자금 대출 규모 및 대상자 확대의 정책 변화가 현세대 청년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3은 연령집단별 부채 건의 대출 기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기준 은행 대출의 부채 건이 75.1%로 부채 4건 중 3건 정도의 비중이다. 단위농협(7.0%), 보험회사(4.2%), 비은행금융기관(3.8%), 저축은행(3.4%)의 수준으로 은행 대출 비중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은행 대출 부채의 비중이 65.1%로 최근에 비해 10.0%p 가량 낮고, 단위농협 부채의 비중이 10.6%로 최근에 비해 3.6%p 정도 높다. 그리고 기타 유형의 부채 비중이 2012년에 7.2%로 2022년 4.7%에 비해 다소 높다.

표 III-13. 연령집단별 대출 기관

(단위: %)

〈2022년〉

집단	은행	저축은행	단위농협	비은행금융기관	보험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기관	각종공제회	기타	전체
19~24세	50.2	7.8	2.0	4.9	4.2	0.4	0.0	1.1	29.5	100.0
25~29세	75.8	4.9	2.8	0.8	2.5	0.0	2.2	1.3	9.7	100.0
30~34세	83.0	2.3	1.8	2.6	1.9	0.7	3.0	0.4	4.2	100.0
35~39세	81.9	4.2	2.6	2.8	2.4	0.6	3.3	0.6	1.7	100.0
40~49세	77.8	3.8	4.2	3.3	4.6	0.9	2.7	0.9	1.8	100.0
50~59세	72.7	3.5	8.0	3.8	5.3	0.8	2.4	1.5	2.1	100.0
60~64세	67.2	3.2	14.6	4.8	4.7	0.5	2.6	0.2	2.3	100.0
65~74세	67.4	1.2	16.5	6.9	4.0	0.6	1.1	0.3	2.1	100.0
75세 이상	68.8	0.6	17.0	9.8	1.6	0.0	1.2	0.2	0.9	100.0
전체	75.1	3.4	7.0	3.8	4.2	0.7	2.5	0.9	2.5	100.0

〈2012년〉

집단	은행	저축은행	단위농협	비은행금융기관	보험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기관	각종공제회	기타	전체
19~24세	62.8	0.7	6.5	0.5	2.6	0.0	3.3	2.8	20.6	100.0
25~29세	68.7	0.9	5.8	4.2	4.3	3.1	2.4	1.9	8.7	100.0
30~34세	72.0	1.8	3.3	3.7	5.4	1.3	4.0	1.6	6.8	100.0
35~39세	70.6	2.2	5.5	3.5	6.7	0.6	3.3	1.0	6.7	100.0
40~49세	67.0	2.1	8.2	2.5	7.9	1.4	2.5	1.1	6.2	100.0
50~59세	62.0	2.5	13.8	4.8	6.9	0.2	0.9	1.8	7.3	100.0
60~64세	53.7	2.0	20.7	11.7	3.6	0.7	2.1	0.2	5.4	100.0
65~74세	60.0	0.9	21.1	6.6	2.8	0.9	0.4	0.4	7.0	100.0
75세 이상	40.6	0.0	31.7	7.7	0.6	0.0	0.6	0.0	18.8	100.0
전체	65.1	2.0	10.6	4.5	6.3	0.9	2.2	1.2	7.2	1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원격접근서비스)

* 주: 조사시점 기준임.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2012년의 유효표본은 7,297건, 2022년의 유효표본은 11,997건임.

청년 명의의 부채를 중심으로 보면, 2022년 최근 은행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명의자 청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행 대출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30~34세는 83.0%에 이른다. 19~24세 청년 명의의 부채 중 기타 유형의 부채가 29.5%로 높은 것은 한국장학재

단에 의한 학자금 대출의 영향일 수 있다. 2012년에는 은행 대출의 비중이 19~24세 청년 명의 62.8%, 25~29세 청년 명의 68.7%, 30~34세 청년 명의 72.0%로 균일하게 높다. 19~24세 청년 명의 부채 중 기타 유형의 비중이 20.6%로 상대적으로 높다.

5. 소결

이 장에서는 금융취약청년의 정책소외를 완화하기 위한 심층분석 이전에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이용하여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확인하였다. 독립 이전 청년의 경우, 가구의 자산이나 부채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해(그림 III-3) 개인 단위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가구에서 누리는 자산과 상환부담을 지는 다른 가구원의 부채와 상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자산과 부채로 보는 청년의 금융생활은 제2장에서 검토한 생애주기 가설이 실현되는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2, 표 III-3). 미성년기 이후 독립된 삶을 준비해가는 이행기의 청년이 소득활동을 시작하고 자신의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부채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비수준 대비 소득의 초과분으로 형성하는 자산의 최고점은 중장년기에 나타나며, 부채도 자산의 생애궤적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을 형성하거나 부채를 활용하는 방식은 과거 10년 동안 변화해온 것으로 보인다(표 III-7, 표 III-8). 자산과 부채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자산액과 부채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해왔다. 자신의 경제력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성인 집단과 청년 집단 모두 변화를 경험해왔다. 그런데 전체 인구 집단의 특성과 청년 집단의 특성은 다소 상이하다. 자산을 형성하고 부채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청년기의 경험은 중장년이나 고령기 인구집단의 자산 및 부채 운용 경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청년의 자산과 부채, 즉 금융생활의 현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청년기 고유의 특성과 함께 금융취약청년의 정책소외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이다.

예를 들어 결혼은 청년기에 자산을 형성하는 계기이자 기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8). 결혼하면서 거주주택의 형태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증여받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명의를 공동화하면서 자산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림 III-4에서는 여성의 평균 자산액과 부채액이 모두 남성에 비해 낮았지만, 표 III-8에서

혼인상태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부채액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자산액의 성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일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는 기반이 달라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부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표 III-3). 청년의 부채 보유율은 과거 2012년에 비해 최근 2022년에 오히려 낮아졌지만(표 III-5), 부채를 가진 청년의 부채 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표 III-9). 지난 2012년 청년의 대출 중에서는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 절반 이상이였다. 특히 20대 초반 청년의 부채는 학자금 대출이 많다. 2022년에는 주택이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비중이 과거 2012년에 비해 늘었다(표 III-12). 금융자산 확보를 위한 대출도 약간 늘었고(표 III-12), 담보대출도 늘었다(표 III-10, 표 III-11). 자산과 부채를 활용해 금전을 융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자산 혹은 부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생활의 행태는 청년 세대 내에서 이질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여전히 가구주 중심의 자산과 부채가 많고(그림 III-5),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대에 부채가 급증하기도 한다(그림 III-10).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체계적으로 자산액이 낮다(그림 III-7).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자산액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보다 높고,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자산액이 높다. 물론 사업목적의 부채로 인해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액도 높다(그림 III-9). 여전히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부채의 비중이 적지 않다(표 III-12). 대부업체 등 악질의 부채를 가진 청년도 잔존한다(표 III-13). 청년 세대 내 격차가 금융생활에서도 드러난다.

○ — 제4장 청년 금융취약 실태 분석

- 1. 조사개요
- 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
- 3. 청년 금융취약 원인 분석
- 4. 소결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장에서는 청년의 부채 종류 및 수준,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이용 현황, 개인 생애 재무 계획, 재무조정 이용 경험, 재무관리 교육경험 및 인식 수준 등 청년의 금융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부채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부채가 있는 청년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나 가족, 친구, 지인 등의 도움 여부에 따라 금융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를 위해 금융취약성이 있는 청년의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을 설계해야하지만, 현재까지는 관련 자료의 부재로 청년의 금융상황, 부채현황을 반영한 모집단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2023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만 19~3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 1,500명을 목표표본으로 하고, 비교집단으로 “부채가 없는 청년” 500명을 포함하였다. 부채가 있는 청년 1,500명과 부채가 없는 청년 500명은 각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 표본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 대상 이메일 조사와 청년센터 대상 온·오프라인 링크(URL, QR코드 등)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패널과 청년센터 대상 각각 2,146명,

12) 4장은 나원희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표 IV-1. 응답자 특성

구분	온라인패널 대상			청년센터 대상			
	전체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전체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전체	2,146	1,529	617	135	61	74	
연령별	만 19~24세	716	504	212	23	4	19
	만 25~29세	728	519	209	54	27	27
	만 30~34세	702	506	196	58	30	28
성별	남성	1,112	786	326	34	20	14
	여성	1,034	743	291	101	41	60
지역별	서울	460	342	118	12	5	7
	부산	130	92	38	41	19	22
	대구	101	69	32	2	1	1
	인천	126	89	37	1	0	1
	광주	68	47	21	-	-	-
	대전	68	45	23	2	0	2
	울산	44	30	14	3	1	2
	경기	582	432	150	17	7	10
	강원	56	36	20	1	0	1
	충북	64	44	20	48	22	26
	충남	80	55	25	1	0	1
	전북	67	45	22	-	-	-
	전남	57	35	22	4	4	0
	경북	86	59	27	1	1	0
	경남	112	77	35	2	1	1
	제주	27	21	6	-	-	-
세종	18	11	7	-	-	-	

135명으로 총 2,281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그중 2023년 4월 기준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 1,590명(69.7%), 부채가 없는 청년 691명(30.3%)이 해당된다(표 IV-1).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았으며, 2023년 4월 12일자로 승인을 득하였다(제2023-017호).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부채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채현황 설문문항과 부채경험 유무와 관계없는 공통질문으로 청년의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 자산 및 부채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부채 종류에는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표 IV-2.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응답자 선정		연령, 성별, 거주지, 현재 부채경험유무
부채 현황	부채 유형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담보대출, 금융기관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미결제 잔액, 빌린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 휴대폰 등 내구제 대출, 대부업체 등 작업대출
	부채 경험有 (현재기준)	부채유형별 내용
	부채상환	부채 종류, 부채기관, 담보형태, 부채용도, 대출시점, 최초부채금액, 부채잔액
	부채부담	부채상환 방법, 부채상환 연체유무/이유, 부채상환 이행능력 판단
부채 계획有 (미래)	미래 부채계획	부채로 인한 생계부담정도, 지출(저축, 투자)에 영향
재무 관리 인식	재무인식	있다/없다, 미래 부채에 대한 인식, 부채증가 원인
	재무관리	장단기 재무목표 수립 등, 신용카드 결제마감일 준수
	연체경험	저축, 노후준비, 청약통장 등 마련
	금융관련 정보수집 경로	휴대폰 등 통신요금, 월세, 사회보험료 혹은 세금
	교육 및 상담경험	부모 등 가족, 지인, 인터넷 검색,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타 등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경험	재무/금융교육, 재무/금융상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	있다/없다, 이용한 제도 종류 그렇다/아니다
일반 사항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수,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부모동거여부, 최종학력, 경제활동상태, 취약계층 해당 여부(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구 등)
	자산,재산,부채 정보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 총자산 규모, 본인의 총자산 규모, 가상자산 투자유무, 집의 점유형태, 재산 상속 또는 증여 여부, 부채 상속 또는 증여 여부, 부담정도 등, 미래의 상속/증여 부채여부
기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족,친척,친구,이웃 등 도움을 요청할 사람유무, 삶의 만족도, 취약계층 여부

연체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자동차 할부금융),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 휴대폰 등 내구제 대출,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 등이 해당되며, 부채 종류별 부채기관, 담보형태, 부채용도, 대출시점, 최초부채금액, 부채잔액 등에 대한 정보이다. 다음으로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은 재무관리여부, 연체경험, 금융관련 정보수집 경로, 교육 및 상담경험,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경험 유무 등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가구 일반사항과 자산, 재산, 부채에 대한 정보,

개인의 금융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존재유무, 삶의 만족도 등을 추가하였다(표 IV-2).

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

1) 기초통계

전체 조사대상(2,281명) 중 부채가 있는 청년(1,590명)과 부채가 없는 청년(691명)에 대한 연령별, 성별, 최종학력, 경제활동상태, 월평균 개인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취약계층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은 표 IV-3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24세 청년 중 '부채 있음(31.9%)' 보다 '부채 없음(33.4%)' 비율이 약 1.5%p 더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 있음' 청년이 '부채 없음' 청년 비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부채가 있는 남자의 비율이 (50.7%) 여자(49.3%)보다 높았으며, 최종학력 수준에서는 대학/전문대학 재학/휴학/졸업한 청년은 '부채 없음' 비율이 더 높았으며, 고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 재학 중인 청년은 '부채 있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에서 종사하는 청년의 '부채 있음' 비율이 '부채 없음'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거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상용임금근로자의 경우 부채가 있는 청년의 비율이 51.8%로 부채가 없는 청년(41.1%)보다 약 10.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부, 학생, 군인 등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부채 있음' 비율이 21.1%, '부채 없음' 비율이 32.9%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부채 유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월평균 소득수준 역시 경제활동상태와 무관하지 않는데, 소득없음과 100만 원 미만 소득을 가진 청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1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진 청년의 경우, 부채가 있는 청년의 비율 부채가 없는 청년의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응답자 현황

(N=2,281)

구 분		전체		부채있음		부채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2,281	100.0	1,590	100.0	691	100.0
연령	만 19~24세	739	32.4	508	31.9	231	33.4
	만 25~29세	782	34.3	546	34.3	236	34.2
	만 30~34세	760	33.3	536	33.7	224	32.4
성별	남	1,146	50.2	806	50.7	340	49.2
	여	1,135	49.8	784	49.3	351	50.8
최종학력	고졸 이하	309	13.5	224	14.1	85	12.3
	대학/전문대학 재학/휴학	532	23.3	355	22.3	177	25.6
	대학/전문대학 졸업	1,232	54.0	857	53.9	375	54.3
	대학원 재학/휴학	107	4.7	76	4.8	31	4.5
	대학원 졸업	101	4.4	78	4.9	23	3.3
경제활동 상태	상용 임금근로자	1,108	48.6	824	51.8	284	41.1
	임시 임금근로자	169	7.4	115	7.2	54	7.8
	일용 임금근로자	75	3.3	58	3.6	17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7	5.1	83	5.2	34	4.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7	1.2	23	1.4	4	0.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9	2.1	40	2.5	9	1.3
	무급가족종사자	6	0.3	5	0.3	1	0.1
	실업자	167	7.3	106	6.7	61	8.8
	비경제활동인구	563	24.7	336	21.1	227	32.9
	소득없음	166	7.3	83	5.2	83	12.0
월평균 개인소득	100만 원 미만	389	17.1	235	14.8	154	22.3
	100~200만 원 미만	337	14.8	242	15.2	95	13.8
	200~300만 원 미만	718	31.5	528	33.2	190	27.5
	300~400만 원 미만	405	17.8	292	18.4	113	16.4
	400~500만 원 미만	126	5.5	102	6.4	24	3.5
	500~600만 원 미만	74	3.2	56	3.5	18	2.6
	600~700만 원 미만	30	1.3	25	1.6	5	0.7
	700~800만 원 미만	21	0.9	17	1.1	4	0.6
	800만 원 이상	15	0.7	10	0.6	5	0.7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67	2.9	39	2.5	28	4.1
	100만 원 미만	118	5.2	81	5.1	37	5.4
	100~200만 원 미만	188	8.2	136	8.6	52	7.5
	200~300만 원 미만	505	22.1	385	24.2	120	17.4
	300~400만 원 미만	331	14.5	233	14.7	98	14.2
	400~500만 원 미만	268	11.7	194	12.2	74	10.7
	500~600만 원 미만	224	9.8	145	9.1	79	11.4
	600~700만 원 미만	155	6.8	104	6.5	51	7.4
700~800만 원 미만	135	5.9	96	6.0	39	5.6	

	800만 원 이상	290	12.7	177	11.1	113	16.4
	소계 (중복응답)	2,324	100.0	1,623	100.0	701	100.0
	해당 없음	1,978	85.1	1,374	84.7	604	86.2
	장애인	34	1.5	22	1.4	12	1.7
	자립준비청년	26	1.1	19	1.2	7	1.0
	가족돌봄청년	26	1.1	19	1.2	7	1.0
	한부모가구	135	5.8	101	6.2	34	4.9
	북한이탈주민	8	0.3	6	0.4	2	0.3
	다문화가족 자녀	16	0.7	11	0.7	5	0.7
	은둔형 외톨이	45	1.9	30	1.8	15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56	2.4	41	2.5	15	2.1

개인 혹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상태, 삶의 만족도, 주변 지지계층 여부가 청년의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약계층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고, 취약계층 중에서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가 ‘부채 없음(4.9%)’ 비율보다 ‘부채 있음(6.2%)’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

최근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부채 있음’ 청년보다 ‘부채 없음’ 청년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3%p) 것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 등의 지지계층 여부에 대한 결과에서는 3가지 항목(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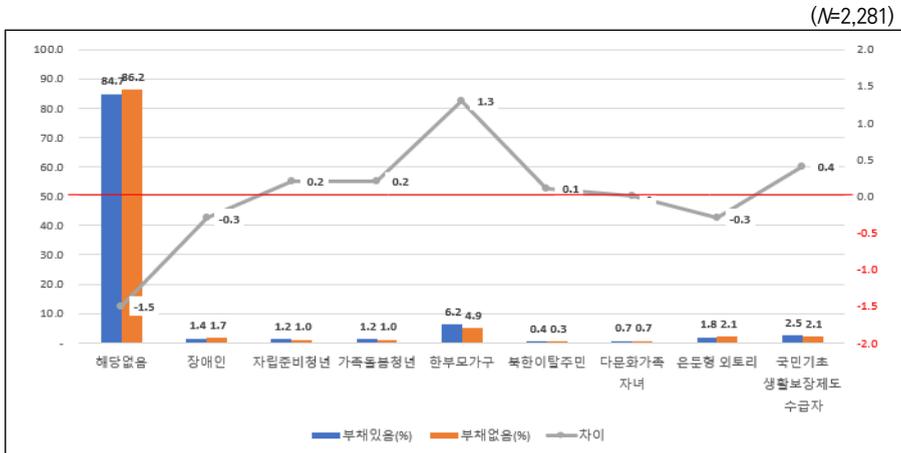


그림 IV-1. 취약계층 여부(중복응답)

(N=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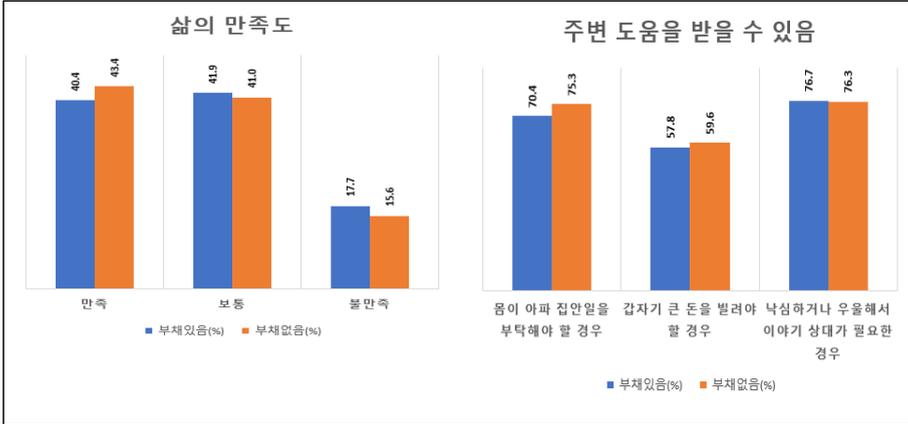


그림 IV-2. 삶의 만족도 및 주변 도움 유무

상대가 필요한 경우 중 앞에 2가지 항목에서 '부채 없음' 청년이 더 많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채 있음' 청년이 더 많았다(그림 IV-2).

2) 부채 경험 및 현황

조사 대상 청년 중 78.8%(1,796명)는 과거에 한 번 이상 부채 경험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부채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은 21.3%(487명)이다. 부채 경험이 있는 청년 1,796명 중에서는 약 88.5%가 조사시점인 2023년 4월까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11.5%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은 전체 조사 대상 중 69.7%(1,590명)로 과거 부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 비율(78.8%)에

표 IV-4. 현재 기준(2023.4.) 부채 유무에 따른 부채 경험 현황

(N=2,281)

구분		부채 유무(2023.4.기준)				
		전체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부채 경험	전체	2,281	1,590	69.7	691	30.3
	경험 있음	1,796	1,590	88.5	206	11.5
	경험 없음	485	-	0.0	485	100.0



그림 IV-3. 생애 최초 주된 부채

비해 약 9.1%p 낮으나, 여전히 조사대상 청년의 약 70%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표 IV-4).

부채 경험이 있는 응답자(1,796명)의 최초 주된 부채는 학자금 대출이며(42.8%), 다음으로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17.1%, 금융기관 담보대출 11.5%, 신용카드 관련 대출 8.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도 2.1%로 37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3).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1,590명)의 부채 보유 건수는 1건(51.7%)이 가장 많았으며, 2건 27.0%, 3건 11.5%, 4건 4.2%, 5건 2.9%순이다. 부채 보유 건수가 2건 이하인 그룹은 전체의 78.7%가 해당되며, 3~5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295명으로 전체의 18.6%, 6건 이상 그룹은 43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그림 IV-4).

부채 보유 건별 부채 종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V-5와 같다. 부채 종류는 전체적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보유 건수가 2건 이하인 그룹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3건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청년은 주로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에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특히, 3~5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보다 6건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경우가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관련 대출, 연체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채의 질을 분석할 때 주로 활용되는 '휴대폰 등 내구재 대출'과

(N=1,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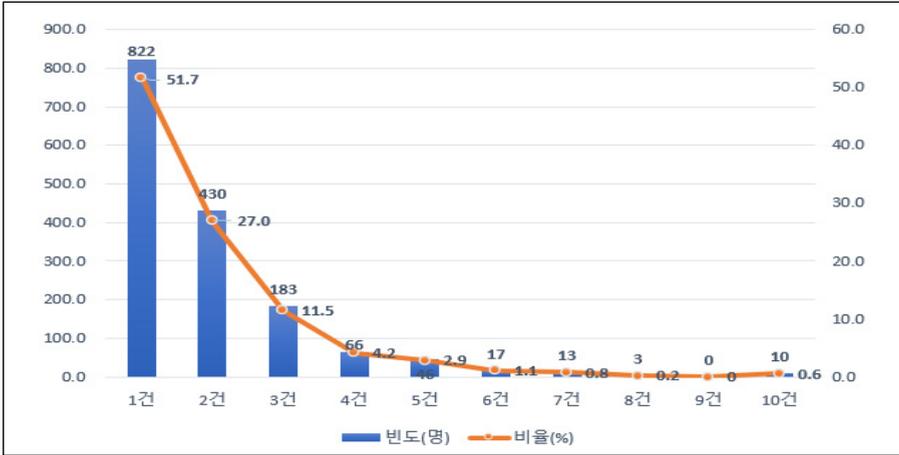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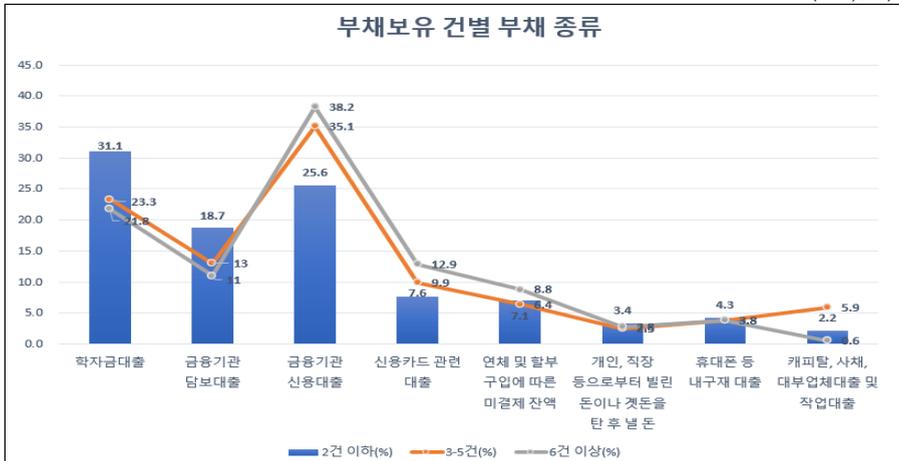


그림 IV-4. 부채보유 건수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에 대해서는 2건 이하의 부채를 보유한 청년이 3건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청년보다 ‘휴대폰 등 내구재 대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3~5건의 부채를 보유한 청년은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 대출 및 작업대출 등’과 같은 부채 유형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5.9%)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은 부채 보유 건별 부채 기관 현황이다. 2건 이하 또는 3~5건 이하의 부채를 보유한

(N=1,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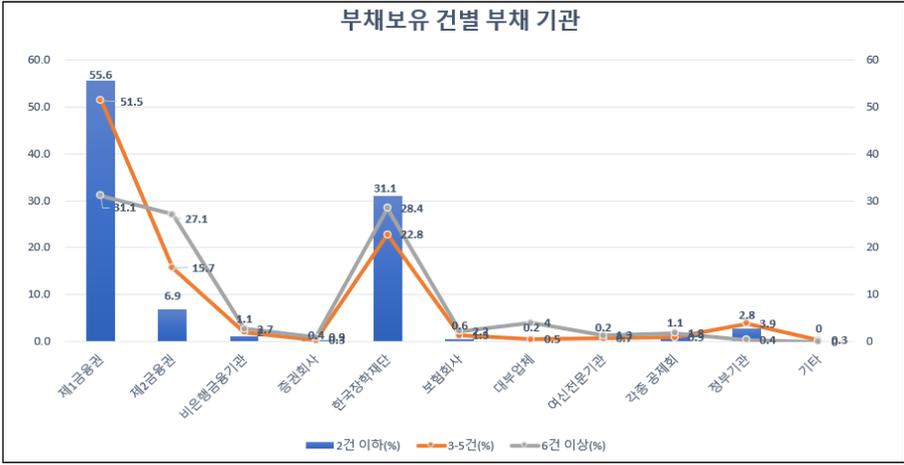


그림 IV-5. 부채보유 건별 부채 종류, 부채기관

청년들 중 대다수인 약 50% 이상이 제1금융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서 한국장학재단과 제2금융권이 그 다음으로 주요한 부채 기관으로 나타났다(그림 IV-5). 이러한 추세는 부채를 보유한 청년이 제1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 및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대학 학자금 대출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높은 대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6건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청년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 비율이 4.0%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다중부채 청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부채 보유 건별 담보형태는 그림 IV-6과 같다. 부채 보유 2건 이하인 경우에 담보를 가지고 있는 유효표본 수는 314건이며, 3~5건은 136건, 6건 이상은 35건이 해당된다. 2건 이하의 부채를 보유한 경우, 60% 이상이 거주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채권이 약 17%, 기타(전세권, 자동차 등)가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의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채권이 38.2%이며, 거주주택 33.8%로 부채 보유 2건 이하 청년의 절반 수준이다. 6건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50% 이상이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채권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채 보유 건수가 증가할수록 예금, 적금, 보험 등의 담보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 보유 건수에 따른 부채 용도를 살펴보면(그림 IV-6), 부채 보유 2건 이하인 그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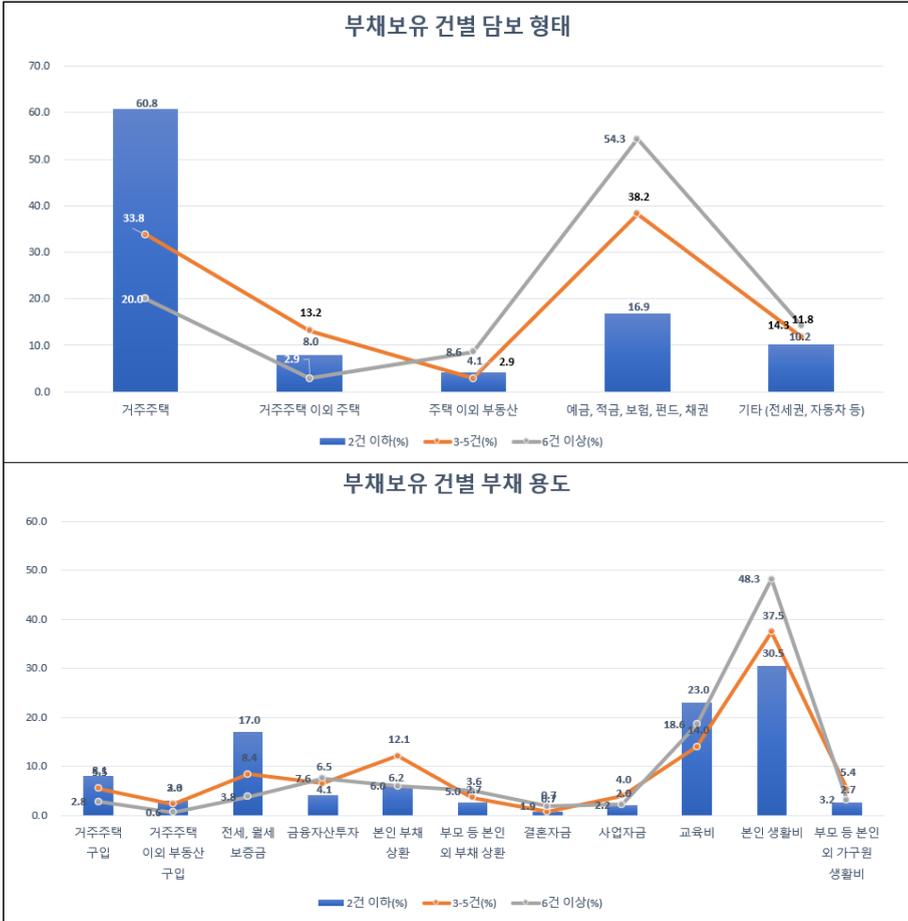


그림 IV-6. 부채보유 건별 담보형태, 부채용도

서는 본인 생활비가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교육비 23.0%, 전세, 월세 보증금 17.0% 순으로 나타났다. 3~5건의 부채를 보유한 그룹에서는 본인의 생활비가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비는 14.0%, 본인 부채 상황은 12.1% 순이다. 마지막으로 6건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그룹에서는 본인 생활비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비 역시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채 보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 생활비에 대한 부채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나 교육비와 같은 필수적인 용도보다는 금융자산투자

표 IV-5. 부채 건수별 부채 현황

(N=1,590)

구 분		보유 부채 건수			
		2건 이하 (n=1,252)	3~5건 (n=295)	6건 이상 (n=43)	
부채 금액 (만 원)	최초 부채금액	평균	4,576.73	8,112.93	9,010.23
		(표준편차)	(7,889.26)	(11,646.66)	(9,006.64)
		최소값	10	45	582
	부채 잔액	최대값	61,000	76,000	37,650
		평균	3,873.52	7,961.29	7,216.09
		(표준편차)	(7,313.77)	(11,886.97)	(7,602.87)
	최소값	1	13	393	
	최대값	58,000	65,900	33,255	

혹은 부모 등 본인 외의 부채 상환 등 다양한 부채 상황에 대한 용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부채 보유 건별 최초 부채금액을 살펴보면(표 IV-5), 부채 보유 2건 이하의 그룹(1,252명)의 최초 부채금액 평균은 약 4,577만 원이며, 부채 잔액은 평균 3,874만 원이다. 3~5건 그룹(295명)은 평균 8,113만 원이며, 부채 잔액은 평균 7,951만 원, 6건 이상 그룹(43명)은 평균 9,010만 원의 최초 부채금액을 가지고 있고, 부채 잔액은 7,21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최초 부채금액 대비 부채잔액이 평균 80%이상 남아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3~5건의 부채를 보유하는 청년은 최초 부채금액 대비 평균 98%가 부채 잔액임을 알 수 있다.

최초 부채금액보다 부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의 주된 부채 상환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IV-6), 응답자 총 613명 중 89.9%(551명)가 '소득에 의한 상환'이라고 답했다.

표 IV-6. 부채 상환

(N=613)

구 분		빈도(명)	비율(%)
부채 상환 주된 방법	전체	613	100.0
	소득에 의한 상환	551	89.9
	금융자산 처분이나 퇴직(연)금 정산	19	3.1
	주거를 변경하여 상환	21	3.4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처분	6	1.0
	상속이나 증여로 상환	7	1.1
	기타	9	1.5

다음으로 '주거를 변경하여 상환'이 3.4%(21명), '금융자산 처분이나 퇴직(연금 정산)'이 3.1%(19명)로 청년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을 주요한 부채 상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1,590명) 중 지난 1년 동안(2022.5.~2023.4.) 3달/회 이상 원금 상환 또는 이자지급 기한을 놓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26.2%가 해당 기간 동안 한번 이상 연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39.7%), 납부기일 착오(20.9%),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18.3%), 가계지출 증가(11.3%), 자금용통 차질(9.9%)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7).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 중 73.8%는 연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V-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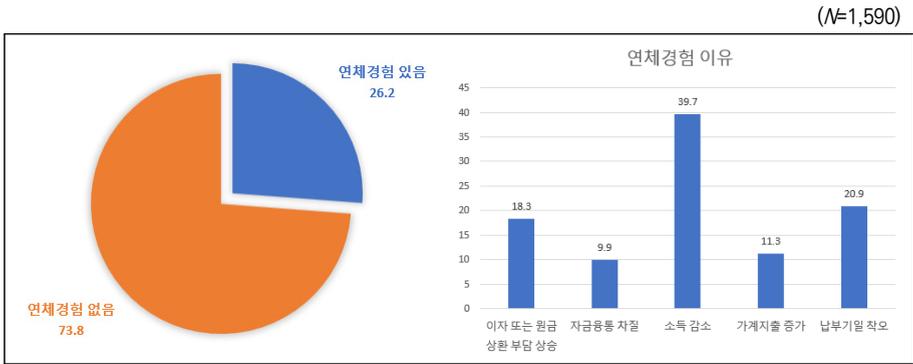


그림 IV-7. 연체 경험(3달/회 이상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날짜를 지나친 경험)

표 IV-7.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의 연체 경험

(N=1,590)

구 분		빈도(명)	비율(%)	
지난 1년간 3달/회 이상 원금 상환 혹은 이자지급 날짜 지나친 경험	전체	1,590	100.0	
	있음	416	26.2	
	3달/회 이상 납부일 지나친 이유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	76	18.3
		자금용통 차질	41	9.9
		소득 감소	165	39.7
		가계지출 증가	47	11.3
		납부기일 착오	87	20.9
	없음	1,174	73.8	

청년 전체(2,281명)를 대상으로 부채 보유 여부에 따른 연체 경험을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있는' 청년은 '부채가 없는' 청년과 비교하여 휴대폰, 월세, 보험료 등의 연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8). 특히 휴대폰 등 통신요금에 대한 연체 경험은 '부채가 있는' 청년이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 약 7.8%p 이상 높았고, 월세는 4.8%p, 사회보험료 혹은 세금은 6.3%p 더 높게 나타났다(표 I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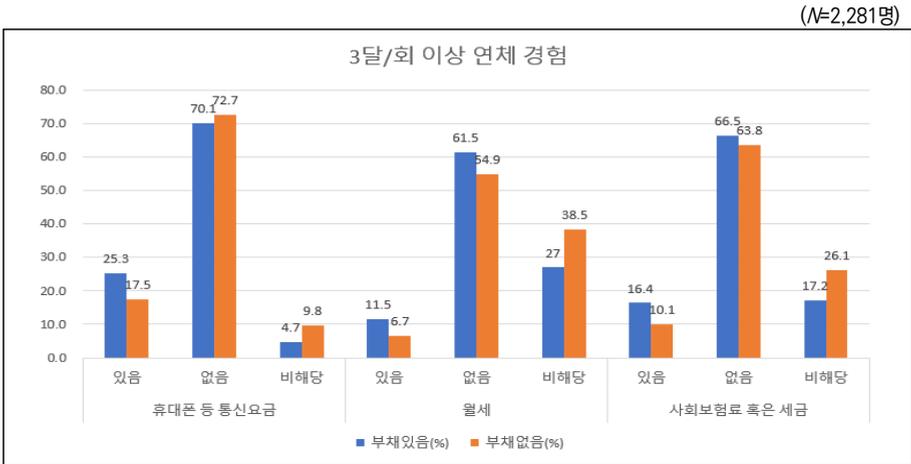


그림 IV-8. 3달/회 이상 연체 경험

표 IV-8. 3달/회 연체 경험

(N=2,281)

구 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3달/회 이상 연체 경험	휴대폰 등 통신요금	있음	402	25.3	121	17.5
		없음	1,114	70.1	502	72.7
		비해당	74	4.7	68	9.8
	월세	있음	183	11.5	46	6.7
		없음	977	61.5	379	54.9
		비해당	430	27.0	266	38.5
	사회보험료 혹은 세금	있음	260	16.4	70	10.1
		없음	1,057	66.5	441	63.8
		비해당	273	17.2	180	26.1

표 IV-9. 부채 부담 정도

(N=1,590)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원금/이자 생계 부담 정도	부담 없음	330	20.8	
	약간 부담됨	876	55.1	
	매우 부담됨	384	24.2	
원금 및 이자 부담으로 인한 생활비나 저축, 투자 축소 여부	줄이고 있음	1,189	74.8	
	↳ 주된 줄인 항목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	286	24.1
		레저, 여가, 문화비	269	22.6
		식품, 외식비	364	30.6
		의류 구입비	222	18.7
		교육비	12	1.0
		교통, 통신비	22	1.9
		내구제 구입비 (휴대폰, 자동차 등)	14	1.2
	줄이지 않고 있음	401	25.2	
	주요 부채 상환 가능성	대출기한 내 상환 가능	1,052	66.2
대출기한 지나더라도 상환 가능		446	28.1	
상환 불가		92	5.8	

표 IV-9는 부채를 보유한 청년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결과이다. 부채가 있는 청년의 약 80%(1,260명)가 원금과 이자 지급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고, 부채가 있는 청년의 74.8%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비나 저축,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들이 절감하고 있는 주요 항목으로는 식품 및 외식비(30.6%),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24.1%), 레저 및 여가 문화비(22.6%)가 주를 이룬다. 부채 상환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94.3%의 청년이 자신의 부채 상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중 66.2%는 대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8.1%는 대출기한이 지나더라도 상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채가 있는 청년의 5.8%는 현재의 부채 상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청년의 향후 부채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IV-9와 같다. 현재 부채를 가진 청년 중에서 향후에도 부채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재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 2.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만 19~24세와 만 25~29세 연령대에서는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들이 향후 부채를 계획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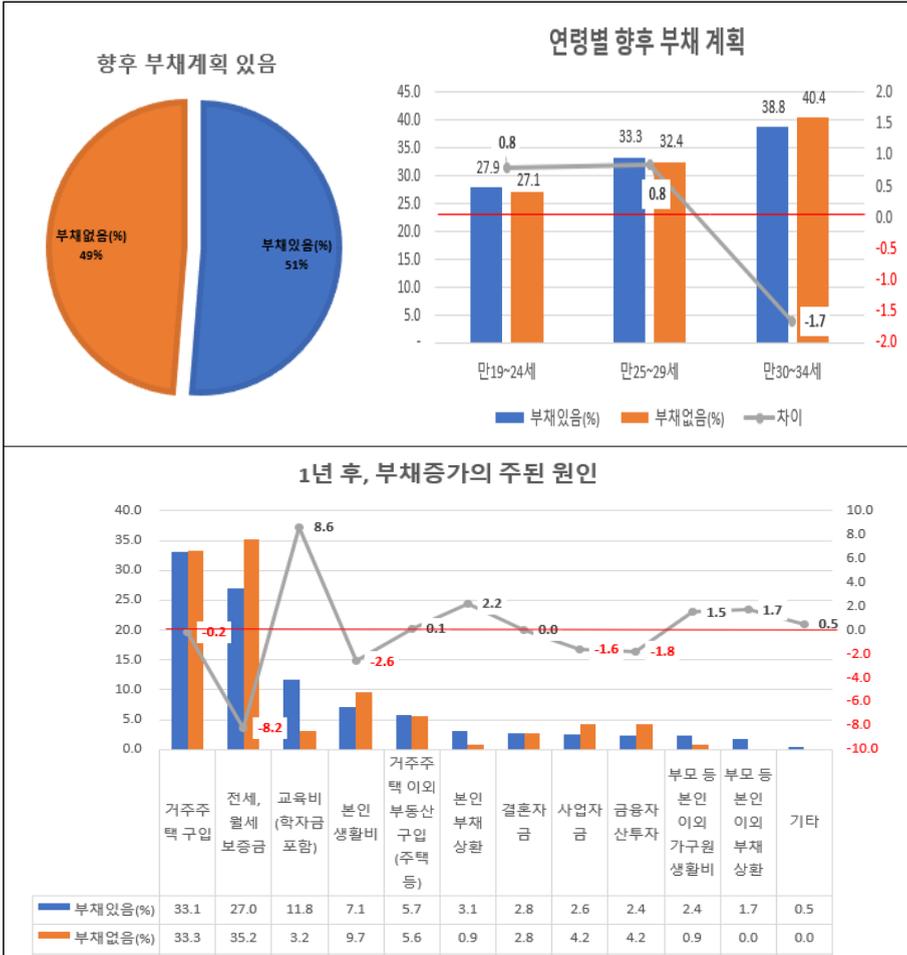


그림 IV-9. 향후 부채계획 유무

만 30~34세 연령대에서는 현재 부채가 없는 청년이 향후 부채를 가질 계획을 세우려는 경향이 현재 부채를 가진 청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의 과반수 이상(52.5%)이 향후 1년 후에 부채 규모가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6%이다.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의 33.1%는 거주주택 구입을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하였고, 이어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27.0%,

교육비(학자금 포함)가 11.8%, 본인의 생활비가 7.1%, 그리고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입이 5.7%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부채가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35.2%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33.3%가 거주주택 구입을, 9.7%가 본인 생활비를, 5.6%가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금(4.2%)과 금융자산투자(4.2%)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선택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부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의 대다수는 거주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부동산 관련 비용을 향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대상 전체(2,281명)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청년의 재무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장단기 재무목표 수립 및 점검, 금융정보의 습득 경로, 재무 및 금융 관련 교육과 상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다. 또한,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채무자 구제제도를 얼마나 인지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재무/금융 인식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장단기 재무목표 수립 및 재무상태(소득과 생활비, 재산과 부채 등)의 정기적 점검에 대한 응답에서, 부채가 있는 청년이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 전반적으로 재무관리 측면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있는 청년 중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6%로, 부채가 없는 청년의 18.2%와 유사한 수치이다(그림 IV-10).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 준수 정도의 경우,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해당’ 응답자의 비율이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 18.6%, 부채가 없는 청년의 경우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0). 특히 부채가 없는 청년의 경우 신용카드 미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체 응답 분포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해당’을 제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채가 있는 청년 중, 약 절반 이상(54.1%)이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V-10). 그러나 이 비율은 부채가 없는 청년에 비해 5.9%p 낮은 수준이다. 부채 유무와 관계없이 청년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 준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 부채가 없는 청년의 재무관리 인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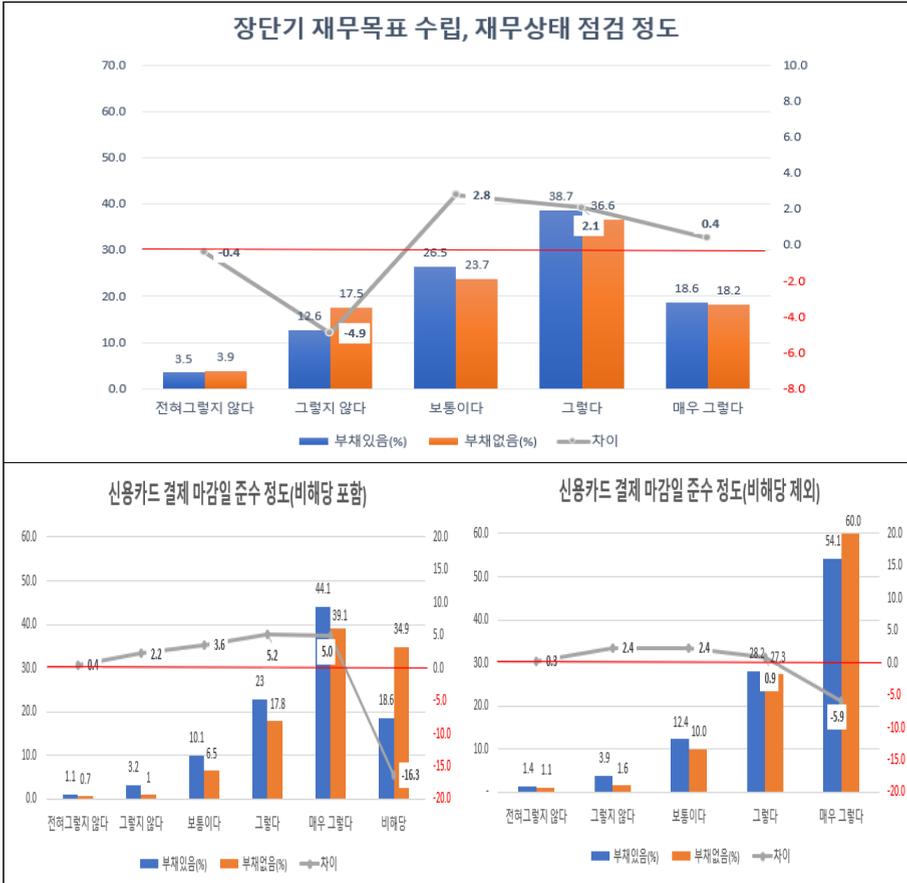


그림 IV-10. 재무관리 현황

재무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투자 포함)하고 있는지, 연금저축 등 노후설계 및 노후준비 상황, 청약통장 등 거주주택 마련 여부 등 총 3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조사이다. 그 결과, 부채가 없는 청년의 재무관리가 전체적으로 더 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 유무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이는 부분은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며, 부채가 있는 청년은 74.6%, 부채가 없는 청년은 85.0% '하고 있음'으로 응답하였다(그림 IV-11).

(N=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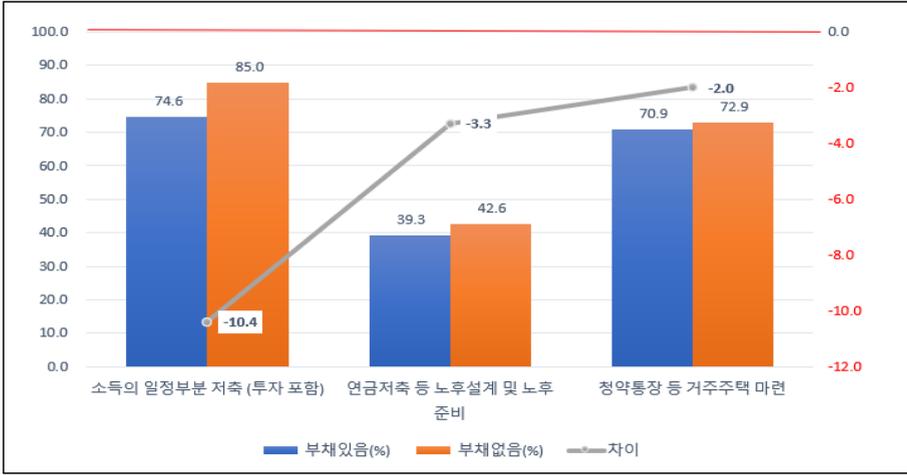


그림 IV-11. 재무관리 계획

소득과 지출 관리, 저축과 부채 등 금융정보 습득경로에 대한 조사결과(그림 IV-12, 표 IV-10), 부채유무와 상관없이 청년의 약 절반 정도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금융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청년은 인터넷 검색(47.3%), 부모 등 가족(20.6%), 은행 등 금융기관(14.0%), 친구, 동료 등 지인(12.0%) 순으로 금융정보를 습득하

(N=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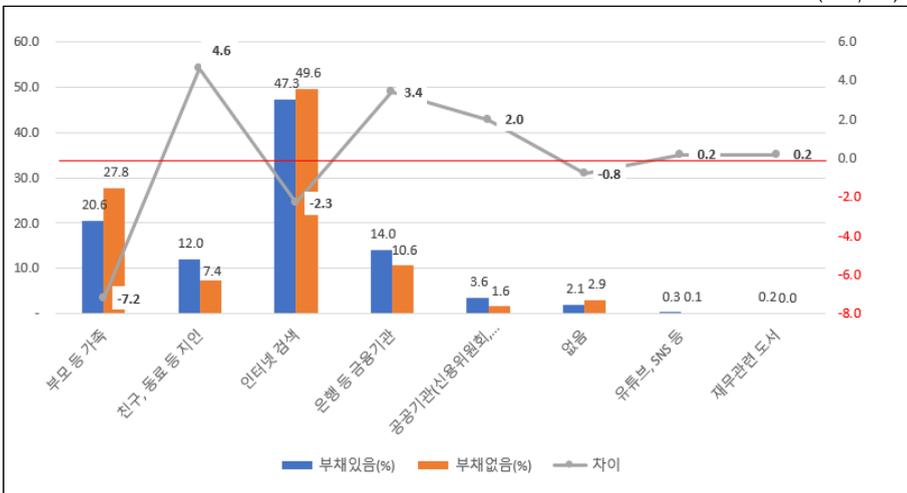


그림 IV-12. 금융관련 정보 습득 경로

표 IV-10. 금융관련 정보 습득 경로

구 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소득과 지출 관리, 저축과 부채 등 금융 관련 정보 출처	부모 등 가족	328	20.6	192	27.8	
	친구, 동료 등 지인	190	12.0	51	7.4	
	인터넷 검색	752	47.3	343	49.6	
	은행 등 금융기관	222	14.0	73	10.6	
	공공기관(신용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등)	57	3.6	11	1.6	
	없음	34	2.1	20	2.9	
	기타	유튜브, SNS 등	4	0.3	1	0.1
		재무관련 도서	3	0.2	-	-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유튜브, SNS 등과 재무 관련 도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은 인터넷 검색(49.6%), 부모 및 가족(27.8%), 은행 등 금융기관(10.6%), 친구, 동료 등 지인(7.4%) 순위로 부채가 있는 청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서로 약간 달랐다. 특히 부채가 없는 청년과 비교하여 부채가 있는 청년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금융정보 습득보다 친구, 동료 등 지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무/금융교육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부채가 있는 청년의 22.8%와 부채가 없는 청년의 17.8%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전체 청년의 70% 이상은 재무/금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교, 평생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부채가 있는 청년은 학교, 평생교육기관에서 41.1%,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30.0%, 금융기관(은행)에서는 24.4%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채가 없는 청년은 60% 이상이 학교나 평생교육에서 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3). 이러한 결과는 재무/금융교육의 접근성과 청년의 교육 이용 패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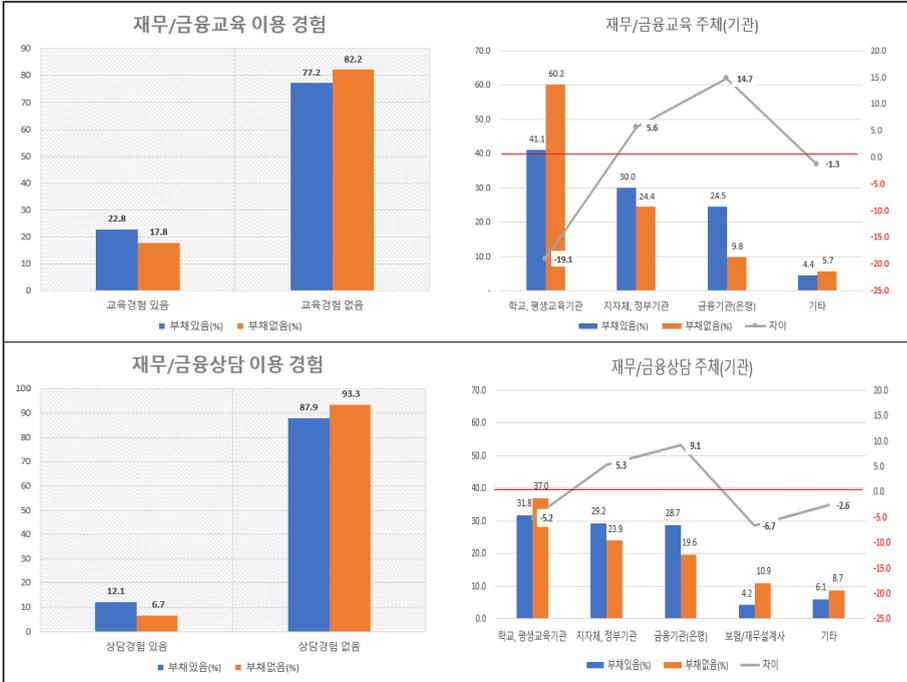


그림 IV-13. 재무/금융교육 및 상담 경험

청년의 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및 법원에 의한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14와 같다. 부채가 있는 청년의 16.5%가 해당 제도에 대한 문의나 상담경험이 있으며, 부채가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는 청년의 절반 수준인 7.8%만이 문의나 상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상담 후 대다수(60.3%)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였고, 부채가 없는 청년은 이용률이 3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한 제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부채가 있는 청년과 부채가 없는 청년 모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¹³⁾ 제도의 활용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가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가 연체 전 혹은 연체 30일 이하인

1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 인 사람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이며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N=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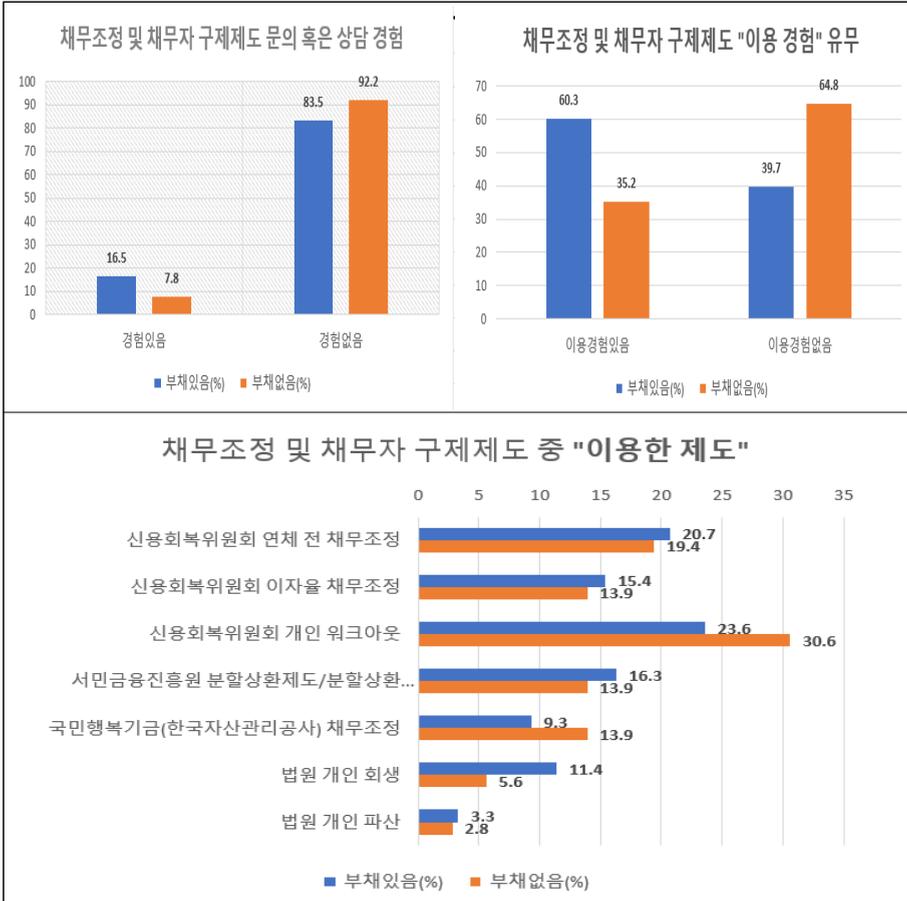


그림 IV-14.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중 이용한 제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보다 이미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응답자 총 2,281명 중 현재(2023.4.)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부채가 있는 청년 133명, 부채가 없는 청년 18명을 포함하여 전체 151명(전체의 6.6%)이 해당한다.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 316명 중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97명에 해당한다(표 IV-11).

표 IV-11.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구 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현재(2023.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	해당	133	8.4	18	2.6
	비해당	1,457	91.6	673	97.4
구 분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경험 있음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경험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77	100.0	139	100.0
현재(2023.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	해당	97	54.8	22	15.8
	비해당	80	45.2	117	84.2

4) 청년(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청년의 부채 현황은 청년의 가구 구성, 혼인상태,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들 가구의 일반사항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응답자 가구의 일반사항이다.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청년의 경우, 1인 가구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명(24.3%), 3명(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없는 청년은 4명 가구가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 가구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여부에 대해서는 부채가 있는 청년은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53.2%이며, 부채가 없는 청년은 30.4%가 해당된다. 혼인상태는 기혼상태보다 미혼인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는 청년보다 부채가 없는 청년의 미혼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42.3%, 부모로부터 독립했다는 비율은 47.8%인 것으로 유사하였고, 부채가 없는 청년은 절반 이상의 청년(63.7%)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와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도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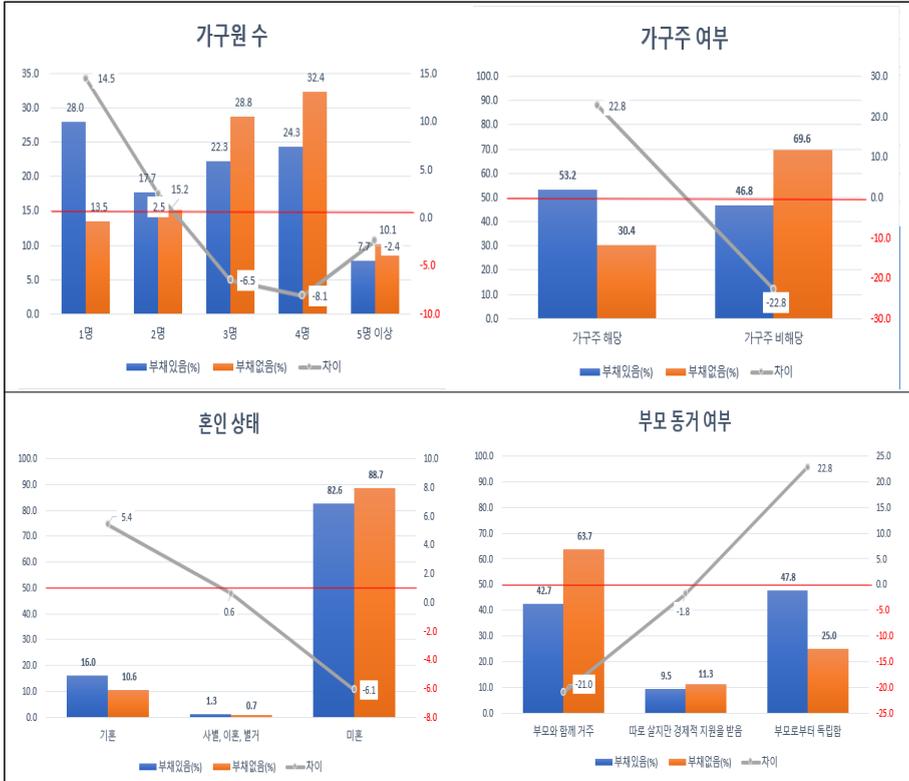


그림 IV-15. 가구 일반 현황

가구 및 개인의 총자산 현황은 표 IV-12와 같다. 가구 총자산은 부채유무와 상관없이 대체로 5천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5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 해당된다. 개인 총자산 역시 5천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며,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도 약 18~22%에 해당한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20% 미만이며, 80% 이상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청년의 평균 투자 금액은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 976.7만 원이며, 부채가 없는 청년은 656.5만 원이다. 거주하는 집의 점유 형태는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 자가 35.2%이며, 다음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29.5%, 전세가 26.2% 순이었다. 그에 반해 부채가 없는 청년의 과반수가 자가(51.5%)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가 19.0%, 전세가 18.2% 순이었다.

표 IV-12. 가구 및 개인 총자산 현황

(N=2,281)

구 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가구 총자산	없음	244	15.3	80	11.6
	5천만 원 미만	636	40.0	256	37.0
	5천만~1억 5천만 원 미만	296	18.6	127	18.4
	1억 5천만~3억 원 미만	214	13.5	100	14.5
	3억~5억 원 미만	88	5.5	61	8.8
	5억~10억 원 미만	71	4.5	49	7.1
	10억 원 이상	41	2.6	18	2.6
개인 총자산	없음	351	22.1	125	18.1
	5천만 원 미만	789	49.6	394	57.0
	5천만~1억 5천만 원 미만	238	15.0	114	16.5
	1억 5천만~3억 원 미만	121	7.6	37	5.4
	3억~5억 원 미만	55	3.5	13	1.9
	5억~10억 원 미만	23	1.4	6	0.9
가상자산 투자	10억 원 이상	13	0.8	2	0.3
	있음	289	18.2	108	15.6
	투자금 (만 원)	평균	976.7	656.5	
	최소값/최대값	1 / 30,000	1 / 20,000		
거주하는 집 점유형태	없음	1,301	81.8	583	84.4
	자가	559	35.2	356	51.5
	전세	416	26.2	126	18.2
	보증금 있는 월세	469	29.5	131	19.0
	보증금 없는 월세	41	2.6	17	2.5
	무상 거주	105	6.6	61	8.8

청년의 부채는 개인 및 가구의 총자산 현황뿐 아니라, 재산의 정도, 상속 및 증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나 친지로부터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적이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채가 있는 청년은 29.6%, 부채가 없는 청년은 31.3%가 해당한다.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험이 있는(혹은 받을 예정) 청년의 약 80% 이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재산이 아닌 부채에 대한 상속·증여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부채가 있는 청년은 15.7%, 부채가 없는 청년은 4.6%이며, 부채의 상속·증여 주체 역시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가 80% 이상이었다(표 IV-13).

부채의 상속·증여는 그들 현재 상황에 대체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채가

표 IV-13. 부채유무에 따른 재산 상속·증여 현황

(N=2,281)

구 분		부채 있음		부채 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재산상속·증여유무	있음 (받았거나, 받을 예정)		470	29.6	216	31.3	
	↳ “있음”의 경우, 재산 상속·증여 주체 (복수응답)	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	402	79.9	195	85.2	
		나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80	15.9	27	11.8	
		나 또는 배우자의 친척	21	4.2	7	3.1	
	없음		1,120	70.4	475	68.7	
부채상속·증여경험 유무	경험 있음		74	15.7	10	4.6	
	↳ “경험있음”의 경우, 부채 상속·증여 주체	소계 (중복응답)		84	100.0	10	100.0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66	80.5	8	80.0
		금액 (만 원)	평균	3,164.4		13,837.4	
			최솟값/최댓값	100 / 20,000		600 / 50,000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16	19.5	2	20.0
		금액 (만 원)	평균	3,306.3		5,000.0	
	최솟값/최댓값		100 / 15,000		5,000 / 5,000		
	↳ “경험있음”의 경우, 현재 경제상황에서 부채 부담 정도	전혀부담안됨		8	10.8	2	20.0
		별로부담안됨		20	27.0	3	30.0
		보통		22	29.7	3	30.0
약간부담됨		18	24.3	0	0.0		
매우 큰 부담됨		6	8.1	2	20.0		
경험 없음		396	84.3	206	95.4		
상환해야 하는 부모나 친지의 부채 유무	있음		458	28.8	122	17.7	
	없음		1,132	71.2	569	82.3	

있는 청년은 62.1% 이상이, 부채가 없는 청년은 50%가 보통 이상의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부채가 있는 청년 중 28.8%는 부모나 친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채는 없지만,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있었다. 이는 부채가 없는 청년(17.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종합해볼 때, 부채가 있는 청년은 재산의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비율이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부채의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은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현재 부채의 상속·증여는 없지만 상환해야 하는 부모나 친지의 부채 역시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재산 및 부채의 전가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청년 금융취약 원인 분석

1) 금융취약의 조작적 정의

본 절에서는 금융취약성의 몇가지 정의에 따라, 청년의 금융취약성의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앞서 2장에서 금융취약성은 과중채무, 체납, 다중채무, 불법사금융 채무 여부, 신용수준,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책지원 대상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그 정의가 다르며, 합의된 방식이 아직 없다.¹⁴⁾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다중채무(3건 이상의 다중채무)”, “채무의 질(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내 금융권 이외 채무 여부)”를 금융취약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표 IV-14). 추가적으로 1)휴대폰 등 통신요금, 2)월세, 3)사회보험료 혹은 세금 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주거·생활비에 대한 연체 경험(3개 항목 중 2건 이상 연체)을 함께 분석한다. 연체 경험은 해외 문헌에서 금융취약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표로 대표성이 인정된다.

표 IV-14. 금융취약성의 조작적 정의

구분	개념	조작적 정의
다중채무	일정 개수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 건수(부채 종류와 부채기관이 다른 경우, 각 1건으로 응답) (3건 이상의 다중채무)
채무의 질	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내 금융권 이외 채무 여부	부채 종류에서 휴대폰 등 내구제 대출(7번),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8번)이 한번이라도 포함된 청년(⇒ 고위험 부채보유 청년)
연체경험	일정기간 이상 연체를 지속한 경험의 여부	3개월 이상 휴대폰 등 통신, 월세, 사회보험료 총 3건 중 2건 이상 연체 경험이 있는 청년

14) 과중채무의 경우, 소득 등 상환 능력 대비 채무액의 규모로 가구원 1인당 총 채무액, 순부채의 비율,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 소득 대비 부채액의 비율, 자산 대비 부채액의 비율(Betti et al., 2007) 등 산출식도 다양하며, 과중채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선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게 없어 연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용수준은 신용점수 등 재화나 서비스 등 구입을 위한 자금을 연기할 수 있는 채무 이행능력과 관련한 지표 산출의 어려움이 있으며,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책지원 대상과 관련한 지표는 채무자 구제제도 경험(B7-1문항)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금융취약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청년의 금융취약 원인

청년의 일반적 특성과 금융취약성(다중채무, 채무의 질, 연체경험)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표 IV-15). 30대 청년층(만 30~34세)과 비교하여 만 19~24세, 만 25~29세의 청년층이 다중채무를 보유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연체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은 아직 초기 경력 단계에 있거나 대학생이므로 많은 부채 종류를 보유하기 보다는 소액의 금융거래에서의 연체경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미혼 청년보다 사별, 이혼, 별거한 청년이 연체 확률이 더 높으며, 본인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다중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낮아지고, 채무의 질이 나빠질 확률은 높아졌다. 이는 소득이 높은 청년의 경우, 그들의 높은 소득을 기반으로 신용도가 좋은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금액을 한번에 대출받을 경향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불법사금융에 접근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동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보다 오히려 다중부채를 가질 확률이 높고, 연체를 경험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계층 여부에 있어서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계층이 많을수록 다중채무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채무관리 인식과 경험에 있어서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룹일수록 다중채무일 가능성은 낮으며, 특히 5개 이상의 다중채무를 보유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그룹일수록 다중채무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5개 이상의 다중채무일 가능성도 높음), 재무관리를 준비할수록 5개 이상의 다중채무일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이 높은 부채를 가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금융 교육은 청년의 금융취약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재무/금융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일수록 다중채무일 가능성은 낮고, 위험성이 높은 부채를 가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소액 연체를 가질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일수록 위험성이 높은 부채를 가질 확률이 높고, 연체경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관리 인식과 경험 등은 부채경험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데, 이는 역인과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다중부채, 채무의 질, 연체

경험 등이 많을수록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 상담경험 등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혹은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보다 다중채무를 보유할 확률이 높고,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청년 역시 다중채무를 보유할 확률이 높다. 이는 부채가 필요한 청년에서는 부모 도움 등의 경제적 안정감과 높은 신용도가 다중채무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30대 청년층보다 20대 청년층(만 19~29세)이, 본인소득이 높을수록, 재무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다중채무를 보유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본인 소득이 높은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건 이상의 소액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및 채무자구제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 불법사금융 등의 위험성이 높은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재무관리 계획을 하는 경우, 재무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위험성이 높은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휴대폰 등 통신요금, 월세, 사회보험료 혹은 세금 등의 소액 결제 연체 경험이 높은 집단은 30대 청년층보다 20대 청년층일수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상담 경험이 있거나, 채무조정 및 채무자구제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체 경험이 낮은 집단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따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해당한다.

표 IV-15. 청년 금융취약성 원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금융취약성			
		다중채무 (3건 이상)	다중채무 (5건 이상)	채무의 질	연체경험
		(1)	(2)	(3)	(4)
성별 (여자=0)	남자	0.092 (0.094)	0.149 (0.101)	0.201 (0.179)	-0.040 (0.140)
연령별 (만 30~34세=0)	만 19~24세	-0.579*** (0.140)	-0.707*** (0.153)	0.312 (0.250)	0.389* (0.207)
	만 25~29세	-0.270** (0.116)	-0.266** (0.126)	-0.137 (0.219)	0.529*** (0.170)
본인소득로그		-0.132** (0.066)	-0.255*** (0.070)	0.348** (0.136)	-0.012 (0.097)
지역별 (강원제주=0)	서울	0.178 (0.250)	-0.297 (0.267)	-0.182 (0.428)	-0.065 (0.349)
	경기인천	-0.305 (0.243)	-0.471* (0.259)	-0.005 (0.411)	-0.181 (0.342)

	충청권	0.110 (0.264)	0.081 (0.279)	0.062 (0.451)	-0.665* (0.389)
	경북권	-0.143 (0.276)	-0.269 (0.294)	-0.261 (0.480)	0.155 (0.382)
	경남권	-0.102 (0.258)	-0.107 (0.274)	-0.495 (0.457)	-0.125 (0.361)
	전라권	-0.151 (0.277)	-0.270 (0.295)	-0.065 (0.485)	-0.299 (0.399)
혼인상태 (미혼=0)	기혼	-0.014 (0.148)	0.115 (0.167)	-0.383 (0.280)	0.051 (0.207)
	사별, 이혼, 별거	0.462 (0.439)	-0.384 (0.543)	0.406 (0.614)	1.029** (0.501)
부모동거여부 (부모로부터 독립=0)	부모와 함께 거주	0.606*** (0.110)	0.903*** (0.122)	-0.391* (0.200)	-0.648*** (0.159)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 받음	0.275 (0.175)	0.687*** (0.191)	-0.291 (0.320)	-0.569** (0.250)
취약계층 여부(해당 없음=0)		0.002 (0.142)	-0.081 (0.156)	0.399* (0.230)	0.536*** (0.180)
지식계층 여부(없음=0)		-0.004 (0.044)	0.000 (0.048)	0.001 (0.082)	-0.061 (0.064)
삶의 만족도 (불만족=0)	만족	-0.260* (0.139)	-0.183 (0.150)	-0.832*** (0.253)	-0.192 (0.197)
	보통	-0.111 (0.133)	-0.066 (0.144)	-0.254 (0.219)	-0.246 (0.187)
다중채무 및 연체여부	다중채무 (3건 이상)			-0.182 (0.175)	0.120 (0.135)
	연체 (2건 이상)	0.128 (0.134)	-0.059 (0.151)	0.716*** (0.207)	
재무관리 인식 (전혀그렇지않다=0)	재무목표 수립 등	-0.042 (0.046)	-0.085* (0.050)	0.137 (0.087)	-0.078 (0.067)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 준수 여부	0.088*** (0.023)	0.155*** (0.025)	-0.057 (0.042)	-0.048 (0.034)
	재무관리 계획(없음=0)	0.019 (0.051)	0.240*** (0.057)	-0.399*** (0.091)	-0.058 (0.073)
재무/금융 교육 및 상 담 여부 (없음=0)	재무교육	0.019 (0.125)	-0.048 (0.135)	-0.048 (0.240)	0.329* (0.171)
	재무상담	-0.300* (0.171)	-0.349* (0.194)	-0.945*** (0.360)	0.745*** (0.201)
채무조정 및 채무자구제제도 이용경험		0.200 (0.144)	-0.221 (0.163)	0.954*** (0.218)	1.037*** (0.168)
Constant		0.295 (0.488)	-0.256 (0.521)	-3.387*** (0.931)	-1.155* (0.701)
Observations		2,115	2,115	2,115	2,115
pseudo-R-squared		0.030	0.068	0.101	0.104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

조사대상 청년 2,281명 중 1,590명(69.7%)은 현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며, 나머지 30.4%인 691명은 부채가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이다. 부채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만 25~29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채 보유 비율이 높다. 학력 수준에서는 대학/전문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부채가 없는 비율이 높았으며, 고졸 이하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그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경제활동 상태와 소득 수준도 부채 보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서는 부채 보유 비율이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청년 중에서도 부채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채 보유 청년 중 26.2%는 지난 1년 동안 연체 경험이 있었고, 그 주된 원인으로는 소득 감소, 납부기일 착오 등이 해당된다.

부채의 종류와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융기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향후 부채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부채 보유 청년 중 52.5%가 1년 후에 부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은 부채의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부채의 증가원으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거주주택 구입, 전세나 월세 보증금, 그리고 교육비 등의 필수적인 경비의 증가가 주요 부채증가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청년들의 금융상태와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재무적 과제를 깊이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조사대상인 2,281명의 청년 중 부채를 가진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무상태를 더 자주 점검하며, 특히 재무목표 설정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금융정보의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부채가 있는 청년은 부모나 금융기관보다 친구나 동료에게 금융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재무 및 금융 관련 교육의 경우,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청년들의 부채 상황에 따른 정부의 채무 조정 및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측면에서는 청년의 80~90%가 이러한 제도에 문의 혹은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는 청년 중 상담 후 60%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은 대부분의 경우 4인 이상의 가구에 해당한다. 가구 및 개인의 자산 현황에서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 높지 않았다. 재산 및 부채의 상속 및 증여는 청년들 중 약 30%가 부모나 친지로부터 재산 또는 부채를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험이 있었다. 부채가 있는 청년은 재산의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비율이 부채가 없는 청년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부채의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은 부채가 없는 청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현재 부채의 상속·증여는 없지만 상환해야 하는 부모나 친지의 부채 역시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재산 및 부채의 전가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청년이 다중부채 및 불법사금융 등 위험성이 높은 채무를 가지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의 연령대, 혼인상태, 소득,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의 다양한 요인이 금융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30대 청년층에 비해 다중채무 확률은 낮지만 연체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청년은 다중부채 확률은 낮지만, 불법사금융에 접근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은 독립한 청년보다 다중채무를 가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불법사금융 등의 위험성이 높은 악질 채무를 가질 확률은 낮으며, 연체경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청년은 다중채무 확률이 낮지만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을 준수하는 청년은 다중채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금융 교육은 금융취약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지만,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은 다중채무 확률이 낮았으나 소액 연체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의 금융취약성은 개인의 특성, 경제적 상황,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취약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다중채무의 경우, 대다수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근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은 채무 상환 능력이 현재는 충분하지만, 다중채무가 불법사금융과 같은 높은 위험성을 갖는 부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위험성이 높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소액이라도 연체 경험이 빈번한 금융취약성이 높은 청년들을 찾아내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부채 문제는 단순한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지인,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센터를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채널에서 정확한 정보를 청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식적인 정보전달 창구가 많아질수록 청년의 금융 리터러시 향상과 부채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5장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경험

- 1. 질적 조사 개요
- 2. 청년의 금융취약성 유발 요인
- 3. 청년 금융취약 문제 발생과 심화 경위
- 4.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의 대응 노력
- 5. 정책적 시사점

1. 질적 조사 개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한국은행, 2020. 6.)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청년층 1인 가구 증가와 정부의 청년가구 주거안정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전월세 자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p.23). 두 번째는 30대의 주택매입 수요가 확대되었다. 2020년 당시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30대의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된다(p.24). 세 번째는 개인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p.24). 주식 투자자금은 주로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는 기술혁신에 따른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다.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의 이용에 익숙한 청년층이 비대면 신용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p.25).

본 장은 이와 같은 청년층 부채 증가세의 맥락에서 청년층 취약차주¹⁶⁾가 증가하면서 부채로 인한 청년들의 생애과정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애주기상 소득능력이 낮은데다 최근 노동시장 기회구조 악화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진로준비, 주거비 등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은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청년부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낮은 소득과 자산수준으로 인해 신용능력이

15) 5장은 김문길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16)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자이거나 NICE기준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를 의미한다.

낮기 때문에 높은 조달비용을 감내해야하며, 이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비금융권 대출까지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보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익명성을 선호하는 청년층에게 비대면 대출은 높은 조달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하기 편리한 조달방법이 된다. 취약차주가 저소득자이거나 저신용자이면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금융취약성으로 연결되고, 이는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이행 성과나 행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은 앞서 수행하였던 2차 자료 분석과 실태조사 분석과 같은 양적 접근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의 금융취약성과 정책소의 경험을 청취하여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실제 과중한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채무조정,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 청년들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표집상의 문제가 있어 청년 금융상담과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수의 다양한 금융취약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금융생활과 관련한 서사를 쫓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대상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한 제언(내방 청년들의 정책요구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책제언)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의 조사대상자로서의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장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기 위해 연구진은 그간 청년금융 또는 청년부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해온 세 개 지역(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기관을 접촉하였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부산광역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의 책임자를 포함한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세 기관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광주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청년부채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한 것으로 청년부채 사업단체를 조직하고, 이후 청년부채사업 전담 전문 단체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광주지부로 설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2019년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등기하면

서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청년 대상 생활경제 교육, 1대1 생활경제 컨설팅, 생활경제 상담사 양성, 청년부채ZERO 캠페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말에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청년드림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청년단체에서 출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복지재단이 2013년 7월에 설립한 조직으로 복지재단 내 중앙센터를 포함한 12개 지역센터(청년특화센터 1개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악성부채 확대예방(재무상담, 교육 등), 가계부채 규모 관리(공적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소송구조비용 지원 등)와 같은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긴급복지지원 연계, 채무자 대리인 지원, 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핵심 업무로 두고 있다. 이것이 다른 지역 기관들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이다. 1개의 청년특화센터(청년동행센터)는 기존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근 청년들의 부채상당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 해 12월에 설립되었다. 부산의 경우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익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조직이다. 지난 해 6월부터 부산시의 위탁으로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청년특화 센터를 설치한 것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센터의 상담사들은 모두 신용보증재단 소속 상담사들로 신용보증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광주는 청년정책의 기반에 금융지원에 특화한 사례라 할 수 있고, 서울과 부산은 각각 금융복지와 신용보증의 기반에 청년에 특화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세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두 상이한 설립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 청년 금융지원이

표 V-1. 초점집단면접 진행 개요

지역	기관	일시, 장소	면담자
광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6.30.(금) 14~16시 광주청년드림은행	박○민, 주○연, 김○희, 범○휘
서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7.5.(수) 14~16시 청년동행센터	김○영, 양○림, 전○훈, 한○휘
부산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7.6.(목) 14~16시 부산신용보증재단	장○임, 이○림, 김○석, 정○중

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기관별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자는 표 V-1과 같다.

연구방법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이다. 설문은 1. 내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 배경, 2. 채무를 지게 된 원인과 경로, 3. 채무문제에 대한 개인의 대응 방식과 가족 및 지인 등 지지체계, 4. 금융취약청년의 발굴방법, 지원 내용과 방법, 사후관리 방법, 5. 정책제안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았으며, 2023년 6월 27일자로 승인을 득하였다(제2023-058호).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설문지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진행에 앞서 역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하 본문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실명을 병기하지 않고, ‘광주’, ‘서울’, ‘부산’과 같이 상담센터의 해당 지역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2. 청년의 금융취약성 유발 요인

채무상당과 채무조정을 위해 상담센터를 내방한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가족 배경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모아졌다. 모든 내방자에 대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지만 상담사들이 인지하는 공통적인 특성은 취약한 가족 배경에서 금융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즉, 가족의 취약성이 청년의 금융취약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 등이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1) 가족 부양과 빛의 대물림

청년들은 가족 문제, 부모의 질환, 부모의 소득능력 상실, 기초보장 수급가구, 자녀인 청년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에 따라서는 준비되지 않은 독립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주거비 등)을 감당하면서 원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서 부모의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 청년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청년이 채무를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금융채무 불이행 또는 연체 등의 사유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부모가 생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자녀까지 연체가 되거나 채무불이행까지 이르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 같이 취약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데 급급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즉, 가족 속성적 취약성이 청년 부채를 발생시키고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부채의 대물림으로 인해 내방하는 청년의 특성은 초기 청년대가 다수라는 특징이 있다. 생애소득 프로파일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일찍이 부채의 짐을 지게 되면서 공공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패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를 본인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직 근로 능력이 좀 부족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사망하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이었는데 미성년자 때부터 혼자서 생활을 하고 현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탬을 하다가 그 부분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점점점 불어온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제가 그거는 이제 개인 회생을 제가 조력을 해드렸고 또 우리가 경쟁사회 청년들이 그렇게 내몰려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

“부모의 경제적 습관이나 그 수준이 이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가 대출에 익숙하고 빌려서 뭔가를 하는 거에 익숙한 자녀분들이 그 자녀분들도 대출에 익숙합니다. 또는 자녀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상담 중에 빚이 왜 이렇게 많냐 물어보니까 사실 제 빚은 아니고 부모님의 빚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부모님은 당신 명의로 하냐고 질문하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꼭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레 나는 내 게 이미 망가졌으니까 난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나도 대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런 뭔가 생각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좀 그런 게 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부산)

부모의 채무가 직접적으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빈곤 대물림의 메커니즘에 의해 자녀세대도 부채를 지게 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세대 간 소득이동성 또는 계층이동성이 저하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즉, 빈곤한 가구의 자녀가 빈곤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채무의 이동성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여타의 지지체계가 없는 청년들의 경우도 부채와 같은 자구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저는 금융 취약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냥 지지 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지식 정보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자립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가족의 조력, 사회적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어린 친구들인 경우에는 사실은 채무조정에 가기 전에 가족의 조력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 문제가 해결됐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의 조사를 봤을 때는 대부분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거나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답이 되게 높았어요” (서울)

가족의 채무 부담을 공유하게 되면서 금융취약성이 심화되고, 결국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단절되기도 한다.

“부모님께서 이제 한 분이 아프거나 소득이 없으신 가정의 자녀분들은 가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족들이 보기에 이제 돈을 잘 번다 생각하니까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자연스레 그에 따라서 또 부채도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하고의 단절을 고민하는 상담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산)

2) 질병

본인의 질병도 대출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강상 이유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을 경우는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다. 상병수당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공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팠을 때 빛이 생기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데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되고 아파서 돈이 필요한데 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때 비상금이나 어떤 안전망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 그냥 바로 빛이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되더라고요. 20대 30대는 보험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상황이고). 상병수당이랑, 최근에 들었는데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플 때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상병수당과 같은) 사회적 제도들이 완비될 필요...” (광주)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심리·정신건강 유병률과 더불어 직장 내 갑질이나 경직적인 조직문화, 보상이 따르지 않는 추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도 지속적 근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 상담센터 내방자 중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과거 직장에서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된 사례였는데, 우울증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파산신청으로 연계된 사례다.

“최근에 상담을 조금 꽤 길게 했던 분이 청년층이었는데 그분은 근로 활동이 좀 어려운 분이었어요. 심리적으로 기존에 일을 할 때 좀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우울증이 좀 깊게 왔구요. 그 부분에 대한 부채 해결이 안 되니까 되게 지급불능 된 시기가 굉장히 오래 길었고 그 상황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파산을 신청을 도와드렸거든요.” (서울)

3) 청년세대의 선호 특성

공식적이고 공공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불신에 따라 사적 해결을 선호하는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세대가 지금 하는 관계 문제가 저희가 계속 나오는 게 약간 데이트 피싱이나 이런 것들도 어쩔 때 약간 이제 온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면에

대한 두려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주하는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그 과정에서 위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이제 공적 제도 안으로 계속 유입되는 중인데 계속 이제 이렇게 사적 영향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그 사례 중에 보이스포싱 해결 하려다가 블로그에 자기 개인 정보 지워달라는 사 업체에다가 돈을 줘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현저히 현 세대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그 부분이 사실 금융 취약의 문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의아한 건 치면 정책이 굉장히 확장됐고 오히려 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제도가 훨씬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가 그래요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

쉽게 접할 수 있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환경도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이 비적정 대출에 접근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대출이 필요하지만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행동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광고성 정보, 즉 대출업체(주로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권)가 게시하는 광고성 정보들이다. 가장 쉽게 노출되면서 가장 친절한 정보가 제공되는 곳은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은행권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다. 광고성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높은 조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신용능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 식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인터넷이나 SNS 보면 대출 통합해 준다 또는 다 합쳐서 묶어서 금리를 낮춰준다라고 광고를 하는 곳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실제로 대출은 금리는 안 낮춰주면서 다른 회사 금융 대출로 유도하는 거죠.” (부산)

한편,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청년들 중에서도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떠도

는 수많은 정보들이나 이를 접한 주변 지인들을 통한 정보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혹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로로 대출을 받게 된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몸소 경험한 사례를 신뢰할 만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같은 경로로 대출을 받는 청년들의 수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4) 소비성향과 재무관리 지식 부족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여 소득원이 마련된 경우 자신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계획적인 지출로 인해 채무가 쌓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통상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간접적 경험으로 체득하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혹은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급여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죠. 내가 생활했을 때 생활비가 굉장히 우리가 취업하게 되는 카드사에서 카드 만들려고 연락이 오죠. 그럼 내가 벌어보지 못한 금액조차도 내가 써보지 못한 생활비인 거지. 그러면 신용카드 만들고 이제 신나게 써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지출을 통제하고 이렇게 쓰지 못하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생활비를 쓰다 보면 지출이 잘 관리가 안 되고 불어나고 이걸 내가 또 관리하지 못하니까 돌려 맡기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는... 우리가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발생하지 않나...” (서울)

“우리 기관에 방문하시는 청년분들 중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기보다 대출을 내서 빨리 수익을 보시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절제나 의지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예전보다는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과소비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부산)

5) 문턱 낮은 대출상품 증가

대출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청년부채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먼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용도 불안정하여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들에게 접근가능한 소액대출 상품들

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인터넷 은행들이 출시하고 있는 일명 '비상금대출'로 알려진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비교적 쉬운 보증절차를 통해 단시간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300만 원 이하의 소액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형편이다. 윤덕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은행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기준 해당 대출상품의 연체액이 약 200억원을 넘어섰다. 전술했듯이 낮은 대출 문턱으로 인해 20대, 30대 대학생이나 무직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보니 연체액 가운데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거의 6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헤럴드경제, 2023. 9. 17).

6) 작업대출, 대출사기, 그리고 변종들

사정이 급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출기관이나 대출조건을 따져보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청년채무 문제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캠퍼스 펀드'를 들 수 있다. 대학생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으로, 자금이 필요한 대학생과 일반 투자자를 P2P(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재학중인 대학교와 학과별로 신용등급을 매기고 재학증명을 하면 소액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대출 원가 급등으로 법정 최고금리(20%) 규제가 강화되자 더 이상 금리를 높일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같은 온투업체로 비드펀딩과 그래프펀딩도 폐업을 한 바 있다. 캠퍼스 펀드는 새로운 개념의 진보적인 대출상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로맨스 스캠(로맨스 피싱)'이라고 해서 SNS에서 이성(혹은 동성)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 있다.

이른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경기도,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총 7개에 대해 합동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한 업체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 연락처, 직장, 연봉 등 개인식별 정보뿐 아니라 대출 및 연체 이력과 신용점수 등의 신용정보도 포함되었다고 한다(한겨레, 2023. 5. 23).

그리고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행태도 청년부채 발생과 악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과 2006년 사이 신용카드 규제완화와 신용카

드사의 경쟁 과열로 소득능력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 무직자들, 심지어 미성년자들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대규모의 (당시 용어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던 이른바 ‘카드대란’이라고 불렸던 사건이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돌려막기’가 횡횡하는 등 채무자의 파산이 이어졌고, 이는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의 파산으로도 이어졌다. 이는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거시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회복세에 있던 경기를 다시 경색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각종 신용카드 산업과 관련한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규제체계와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에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현재 소득이 없어도 평잔 등을 근거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잔고와 무관하게 소비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신용카드로 인해 소액수준이지만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다. 소액의 연체라 하더라도 저소득이라는 조건에 금리가 가산되는 채무의 메커니즘이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소득이 없는데도 카드 발급이 되는 경우가 통장, 잔고 평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을 해주는 것들도 있어서... 카드사나 은행 쪽의 역할에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지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카드라든지 사용 거래 내역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보면 그거를 막 엄청난 고가의 사채 낭비를 쓰는 건 아니에요.” (서울)

3. 청년 금융취약 문제 발생과 심화 경위

부채문제를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경로는 앞서 짚어 본 청년부채 문제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또는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1)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조달

성인으로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세대들에게는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거나, 가족이 그럴 능력이 안되는

경우 자력으로 조달을 해야 한다.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27.9%가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비용은 연간 588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취업사교육 이수 비율은 전년 비해 10%p 증가하였고, 그 비용은 전년 대비 168만 원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투데이신문, 2021.9.13). 취업사교육비 이외에도 구직과정에서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모두 가족의 도움이나 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가족이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 부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학 재학 기간의 학자금 대출이 설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 후 발생하는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취업준비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늘어나는 반면,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이 낮아지고 취업 후 상환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금융취약성이 확대되는 작동원리에 있다 할 수 있다.

“한 번 빚이 생기면 사실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냥 빚으로 시작하면 졸업하면 거의 2~3천에 빚이 생기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취업이라도 바로 되면 괜찮은데 취업 준비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간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또 빚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3~4천만 원 이제 그냥 기본으로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점에서 그런데 시작해서 만든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된다고... 지금 한 200 정도 이상 받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200에서 그동안 빚 갚는데 월 상환하고 계산을 해보면 자산을 만들거나 저축한다는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안나오고 흑역사 여기서 갑자기 이 정도 돈도 못 들어오는 위기가 발생한다면...” (광주)

청년세대의 금융취약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근 사례로 전세사기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가 20대와 30대의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말부터 금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피의자 중에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이며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이들이 55.3%에 이르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3.2.2).

“전세 대출 받으면 집을 알아볼 때 청년이 혼자 다녀요. 청년이 알아보거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전세 사기를 칠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 서류도 보고 꼼꼼히 했는데도 다 하는

계 전세 사기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공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광주)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는 청년의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 중 주거이행 국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주거이행과 관련해서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는 외지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업이나 일자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온 청년들은 원가족의 주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고, 별도의 주거관련 생활비를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대출을 통해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이들 청년들의 경우는 물적 기반이 없어 마이너스 상태에서 사회 첫 출발을 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대학 기숙사, 공공 기숙사,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 등과 같이 주택공급과 더불어 주거비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또는 장거리 통학, 통근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2) 돌려막기의 심리적 요인

기존 대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는 방식인 이른 바 ‘돌려막기’는 부채를 크게 키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애초에 신용점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메커니즘에 따라 돌려막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원금은 원금대로 증가하고, 이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돌려막기 이전에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거나 공공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가족과 지인에 대한 수치심이나 두려움, 그리고 공공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낮은 신뢰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공유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그 돌려막기가 되는 그 과정도 보면 특히 부채 문제는 굉장히 감추는 성향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갚기 위해서 카드론을 받는단든지 대출 돌려막기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금리가 높으니까 좀 더 붙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

어쩌면 추심이나 급여 압류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급여 압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추심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부모님한테 혼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부모님이 충격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되게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친구들은 굉장히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비교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들을 키워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3) 낮은 수준의 금융·재무 지식

인터뷰에 응한 상담사들 대부분이 사례들을 접하면서 내담자들의 전반적인 금융·재무 수준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들은 대학 재학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재무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자가 무엇인지, 원금이 무엇인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채무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채무액이 늘거나 연체 상황으로 이어져 금융취약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되게 극소수 사실 저도 이렇게 가져온 사례가 4년째 졸업하고 회계 사무소에서 일한 본인데도 사실 약간 고금리인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이런 사채 쓰는 청년들이 그런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밖에 그런 수한 청년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만난 분들은 제3금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채를.” (광주)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어떤 분은 한 달에 얼마에 갚아야 되는지를 인터넷 대출 계산기가 있어도 사용을 할 줄은 모를 정도로 아예 모르셨어요. 원금 이자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또 한 분은 이제 이 이자율이 높다 낮다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산)

기본적인 금융, 재무 지식만 있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을 채무조정이라는 극단의 상황으로 끌고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제한된 지식과 정보의 범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정보에 의존해 결정하다보면, 결국 금융취약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학기 중에도 이제 자기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거나 이런 거를 좀 저렴한 이자부터 시작을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편리하다 또는 주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권유에 카드론이나 아니면 저축은행의 고리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면...” (부산)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금융취약성이 심화된 청년들은 본인의 취약한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적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지원을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압류가 됐던 간에 이미 상황이 이제 진행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위험 신호가 있어서 이제 좀 겁이 나니까 걱정돼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채무조정 제도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느 게 나한테 적합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산)

4) 전달체계와 지지체계의 부재

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떤 과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돌려막기를 통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증가했을 경우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해법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과 같은 채무조정이다. 그런데 채무조정 방법도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고 정보를 구하려 하면서 법률사무소의 광고에 노출된다. 청년금융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지원 안내와 사례관리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 채무조정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수요가 많은 시장 특성상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개인 회생은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 개인 회생 제도를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개인 회생 제도 검색해보고 그랬을 때는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의 상담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상담에 뜨는 거는 이제 광고성이 법률 상담들이 있으니까 이제 독촉이 오고 압류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급한 다급한 상태니까 이제 거기서 빨리 할 수 있는데 혹은 좀 비싸더라도 좀 빨리빨리 잘 해줄 것 같은데 무조건 변제 금액을 낮춰줄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서울)

“대부분 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이랬을 때 저희 센터에 오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빚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 만난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정보를 취득을 하고 거기서 답을 찾는 데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청년들은 이게 금리가 높은 금리를 쓰고 있어서 자기는 이게 대안으로 해결할 줄 알고 대안 될 줄 알아봤더니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던 사례도 많이 있고요.” (서울)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조언이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위험이 커진다.

“제가 자꾸 지지체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기 피해나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트리거가 왔을 때 지지가 없는 분들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서울)

사적인 지지체계 이외에 공적 제도가 지지체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청년부채와 관련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지지체제도 부족하거나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5) 준비되지 않은 공공금융정책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사례들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정책금융(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해진 사례들이 더러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받았음에도 사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상환 기한이 도래하면 다른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정책 대출은 시장에 비해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큰 부담으

로 남게 된다. 위기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 대출은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하는 역설적인 상황들도 존재하였다.

“정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대출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저금리 대출. 근데 거기에 만약에 본인 상황을 적절하게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과정들을 고려해서 대출을 받으면 너무 다행인데 사실은 그 일시적인 위기로 넘어간 후에는 결국에 다 개인의 부채로 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좀 상담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출만 하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내담자들도 대출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신용대출 카드 똑같은 유형 같지만 사실 개인마다 대출이 생기는 원인 어디가 먼저 해소돼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창구가 사실 상담해서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그런 역할이 되게 부채한 상태에서 대출만 공급하다 보니 이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 계속되니까 부채가 오히려 커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저는 그런 지점 때문에 지금 정책들이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에..” (광주)

6) 부채-건강-경제활동의 순환고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는 근로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소득감소 또는 단절로 인해 채무가 악화하는 또 다른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목발을 짚고 오셨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교통사고를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검거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치료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데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건강하지만 돈 필요할 때만 집에 들어오고 근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이혼을 못하고 있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이제 어떤 걸 할 수가 없고 그나마 누워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하고요. 그래도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심지어 그 돈마저도 한 번씩 아버지가 와서 돈 내야 하고요... 척추가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부산)

특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게 되면서, 큰 비용의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필요한 진료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질환을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또는 상실에 따라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금융취약이 건강취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빈곤으로 빠지게 되는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

“건강보험료가 지금 좀 연체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 라고 하면은 좀 여러 치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아주 갑작스럽게 취약해지는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광주)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도 악순환 고리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

“그러면서 통장이 사용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깐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더 일이 못 구하게 된 이런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이제 그나마 일용 근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렇게 단기로 하는 아르바이트랑 ... 월에 평균 130 정도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광주)

4. 금융취약청년 지원기관의 대응 노력

1) 금융취약청년 발굴 노력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저축 혹은 부채 등의 적절한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은 금융취약성에 노출되어도 자신의 문제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금융취약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언론 기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지원 제도의 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 광주시의 경우,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는 오프라인의 방식이었지만 청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한 방식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필요한 청년들은 사실 더 많을 건데 그 저희가 도움을 더 드릴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부산)

“관련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효과 바로 오더라고요.” (부산)

“청년분들이 많이 다니는 정류장 pc방 편의점 근처에 포스터를 붙여요.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거나 거주지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이 거주 지역 중심으로 본다거나 저희가 시도를 다양하게 했어요. 학교 근처에 붙여보기도 하고요. ...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통해서 많이들 오시긴 했는데 포스터 보시고 오시는 비율도 적지 않고 점점 이제 기관 방문이나 지인을 추천하려고 많이들 찾아오세요.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들이 많이 단절되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보를 어디서 받느냐가 참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포스터도 생각보다 효과가 높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광주)

청년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중앙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실질적인 신청 및 상담 건수가 많은 정책들이 존재한다. 실질적인 기관 간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금융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원 제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 창구를 통한 홍보 또한 주효할 수 있다.

“부산시에 청년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요. 홍보를 여러 군데 해봤는데, 물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문이 닫혀 있거나 유명무실한 것도 꽤 많았거든요.” (부산)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과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직관적인 표현이다. 갚을 수 없을만큼 채무액이 과중하다거나(과중채무), 이자율이 과도하다거나(이자부담), 연체를 이어간다거나(연체) 하는 금융취약성을 생활 용어로 풀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용어의 모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재무상담이 어떤 건지 알고 신청하셨냐고

물어보면 답을 하는 사람도 사실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재무상담이 뭔지 부채 상 채무조정이라는 게 뭔지 이런 용어들부터 이제 본인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해요. 그래서 홍보가 직관적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2) 다차원적 욕구에 대응하는 공적 지원제도 연계

재무상담이나 부채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해 공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이는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공공의 복지지원 경험을 통해 정책소외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와 같은 접근은 복지재단을 모태로 하는 기관의 특성상 잘 작동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는 금융상담 제공기관에서 여타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희가 재무적 상담도 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위로받고 싶어 해요. 저희 앞에서 많이 울거든요. 별 말 안 해도 잘 울어요. 힘들다는 거죠.” (부산)

“개인적으로 심리적 상태가 단절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인들과의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로 제가 한 두 달 전에 오신 분인데 센터하고 가까운 데 사세요. 2년 전부터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으로 약을 드셨는데 아예 밖에도 안 나가고 지금 일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 병원 갈 지금 이 돈도 없어 못 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전기도 끊기시고 지금 이제 보증금에서 월세도 다 깎여서 한 두 달 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2달 전에 오셨어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것 같다고 안내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주민센터 방문해서 바로 한 2주 뒤에 수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부산)

“이분들은 사실 복지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 제도를 스스로 찾아낼 수도 없고 신청하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같이 신청하는 방법부터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거가, 이게 처음에는 저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취약계층들은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이게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성취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그다음 단계에

는 사실 정보 제공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들을 좀 찾고 그렇게 조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를 좀 더 깊게 연계한 거는 희망 교회라는 거 하나랑 주거 국민임대 아파트라고. 이것도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접수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를 같이 신청하고 자금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까지 저희가 하고 또 취약계층들은 기금 대출을 이용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돈이 없어도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서울)

이와 같은 여타의 복지제도에 연계가 될 경우 그 이후에는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등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안내하기도 한다. 상기 서울시 사례자의 경우 이후 취업성공 패키지도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기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탐색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내담자가 가지는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자원과 연계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면, 광주시의 경우는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기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이 같은 양식을 청년채무상담기관 이외에 모든 청년정책 전달체계, 나아가 모든 생애주기의 복지전달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3) 청년 친화적 전문 상담 및 서비스

서울시의 경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 재무 길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법원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켜주는 사업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는 데까지 3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율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협약에 의해 청년동행센터로 연계가 되어 센터에서 안내, 상담, 복지연계, 사후관리 등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준다.

“사실 본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도 정확히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변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다 끝났을 때는 또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다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본인이 처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더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주거나 일자리 정보까지도 제공하면서... 그 친구들이 특별히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한 5가지 가이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회생의 관계 기간이 3년인데 이 친구는 2년으로 이제 단축시켜주는 혜택을 줍니다.” (서울)

서울시의 경우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내방할 때 곧바로 채무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과정과 그 이후까지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대증적 요법보다 생애과정 동안 건전한 재무설계를 통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센터에 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는 무조건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채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채무조정 제도를 저희가 졸업하고 이후에 그렇게 이제 재무상담 같은 것들을 이어 가고 그런 프로세스로...” (서울)

하지만 지원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지 않거나 필요에 의해 신청하더라도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 금융상담의 내용뿐만 아니라 청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상담을 신청하셨다 자체가 좀 그래도 좀 반응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담할 때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요. 일단 경계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상담도 프로세스가 있지만, 거부반응이 심한 분들은 먼저 본인이 원하는 부분부터 해결을 해드

리려고 하거나, 상담이 나한테 득이 된다는 걸 먼저 안내해드려야 원활한 상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5. 정책적 시사점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 있는 시기에 이행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발달과정에 필수적인 자원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성인으로서의 이행의 시기가 지연되거나 핵심적인 이행을 해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시기에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적절한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애소득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이는 불경기 혹은 고실업률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생애소득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선행연구들(한요셉, 2020; von Wachter, 2020 등)이 보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개별적인 생애소득 손실은 사회 전체적인 부양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겪는 악성채무 문제는 개인의 생애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대책은 부채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부채는 지출에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거나 자산증식 수단에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래 소득을 당겨쓰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지만 악성으로 발전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는 금융행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은 청년들의 부채의 악성화 위험의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즉 부채의 동학(dynamic)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리고 부채의 위험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사적·공적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 개인의 생애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 주목하여 청년부채문제는 철저히 예방적 접근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과 더불어 사례분석을 통해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과 경로, 그리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주제를 도출하였다(표 V-2).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가족 부양과 빛의 대물림, 질병, 청년 세대의 선호, 소비 성향과 금융지식 부족, 문턱 낮은 대출상품 증가, 작업대출, 대출사기 등 변종들의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해야 하고, 급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대출을 돌려막으며, 금융 및 재무 지식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지지체계나 정책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공공 금융정책은 금융취약청년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에 적합성이 낮고, 결국 부채와 건강, 경제활동의 순환고리 속에서 청년의 금융취약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취약청년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취약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다차원적 욕구에 대응하는 공적 지원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 친화적 전문 상담 및 서비스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표 V-2. 청년의 금융취약 경험 구조

질문	핵심 주제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부양과 빚의 대물림 -질병 -청년 세대의 선호 -소비 성향과 금융지식 부족 -문턱 낮은 대출상품 증가 -작업대출, 대출사기, 그리고 변종들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경로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조달 -돌려막기의 심리적 요인 -낮은 수준의 금융·재무지식 -전달체계와 지지체계 부족 -준비되지 않은 공공금융정책 -부채-건강-경제활동의 순환고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취약청년 발굴 노력 -다차원적 욕구에 대응하는 공적 지원제도 연계 -청년친화적 전문 상담 및 서비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추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융문해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신용 관련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직업계 고등학교는 필수 과목으로 신용과 관련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신용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실업계는 그래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신용 과목이 있었어요. 실업계고가 신용 과목을 들은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들어가신 분들은 되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광주)

학자금 대출과 같은 공공금융정책을 입학과 함께 접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는 금융(신

용) 교육 또한 같은 시기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경우 교과목을 개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조직에서 비교과 과정으로 신용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했던 광주, 서울, 부산 지역의 금융상담 제공기관에서는 모두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해당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금융권의 협회와 시중은행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타 경제 및 금융교육 플랫폼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플랫폼 내 콘텐츠 관리 및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내 금융발전심의회, 2030 청년자문단 등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등의 경제교육 콘텐츠와 e-금융교육센터의 금융교육 콘텐츠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뉴스웨이, 2023. 6. 30). 이에 금융위원회 등은 교육 콘텐츠 내실화 등 서비스 품질개선,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 및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같은 자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인터뷰 대상 기관을 비롯하여 청년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부의 품질관리 하에 적절한 플랫폼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금융교육은 이미 채무가 발생하고 악성화하면서 문제가 커진 후에 제공되는 것보다 사전적, 예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시는 분들은 사실 비율이 미리 사전에 예방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비율보다 문제가 커져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연체 독촉을 받는다거나 긴급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지만 또 사실 그분들이 그 사전에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될지. 금융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 센터에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들을 사전에 조금 예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사람이 좀 뭐가 딱 급할 때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서울)

둘째, 위험 대출상품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P2P,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발달이나 거래 수단이 발달하면서 대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대출거래의 위험성이나 채무자의 의무와 같은 핵심적인 정보들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거나,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의 광고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우선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입법과 관련 포털사이트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자님이 포털 사이트를 국가별로 대출을 검색했어요. 나오는 순위를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심해서 공적 제도들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구글을 똑같이 해도 한국어로 번역 할 때는 사업 광고들이 먼저 나오고 공격적인 목적이야. 아니 이게 이미 환경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광주)

대출과 관련한 정보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색어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햇살론이 우선 노출되기도 하고, 사금융 광고가 우선 노출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른바 검색엔진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천착하여 공공의 정책이 우선 노출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온라인청년센터와 청년 포털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청년몽땅정보통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청년포털 사이트에 공적 대출기관 광고를 적극적으로 게시하거나, 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들 청년 포털 사이트들이 대출정보 검색시 연관검색어로 게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오프라인 광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PC방, 편의점, 원룸촌, 대학 등의 장소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금융취약청년 발굴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악성으로 진행되기 전에 상담센터로 연계될 경우에는 다수의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경우 채무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체·정신건강이 손상되고, 경제활동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하게 된다. 더 많은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양성채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금융복지 전달체계로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더불어 금융취약청년들이 정책상담 창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를 넓혀야 한다. 건강 문제, 진로와 취업 문제, 생계 문제, 주거 문제, 교육훈련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청할 때 금융 관련 취약성을 점검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정책욕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하나의 욕구를 위해 해당 전달체계를 방문한 청년이 있을 때, 최초 상담이나 설문 작성을 통해 해당 청년의 정책욕구를 개괄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비롯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경우 금융상담을 위해 내방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작성 후 공유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득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중앙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청년금융 관련 상담기관에서 청년부채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통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새로운 대출상품이 출시될 경우나, 새로운 대출사기 수법이 등장했다거나 할 경우 모든 관련 기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별 홍보 및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이들 사항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인터뷰에 참여했던 기관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금융상담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 세 개 기관 모두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광주는 청년단체, 서울은 복지재단, 부산은 신용보증재단을 각각 모태로 하고 있어, 기관 각각의 상이한 특징점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모든 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적 전문성과 청년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검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현재 시점에서 해당 지역 청년들이 안고 있는 금융취약성 문제에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중에서는 이들 세 기관과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존재할 수 있겠지

만, 현재로서는 청년금융취약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 ‘금융’, ‘복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제공기관의 전문성과 지향성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인력구성이 적절하게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재무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요건들의 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상담사 인원으로 앞서 열거한 대책들을 일선 전달체계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의 소득능력과 생애과정상 필요한 적정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청년금융에 관한 정책욕구와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 대상 연령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앞서, 청년부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부모로부터의 대물림 또는 부모 대신 명의제공 등의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의 금융지식이나 재무설계능력이 부족한 경우 청년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에는 한계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부모들도 청년금융상담센터에 내방해서 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 세대 중에 부모님 상담받게 하고 싶다 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왜냐면 부모님 부채들 때문에 부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부채가 채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말하는 게 청년 세대에서 명의로 돼 있는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부담까지 포함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광주)

○ — 제6장 청년금융정책 현황 분석

- 1.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
-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사업
- 3. 비영리 분야의 청년금융사업
- 4. 소결

이 장에서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 현황과 특성을 개괄한다. 이를 위해 청년 금융정책 DB를 구축했다. 2023년 8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기본 자료원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복지로(bokjiro.go.kr),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홈페이지를 부가 자료원으로 금융, 자산형성, 이자지원, 대출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표 VI-1). 금융정책의 대상자 범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할뿐만 아니라 청년이

표 VI-1. 청년금융정책 DB 구축 기준

구분	내용
자료원	(기본)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부가) 복지로,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광주광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키워드	금융, 자산형성, 이자지원, 대출, 계좌, 금고, 보험, 재무, 신용, 채무, 부채, 저축, 대어, 재무상담,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경제교육

* 출처: 연구진 작성

* 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youthcenter.go.kr에서 2023년 5월 27일 검색.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sc.go.kr/index>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0>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index>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main.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main.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web/main/index.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ggwf.gg.go.kr/>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17) 6장은 한영섭 소장이 정책 현황 DB를 구축하고 김성이 부연구위원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장하였다. 정책 내용의 범위는 대출, 저축, 금융서비스 및 교육과 자산형성을 포괄하였으며, 수행 주체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집하였다. 최종 구축한 청년금융정책 DB는 중앙행정기관 67개, 지방자치단체 313개, 법정공제 등 비영리 분야 15개 금융정책을 포괄하고 있다.¹⁸⁾ 여기에서는 청년금융정책 DB(이하 DB)를 주된 자료로 이용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영리 분야의 금융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

DB로 확인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청년금융정책은 67개로 15개 기관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사업이 17개(25.4%)로 가장 많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7개(10.5%),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6개(9%),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7.5%) 정도의 수준이다(그림 V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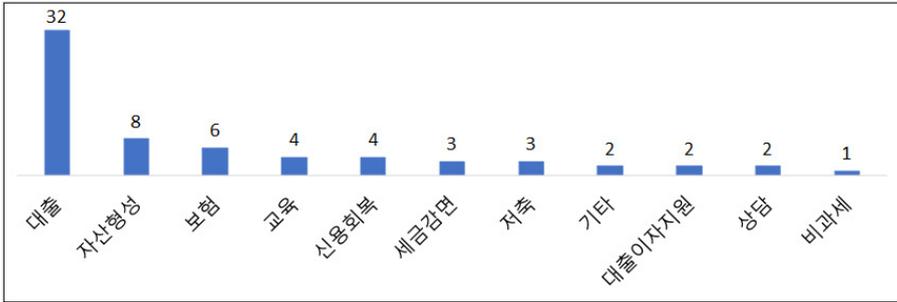


그림 VI-1. 중앙행정기관별 청년금융사업 현황

청년금융정책 가능별로는 대출이 32개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67개 사업의 47.8%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음은 자산형성 사업이 8개(11.9%)이고, 보험이 6개(9%), 교육과 신용회복 사업이 각각 4개(6%) 수준이다(그림 VI-2).

18) 자료 검색가능성으로 인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및 정책이 존재할 수 있고, 분류 방법 또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자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단위: 개)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그림 VI-2. 중앙행정기관 청년금융사업 기능

6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정책을 소관 부처와 기능별로 교차분석하면 표 VI-2와 같다. 대출 사업 32개 중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6개로 가장 많다. 근로자와 세입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 대출 사업이 있다. 그 외에도

표 VI-2. 중앙행정기관별 청년금융사업 기능

(단위: 개, %)

부처	대출	자산형성	보험	교육	신용회복	세금감면	저축	대출이자지원	상담	비과세	기타	전체
금융위원회	4			3	2	1	3		2		2	17
교육부	5				1			1				7
국토교통부	6									1		7
고용노동부	5		1									6
보건복지부	1	3	1			1						6
농림축산식품부	1		3					1				5
중소벤처기업부	1	3										4
행정안전부	4											4
국방부	2	1										3
국가보훈처	2											2
기획재정부				1		1						2
법무부					1							1
정보통신부	1											1
통일부		1										1
해양수산부			1									1
전체	32	8	6	4	4	3	3	2	2	1	2	67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 주: 부처 및 금융정책 기능별로 내림차순 정렬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5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4개이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의한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사업이 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자금 대출 사업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출 사업이 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공단에 의한 공무원 학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대출 사업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대출 사업은 DB에서 확인되는 15개 소관부처 중 11개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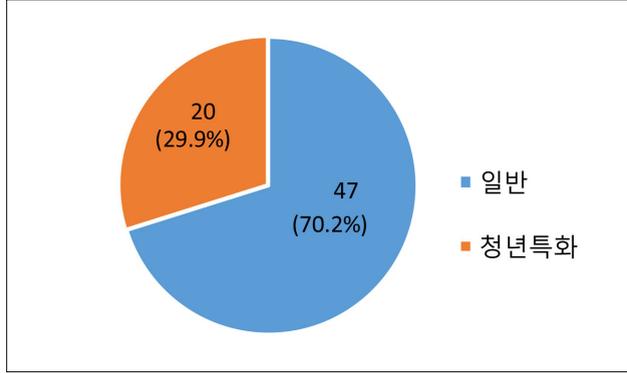
자산형성 8개 사업 중 3개는 보건복지부, 3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이다. 그 외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사업이 각각 1개씩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등 사업이 주를 이루어 자산형성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한 대출 사업이 있다. 보험 6개 사업 중 3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고, 그 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사업이 각각 1개씩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농작업 중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지원사업 등이 있다.

교육 4개 사업 중 3개가 금융위원회 사업이고, 신용회복 4개 사업 중 2개 또한 금융위원회 사업이다. 세금감면 3개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각각 1개씩 확인되고, 저축 3개 사업은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이다. 대출이자지원 2개 사업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각각 1개씩 확인되고, 상담 2개 사업은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67개 사업을 대상별로 분류하면 청년에 특화된 사업은 47개로 70.2%이다(그림 VI-3). 청년특화 사업은 예를 들어 신용이력이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 미취업청년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리대출 서비스 정책인 금융위원회의 햇살론 유스, 34세 이하 채무연체 중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시까지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위원회의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 등이 해당한다.

대상자 범위에서 청년을 포괄하는 일반 사업은 20개로 29.9%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 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19~34세 청년을 포괄한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사업

인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사업 또한 연령 제한 없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청년을 포괄하는 사업이다.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그림 VI-3.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 대상 구성

표 VI-3. 중앙행정기관별 청년금융사업 대상 분포

(단위: 개, %)

부처	일반			청년특화			전체		
금융위원회	11	(23.4)	[64.7]	6	(30.0)	[35.3]	17	(25.4)	[100.0]
국토교통부	2	(4.3)	[28.6]	5	(25.0)	[71.4]	7	(10.5)	[100.0]
보건복지부	3	(6.4)	[50.0]	3	(15.0)	[50.0]	6	(9.0)	[100.0]
교육부	5	(10.6)	[71.4]	2	(10.0)	[28.6]	7	(10.5)	[100.0]
중소벤처기업부	2	(4.3)	[50.0]	2	(10.0)	[50.0]	4	(6.0)	[100.0]
기획재정부	1	(2.1)	[50.0]	1	(5.0)	[50.0]	2	(3.0)	[100.0]
농림축산식품부	4	(8.5)	[80.0]	1	(5.0)	[20.0]	5	(7.5)	[100.0]
고용노동부	6	(12.8)	[100.0]				6	(9.0)	[100.0]
국가보훈처	2	(4.3)	[100.0]				2	(3.0)	[100.0]
국방부	3	(6.4)	[100.0]				3	(4.5)	[100.0]
법무부	1	(2.1)	[100.0]				1	(1.5)	[100.0]
정보통신부	1	(2.1)	[100.0]				1	(1.5)	[100.0]
통일부	1	(2.1)	[100.0]				1	(1.5)	[100.0]
해양수산부	1	(2.1)	[100.0]				1	(1.5)	[100.0]
행정안전부	4	(8.5)	[100.0]				4	(6.0)	[100.0]
전체	47	(100.0)	[70.1]	20	(100.0)	[29.9]	67	(100.0)	[100.0]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일반 대상 및 청년특화 금융정책의 소관부처 분포를 살펴보면 표 VI-3과 같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가장 많은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중 64.7%는 청년을 포괄하는 일반 대상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청년특화 사업이 71.4%로 일반 사업에 비해 비중이 높고,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부 사업은 일반 사업이 71.4%로 청년특화 사업에 비해 비중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일반 사업과 청년특화 사업의 비중이 같다. 그 외 부처의 사업은 청년을 포괄하는 일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VI-4와 표 VI-4는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정책 대상별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을 포괄하는 사업의 53.2%는 대출 사업인 데에 반해, 청년에 특화한 사업 중 대출 사업의 비중은 35% 정도이다. 자산형성 사업은 일반 사업이 8.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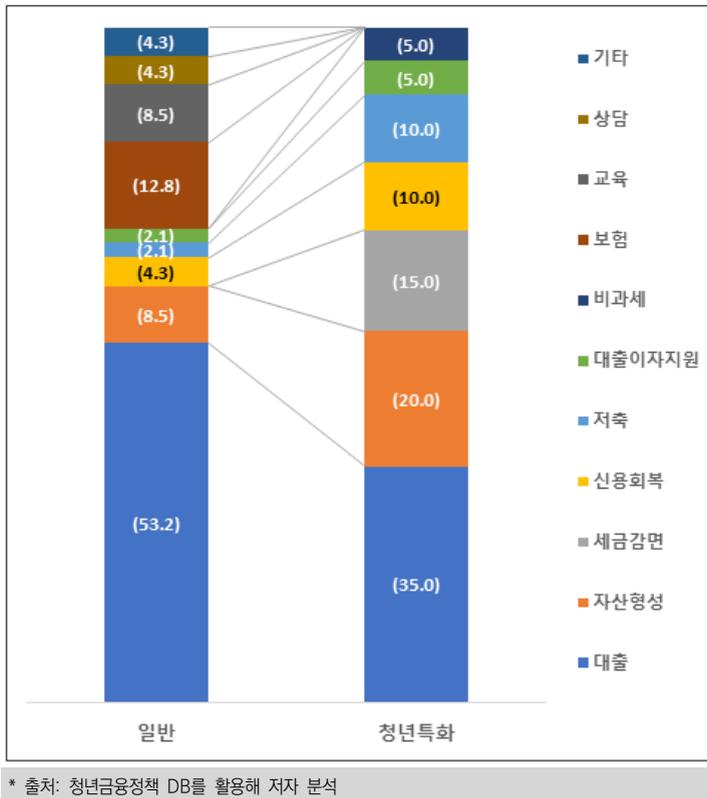


그림 VI-4. 중앙행정기관의 청년금융사업 대상별 기능

표 VI-4.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사업 대상별 기능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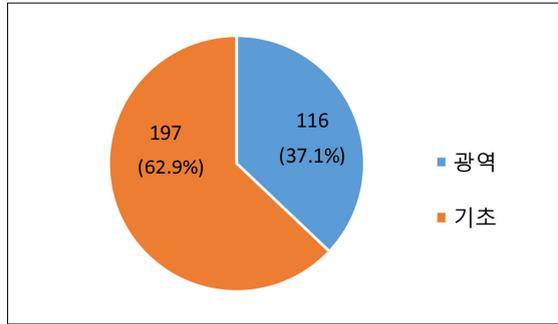
부처	일반			청년특화			전체		
대출	25	(53.2)	[78.1]	7	(35.0)	[21.9]	32	(47.8)	[100.0]
자산형성	4	(8.5)	[50.0]	4	(20.0)	[50.0]	8	(11.9)	[100.0]
세금감면			[0.0]	3	(15.0)	[100.0]	3	(4.5)	[100.0]
신용회복	2	(4.3)	[50.0]	2	(10.0)	[50.0]	4	(6.0)	[100.0]
저축	1	(2.1)	[33.3]	2	(10.0)	[66.7]	3	(4.5)	[100.0]
대출이자지원	1	(2.1)	[50.0]	1	(5.0)	[50.0]	2	(3.0)	[100.0]
비과세			[0.0]	1	(5.0)	[100.0]	1	(1.5)	[100.0]
보험	6	(12.8)	[100.0]				6	(9.0)	[100.0]
교육	4	(8.5)	[100.0]				4	(6.0)	[100.0]
상담	2	(4.3)	[100.0]				2	(3.0)	[100.0]
기타	2	(4.3)	[100.0]				2	(3.0)	[100.0]
전체	47	(100.0)	[70.1]	20	(100.0)	[29.9]	67	(100.0)	[100.0]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데 청년특화 사업은 20%이다. 세금감면 사업은 일반 사업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년특화 사업 중 비중은 15%이다. 보험과 교육, 상담 사업은 일반을 대상으로 청년을 포괄하는 일반 사업만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공적 금융 지원 중 청년특화 사업은 대출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형성과 세금감면 등의 비중이 높아 일반 대상 공적 금융 지원사업의 구성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청년금융정책에서 청년의 금융취약성 혹은 금융에의 욕구가 일반 성인과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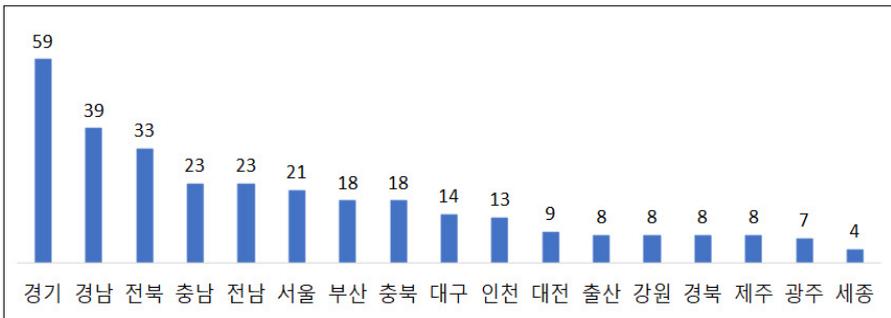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청년금융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청년금융정책을 살펴본다. 그림 VI-5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구축한 청년금융정책 DB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주체를 보여주고 있다. 313개 사업 중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이 116개로 37.1%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이 197개로 62.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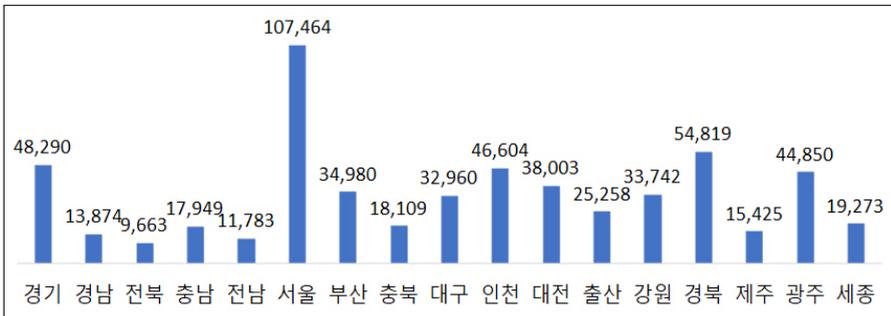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그림 VI-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청년금융사업 현황

〈 금융사업 현황 (개) 〉



〈 금융사업 개당 청년 인구 수 (명/개) 〉



* 출처: (금융정책 개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인구 수)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13에서 2023년 8월 14일 검색.

그림 VI-6.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금융사업 현황

광역자치단체별로 청년금융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VI-6), 경기도가 59개(18.9%)로 가장 많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39개(12.5%), 전라북도가 33개(10.5%), 충청남도과 전라남도가 각각 23개(7.4%) 정도이다. 이를 2023년 기준 인구추계¹⁹⁾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19~34세 청년 인구 수와 비교하면 그 경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사업당 청년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9,663명이다. 다음은 전라남도가 사업당 11,783명, 경상남도가 사업당 13,874명이다. 사업당 청년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고, 다음은 경북, 경기 순으로 나타난다.

표 VI-5는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금융사업의 기능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36.4%로 가장 많고, 보험 지원사업이 23.3%, 자산형성 사업이 16%, 보증 등 대출 사업이 8.6%, 교육 및 상담 사업이 7%, 신용회복 사업이 5.8% 정도이다. 청년 대상 금융사업 개수가 가장 많은 경기의 금융사업 중 이자 지원사업

표 VI-5. 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금융사업 기능

(단위: 개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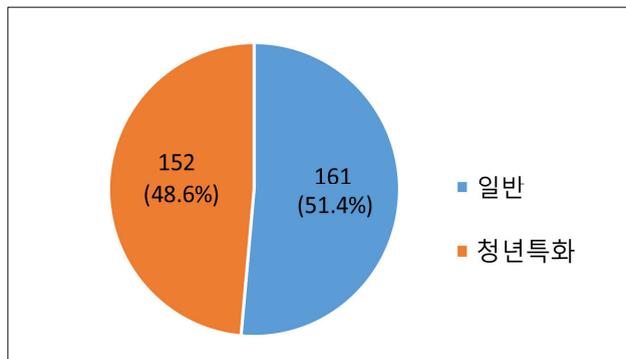
구분	이자지원	보험지원	자산형성	대출(보증)	교육 및 상담	신용회복	기타	전체
서울	2 (9.5)	8 (38.1)	3 (14.3)	3 (14.3)	4 (19.0)	1 (4.8)		21 (100)
부산	2 (11.1)	1 (5.6)	1 (5.6)	5 (27.8)	3 (16.7)	2 (11.1)	4 (22.2)	18 (100)
대구	5 (35.7)	5 (35.7)	2 (14.3)	1 (7.1)	1 (7.1)			14 (100)
인천	2 (15.4)	4 (30.8)	3 (23.1)	2 (15.4)	2 (15.4)			13 (100)
광주	1 (14.3)	1 (14.3)	1 (14.3)	2 (28.6)		2 (28.6)		7 (100)
대전	2 (22.2)	2 (22.2)	1 (11.1)	1 (11.1)	2 (22.2)	1 (11.1)		9 (100)
울산	4 (50.0)	2 (25.0)	2 (25.0)					8 (100)
세종	1 (25.0)	2 (50.0)	1 (25.0)					4 (100)
경기	24 (40.7)	9 (15.3)	10 (16.9)	3 (5.1)	4 (6.8)	8 (13.6)	1 (1.7)	59 (100)
강원	1 (12.5)	3 (37.5)	1 (12.5)	2 (25.0)	1 (12.5)			8 (100)
충북	10 (55.6)	5 (27.8)	1 (5.6)	1 (5.6)		1 (5.6)		18 (100)
충남	10 (43.5)	7 (30.4)	2 (8.7)	1 (4.3)	2 (8.7)		1 (4.3)	23 (100)
전북	15 (45.5)	9 (27.3)	6 (18.2)	1 (3.0)		1 (3.0)	1 (3.0)	33 (100)
전남	12 (52.2)	4 (17.4)	2 (8.7)	2 (8.7)	1 (4.3)		2 (8.7)	23 (100)
경북	3 (37.5)	1 (12.5)	3 (37.5)	1 (12.5)				8 (100)
경남	18 (46.2)	7 (17.9)	11 (28.2)	1 (2.6)	1 (2.6)	1 (2.6)		39 (100)
제주	2 (25.0)	3 (37.5)	0 (0.0)	1 (12.5)	1 (12.5)	1 (12.5)		8 (100)
전체	114 (36.4)	73 (23.3)	50 (16.0)	27 (8.6)	22 (7.0)	18 (5.8)	9 (2.9)	313 (100)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19) KOSIS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시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P001&conn_path=I3)에서 2023년 8월 14일 검색.

이 전체의 40.7%로 가장 많다. 다음은 자산형성 사업이 16.9% 수준이고, 보험 지원사업이 15.6%, 신용회복 사업이 13.6%, 교육 및 상담 사업이 6.8% 정도이다. 대도시인 서울은 보험 지원사업이 38.1%로 가장 많고, 교육 및 상담 사업이 19%, 자산형성과 보증 등 대출 사업이 각각 14.3%, 이자 지원사업이 9.5% 수준이다. 또 다른 수도권인 인천의 청년 금융 지원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보험 지원사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자산형성 사업이 23.1%, 보증 등 대출 사업과 교육 및 상담 사업이 각각 15.4%이다. 반면,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은 이자 지원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청년금융사업 기능은 이행기 청년이 집중되는 수도권과 도시적인 특성을 반영해 전체적인 분포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I-7은 지방자치단체 청년금융사업의 대상별 분포를 도식화하고 있다. 청년에 특화된 사업이 전체의 48.6%이고 일반을 대상으로 청년을 포괄하는 사업이 51.4%로 절반 정도이다.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그림 VI-7. 지방자치단체 청년금융사업 대상 현황

표 VI-6은 지방자치단체 청년금융사업의 특화대상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화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확인하는 사업의 규모는 총 281개이다. 이 중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54개로 전체의 19.2%에 달한다. 주거 자금 및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5개(16%)인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나 대구 청년희망적금, 서울 으뜸관악 청년통장, 세종 청년 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사업을 포함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28개(10%)인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군인과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각 17개(6.1%)이다. 군인을 특화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신용유의자를 특화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6개(5.7%)인데, 대구 울타리론 등 보증대출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5개(5.3%)인데,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같이 자산형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표 VI-6. 지방자치단체 청년금융사업의 특화대상

특화대상	빈도(명)	비율(%)
신혼부부	54	19.2
저소득	45	16.0
대학생	28	10.0
군인	17	6.0
신용유이자	17	6.0
성실상환자	16	5.7
근로자	15	5.3
세입자	11	3.9
신혼부부, 청년	12	4.3
중소기업근로자	14	5.0
장애인	8	2.9
자영업자	4	1.4
소상공인	3	1.1
창업자	3	1.1
플랫폼노동자	3	1.1
기타	31	11.1
전체	281	100.1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3. 비영리 분야의 청년금융사업

비영리 분야 청년금융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기에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제한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정공제와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한 대표적인 청년금융사업 15개를 목록화했다. 법정공제에 해당하고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업은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에 의한 적금 및 대출 사업이 있다. 연령기준과 무관하게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해 금융을 포함한 기업복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업 중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한 사업이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재단, 열매나눔재단, 사회연대은행, 노동공제연합(사)풀빵에서 제공하는 적금 및 대출 사업, 청년연대은행토닥, 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 희년은행, 신나는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사업을 포함한다(표 VI-7).

표 VI-7. 비영리 분야의 청년금융사업 현황

구분	실행주체	사업내용
법정공제 (6)	과학기술인공제회	적금, 대출
	군인공제회	적금, 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	적금, 대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적금, 대출
	대한소방공제회	적금, 대출
	노란우산공제회	적금, 대출
비영리 민간단체 (9)	청년재단	적금, 대출
	열매나눔재단	적금, 대출
	사회연대은행	적금, 대출
	청년연대은행토닥	대출
	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	대출
	희년은행	대출
	노동공제연합(사)풀빵	적금, 대출
	신나는조합	대출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출

* 출처: 청년금융정책 DB를 활용해 저자 분석

비영리 분야 청년금융사업의 수행주체의 분포는 그림 VI-8과 같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한 금융사업이 9개(60%), 법정공제 금융사업이 6개(4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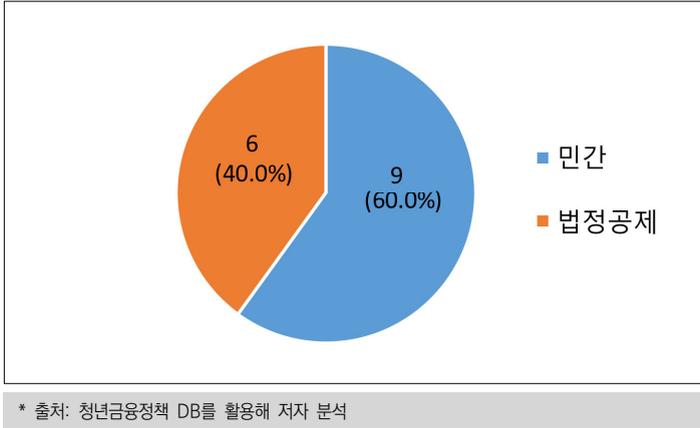


그림 VI-8. 민간 청년금융사업 현황(수행주체)

비영리 분야 청년금융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그림 VI-9와 같다. 대출 사업이 5개로 33.3%이고, 적금과 대출을 병행하는 사업이 10개로 66.7%이다. 수행주체별로 법정공제에 의한 금융사업 6개 중 전수가 대출과 적금을 병행하고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한 사업은 대출과 적금을 병행하는 사업이 9개 중 4개, 대출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5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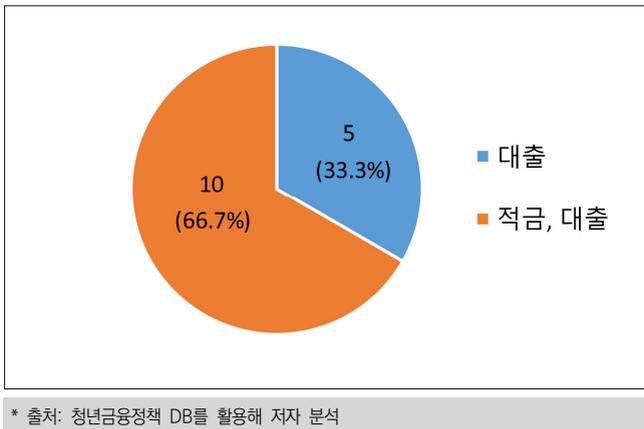


그림 VI-9. 민간 청년금융사업 현황(기능)

4. 소결

이 장에서는 2023년 8월 말 기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홈페이지에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검색, DB로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 67개, 지방자치단체 313개, 그리고 비영리 분야 15개 금융사업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 단위 청년금융사업은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70%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IV-3). 그 중 약 절반 정도가 대출 혹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확인되었다(그림 IV-2).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보증금 등 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사업이 다수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위원회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개 이상의 청년 대상 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표 IV-2). 지원 대상으로 청년을 특화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이나 세금감면 등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이행기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고루 존재하였다(그림 IV-4). 그럼에도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저축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의 효과가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 약관대출이 증가하거나(서울파이낸스, 2023.7.8.),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등(서울신문, 2023.6.21.)의 사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고, 납입액을 제외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며, 의료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등 자산형성 사업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건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청년에게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화된 사업은 이자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재료로 쓰이기보다 당장의 지출부담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청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년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상담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다.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청년금융사업 중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67개 중 6개로 9%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313개 청년금융사업 중에서는 22개에 불과해 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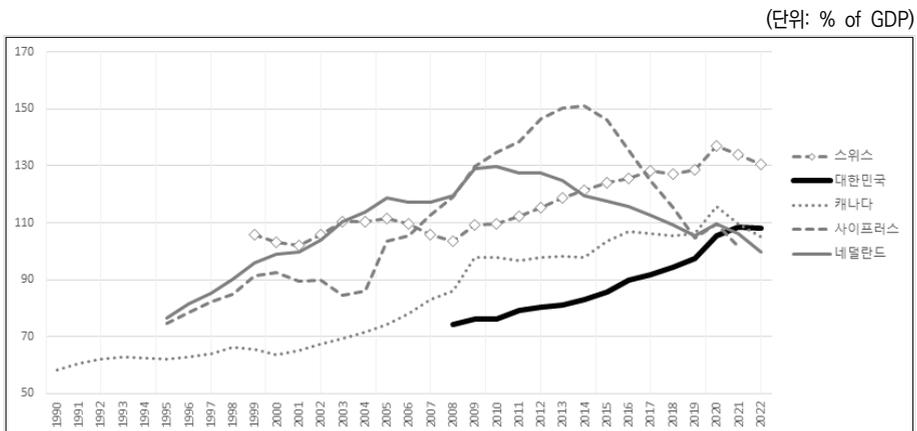
이다.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금융 역량이 금융취약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제라는 점에서 금융 교육이나 상담 사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금융취약성에 노출된 청년을 위한 구제 또한 중요하지만, 청년기 이후 삶을 고려하면 금융 역량 강화는 금융취약 청년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청년이 접근하여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받음으로써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취약청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영리 분야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2. 정책제언

1. 결론

최근 발표된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주목할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응한 지구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2020년을 고점으로 다른 주요국에서는 부채의 가계부담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 출처: IMF(2023). Household debt, all instruments (percent of GDP).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HH_ALL@GDD/SWE?year=2022에서 2023년 9월 16일 검색.

그림 VII-1. 주요국의 가계부채 추이

20) 7장은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교육 이수 이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하며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과거에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금융자산을 종잣돈으로 생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금융화가 확대되었다(김도균, 2020). 그리고 2020년대 현대 청년의 부채 문제는 과거에 청년기를 보낸 다른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었다. 청년의 가계부채 비중이 늘고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취약차주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실태가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그림 I-1, 그림 I-2 참조).

금융, 특히 청년의 부채는 양면성을 가진다.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자금이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보증금 등 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담보하는 밑천이 된다. 하지만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부채나 무계획적인 부채, 악성 부채는 이행기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부정적인 부채는 얽히고 설켜 뿔처럼 금융취약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혹은 본인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가족의 부채 상환부담을 대신 지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도 한다(김성아 외, 2023).

이때 금융상태를 관리하고 재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금융의 악순환에 발을 들이지 않거나 들였더라도 벗어나기 위한 탈출로를 찾을 수도 있다. 공식적 지지체계의 결핍은 사회적 고립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금융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현세대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소위 금융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실태와 정책 간 간극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은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자산은 중년 후기에 최고점을 보이며, 노년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모델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과 유사한 실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그림 II-1 참조). 202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모두 본인 명의의 부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20대 초반은 3.6% 정도, 20대 후반은 17.8% 정도, 30대 후반은 33.7% 정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청년의

부채 보유율은 오히려 지난 10년 전보다 감소한 것이다(표 III-5 참조). 그런데 청년 부채의 양상은 다소 변화했다. 10년 전 청년의 부채는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했다. 최근 청년의 부채도 여전히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거주주택이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졌다(표 III-12 참조).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이 확대되어 온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강민석, 정종훈, 2022).

더욱이 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는 청년 세대 내에서 이질적으로 드러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대 청년의 부채가 급증하고(그림 III-10 참조), 계층별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부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그림 III-9 참조).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부채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표 III-12 참조), 대부업체에 의한 악질의 부채를 가진 청년이 여전히 존재한다(표 III-13 참조). 자산형성을 위한 종잣돈 혹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몇의 양면성을 가지는 청년 부채의 문제는 청년 세대 간 격차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채를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실태가 자리잡으면서, 금융취약성은 상환 능력 대비 채무액의 규모로 판단하는 과중채무, 연체를 지속한 체납 경험, 일정 개수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는 다중채무, 제도권 외 악성 부채를 가지는 채무의 질, 채무 이행능력에 의한 신용 수준,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 등 정책에 의한 채무조정 경험, 그리고 부채 상환에 대한 주관적 부채부담 등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자료의 이용가능성으로 인해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과중채무나 체납 경험, 채무의 질 등 금융취약성을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장 참조).

특히 금융취약청년의 실태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23년 4~5월 동안 부채가 있거나 없는 청년 2,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할 만 하다.²¹⁾ 부채가 있는 청년보다 부채가 없는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이 다소 높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이라도 더 높은 실태는 청년에게 있어 부채가 긍정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그림 IV-2 참조).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 중 26.2%는 지난 1년 동안 연체 경험이 있었다(표 IV-7 참조). 부채가 매우 부담된다거나 약간 부담된다는 응답이

21) 다만 이 조사는 부채가 있는 청년의 모집단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표집계획을 수립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의 약 80%에 달하며, 부채 부담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 가장 쉽게 줄이는 항목은 식료품비였다(표 IV-9 참조). 부채를 가진 청년 중 재무교육이나 상담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22.8%에 불과한데(그림 IV-13 참조), 절반 정도에 달하는 금융 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나(표 IV-10 참조) 정보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른 유형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청년은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의 약 15% 정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IV-3 참조). 이는 청년의 금융취약성이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취약성과 중첩되어 청년의 삶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정책은 약 67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출 사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약 9% 정도에 불과하다(표 VI-2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정책은 300개를 넘는데,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그림 VI-6 참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출보증 혹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성의 사업이 약 45% 정도로 절반 정도이고, 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7% 정도에 불과하다(표 VI-5 참조). 그리고 공공에 의한 금융정책의 사각 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비영리 분야의 금융 지원은 미진한 상황이다.

결국 부채를 중심으로 한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는 최근에 이르러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의성 있는 근거와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 세대 내 격차가 존재하며, 과중채무 혹은 연체나 악성 채무 등 금융취약성에 노출된 청년들 또한 존재한다. 특히 의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핍된 경우 금융취약성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남은 생애를 준비하는 청년기의 이행기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격차 완화와 금융의 관점에서 취약한 청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인터넷 등에서 통제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는데,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금융정책은 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기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2. 정책제언

1) 전 생애 금융 건강성 확보를 위한 청년 지원

원가족 등 보호를 받는 미성년기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은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자산을 구축하는 중장년기와 자산을 유동화하는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의 근간으로 작동한다.²²⁾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앞두고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의 자산형성은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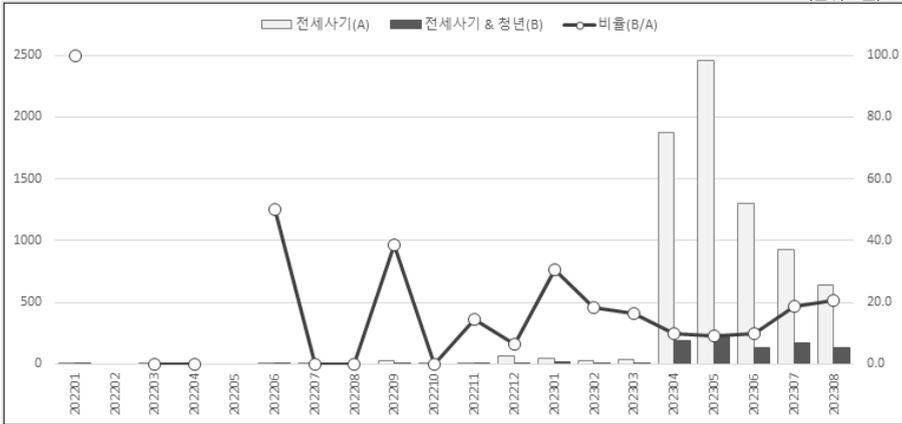
우리나라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외에도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계좌가 그러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자산형성 제도는 근로를 조건으로 하거나 대상자 범위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하여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하거나 유리한 금리를 적용한다.

연 최고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가입자 4명 중 1명 정도의 수준인 68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서울신문, 2023.6.21).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하기 전에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의 가능성이 있는 청년기에 소득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적금액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가상자산 등 위험도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적금을 해지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계층은 오히려 이 정책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등, 정책의 대상자 범위가 역진적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청년기 자산형성의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 공간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확대되면서 청년의 가입 사례가 늘었다(강민석, 정중훈, 2022). 예상하지 못했지만, 2022년 하반기에 소위 전세사기라는

22) 가계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생애 궤적을 자산 기반 복지라고 부르며, 한국에서 자산 기반 복지가 발달한 것은 공적 사회보장체계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반작용이라는 주장이 있다(김도균, 2020). 그러나 이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단위: 건, %)



* 출처: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각 키워드를 주제로 검색한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함.

* 주: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월별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사 건 수임.

그림 VII-2. 청년 전세사기 관련 기사 추이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자가 늘었고, 청년이 예외가 아니었다. 그림 VII-2를 보면, 전세사기 중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비율이 적지않은 수준을 유지한다.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출을 통해 행태가 변화했고 보호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청년은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생애 경제적 웰빙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부채를 형성해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지우는 청년정책의 금융화를 지양하고 청년의 실제 삶에 가닿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금융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금융과 생애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은 금융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상환 능력보다 높은 채무액을 지거나 불법사금융 등 악성 채무를 지게 될 수 있다. 휴대폰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결국 빚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내구제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피해를 입거나 접근성이 높아진 민간의 소액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국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

돌려막기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납부기일을 지키지 않아 연체 실적이 쌓여 신용 점수가 낮아지기도 한다.

청년의 금융취약 유형은 다양하다.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적절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사적 지지체계가 비어 있다면 공적 지지체계로서 사회안전망이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취약 유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다.²³⁾ 연체전에는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기관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즉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의무를 분할하거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환능력과 비교해 채무가 과도한 경우,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할 수도 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의 재무상담을 통해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재무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취약한 청년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거나 검색하더라도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인지적 접근성이나 심리적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방문하더라도 위축된 청년이 상담과정에서 지원을 포기하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고, 방문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과 실무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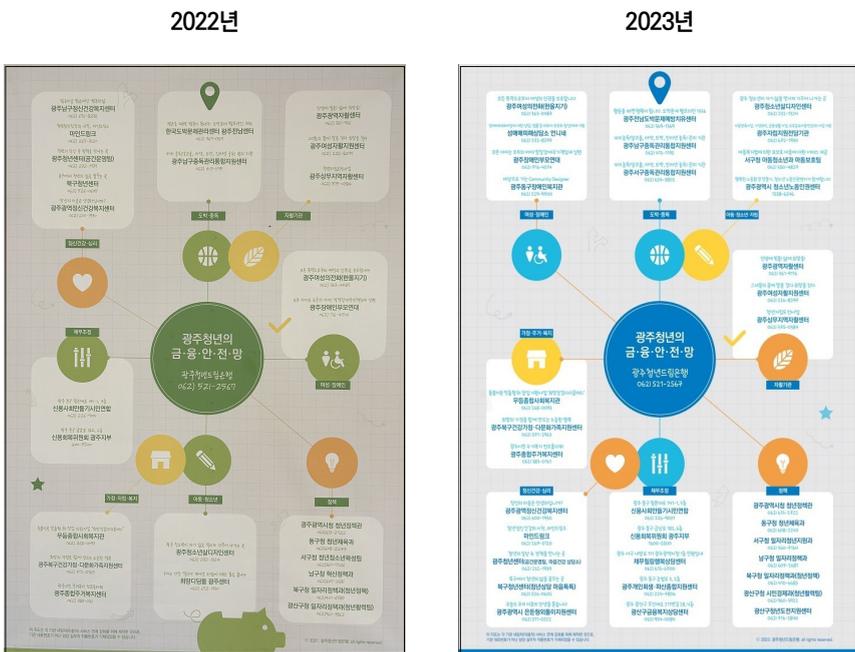
3) 다중 취약청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청년의 금융취약성은 사회적 고립이나 저소득, 경제활동 중단 등의 또 다른 유형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정서적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 혹은 은둔하는 청년이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인터넷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의한 채무를 이용하는 등, 취약한 청년이 금융취약성에 노출되기도 한다. 금융취약청년은 다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3)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crs.or.kr/main.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따라서 다중 취약성에 노출된 금융취약청년에게는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심리 분야, 도박 및 중독 분야, 자활 분야, 여성 및 장애인 지원 분야, 복지 분야, 그리고 정책 분야 등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례가 발생할 시 유관기관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유관기관에 의해 새로운 사례를 발굴할 수도 있다. 하나의 기관에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취약성으로 인해 위축된 청년이 지역 내에서 도움을 경험하면서 활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협력기관을 업데이트하여 시의성을 확보하면서 금융안전망의 실질적 지원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광주의 사례는 다중 취약성에 노출된 금융취약청년에게 지역에서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수범사례이지만, 지리적 범위는 제한적이다. 청년 친화적 종합 금융안전망 협력체계를



* 출처: 광주청년드림은행 제공(2023.6.30.) 및 홈페이지 <https://gjdreambank.modoo.at/?link=aiugcju>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그림 VII-3. 지역 기반 청년 금융안전망 사례(광주청년드림은행)

타 지역에도 확산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누락된 사례 없이 청년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청년의 금융취약성 완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기반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운영

공적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은 신뢰성을 담보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금융취약 청년이 공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그 지원기관에서 해당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다가 포기할 수 있다. 혹은 청년이 지원기관에 방문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작동하거나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다.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 청년정책의 홍보, 지역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지원을 위한 조사와 청년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청년지원센터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청년 공간으로 조성된 청년센터를 전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임대환 외, 2023; 정세정 외, 2020). 전국에 약 200개소 정도 존재²⁴⁾하는 청년센터는 개정 청년기본법 등에 의해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지원기관과 함께 청년이 방문할 만한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로서의 우월성을 가지는 청년지원센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과 청년을 잇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재(임대환 외, 2023), 금융취약청년의 공적 지원제도로의 진입과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 전달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 인지기적 전문인력 확보 양성 및 보수교육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중채무와 신용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로서 신용상담사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²⁵⁾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용관리, 재무관리, 신용문제진단, 매

24)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youngSpC/youngSpCList.do>에서 2023년 9월 23일 기준 검색되는 청년센터는 193개이다.

2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추조정 및 복지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용문제를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한다. 신용상담 및 재무관리, 관련 법규와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수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을 관리한다.

표 VII-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시험과목	시험내용
신용상담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 신용상담방법 및 윤리 - 관련 상담사례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 신용 및 부채에 대한 이해 - 관련 상담사례
신용상담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관계 - 신용상담에 관한 생활법률 - 관련 상담사례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구제제도 - 다중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 - 관련 상담사례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그 외에도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에서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을 관리한다. 민간 자격으로서 국가 공인자격은 아니다. 2급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2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2급 금융복지상담사 중 1급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1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협회에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실무자 및 전문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표 VII-2. 사단법인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의 금융복지상담사 시험 과목 및 내용

1급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복지 상담 실습과정 - 보험 심화과정 - 채무조정 심화과정 - 법무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복지상담 개론 및 실무 - 금융의 이해 - 채무조정 이해 - 복지의 이해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상기의 자격기준이 있지만 위촉된 금융취약청년과의 심리적 유대(rapport)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립된 성인으로서 도움을 받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심리적 유대를 바탕으로 종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청년 인지도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청년 연령대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취약청년과의 심리적 유대를 확보하고 있다.²⁶⁾

(3) 법적 근거의 정합성 제고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가진다. 동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청년의 금융생활과 금융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소위 기본법에 있다. 향후 정책 내용 및 수행 방법 등의 구체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위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소관부처 등 책무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4)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와 규제

2023년 9월 현재,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기관의 정보가 검색되기도 하지만 가장 상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광고성 정보다. 대출을 갖고 있는 청년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한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의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규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불법 및 유해 콘텐츠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나 내구제 대출 또한 유해 콘텐츠로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청년뿐 아니라 시민의 금융 건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6) 실무자 인터뷰 내용이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민석, 정종훈 (2022).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KB경영포커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강시온, 한창근 (2018).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49(4), 195-220.
- 관계부처합동 (2020.6).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관계기관합동.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2021.7.21). 브레이크 없는 ‘간편 금융’에 불법 고리대금 활개. 광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김도균 (2020).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e-book 버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미루 (2023).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KDI 현안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김성숙, 이윤, 이재민, 홍연금 (2019). 한국 가계의 소득계층별 부채특성에 따른 연체행동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7(1), 179-194.
-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이정민, 강예은, 장성현 (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22). 아네트의 성인모색기 개념을 중심으로 본 취약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에 대한 연구. *문화와 사회*, 30(1), 7-58.

- 노혜진, 백아름, 권하늬, 박정민 (2022). 채무조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53(2), 5-36.
-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 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 박상현, 김태일 (2014). 금융위기 전·후 가계의 금융부채 및 소비 행태 분석: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165-190.
- 박성재 (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4), 65-99.
- 박수민 (2022).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22.03)**, 21-32.
- 박정민, 오욱찬, 구서정 (2017).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9(2), 171-190.
- 박정민, 이기원, 하은솔 (2018).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70(4), 93-116.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부산복지개발원.
- 박호준, 박정민 (2019). 가구의 재정 상황이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파트너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사회복지연구**, 50(4), 339-362.
- 박호준, 박정민 (2021).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3-15차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 **사회복지연구**, 52(3), 5-22.
- 배호중, 한창근 (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 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20-555.
- 백아름, 노혜진, 박정민 (2022). 청년 과중채무의 본질과 채무조정경험: 갈망, 불안정성, 그리고 희망. **사회복지연구**, 53(3), 139-181.
- 신규수 (2019). 소득·자산 기준 빈곤 지위별 부채 보유특성. **사회복지정책**, 46(2), 289-309.
- 원승연 (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3), 41-72.
- 유연주, 김소연, 여정성 (2021).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상환 연체 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소비자학연구**, 32(5), 1-23.

- 이용호, 신혜형, 이원익 (2022). 청년층의 과거 부채 경험이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매개로 현재 부채보유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9(4), 107-138.
- 이용호, 이원익 (2022).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3), 339-364.
- 이용호, 이원익 (2020). 청년의 부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7(3), 225-251.
- 이용호 (2021).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간 이행을 분석. **사회복지정책**, 48(4), 137-160.
- 이중희 (2020).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중년층의 가계부채 연체 가능성 분류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8(3), 1-16.
- 임대환, 오창식, 김규식, 국형진, 박지예, 박치경, 복진곤, 권영인, 송은혜, 양호경 (2023). **청년센터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연구조사**. 재단법인 청년재단, 전국청년센터협의회,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 장동호 (2018). 청년 연체의 규모와 결정요인 탐색. **복지상담교육연구**, 7(2), 49-75.
- 장동호, 성열서 (2017).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남서울대학교.
- 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류진아, 강예은, 김보미, 기현주, 박이대승, 신영규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진 (2021). 중고령층의 자가여부가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부채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73(2), 33-56.
- 탁장한, 박정민 (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원격접근서비스).
- 통계청 조사관리국 표본과 (2021.8).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설계 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공공용)**.
- 피एम아이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피엠아이.

한국은행 (2020.6).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1.9). **금융안정 상황**. 한국은행.

한요셉 (2020).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KDI FOCUS. 세종: KDI.

Betti, G., Dourmashkin, N., Rossi, M., & Ping Yin, Y. (2007). Consumer over-indebtedness in the EU: measurement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4(2), 136-156. doi:10.1108/01443580710745371

d'Alessio, G., & Iezzi, S. (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with Italian Data*. Bank of Italy Occasional Paper(149).

Disney, R., Bridges, S., & Gathergood, J. (2008). *Drivers of Over-indebtedness*. Report to the UK Department for Business.

Dobbie, W., & Song, J. (2020). Targeted Debt Relief and the Origins of Financial Distress: Experimental Evidence from Distressed Credit Card Borrower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4), 984-1018. doi:10.1257/aer.20171541

Eurofound (2020). *Addressing Household Over-Indebtednes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Gathergood, J. (2012). Self-control, financial literacy and consumer over-indebtednes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3), 590-602.

Gutiérrez-Nieto, B., Serrano-Cinca, C., & de la Cuesta-González, M. (2017). A multivariate study of over-indebtedness' cause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1(2), 188-198.

Modigliani, F. (1986). Life cycle, individual thrift, and the wealth of n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3), 297-313.

Ponce, A., Seira, E., & Zamarripa, G. (2017). Borrowing on the Wrong Credit Card? Evidence from Mexico. *American Economic Review*, 107(4), 1335-1361. doi:10.1257/aer.20120273

Sweet, E., Nandi, A., Adam, E. K., & McDade, T. W. (2013). The high price of debt: household financial debt and its impact on mental and physical

-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91, August 2013, 94-100. doi:10.1016/j.socscimed. 2013.05.009
- UN (2011).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Von Wachter, T. (2020). The persistent effects of initial labor market conditions for young adults and their sourc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4), 168-194.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ggwf.gg.go.kr/>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main.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광주청년드림은행 홈페이지. <https://gidreambank.modoo.at/?link=aiugcjui>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2023년 4월 25일 검색.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sc.go.kr/index>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뉴스웨이 (2023. 6. 30). 금융당국, 금융교육 플랫폼 확대 개편 추진. <https://www.news way.co.kr/news/view?ud=2023063013262560031>에서 2023년 7월 27일 검색.
- 룩셈부르크소득조사. <https://www.lisdatacenter.org/data-access/key-figures/methods/>에서 2023년 5월 11일 검색.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2023년 7월 27일 검색.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index>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 빅카인즈 홈페이지. bigkinds.com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index.jsp>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web/main/index.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울신문 (2023.6.21). 10% 금리 주는데... '청년적금' 68만명 중도해지 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1500019&wlog_tag3=naver에서 2023년 7월 30일 검색.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서울파이낸스 (2023.7.8). '영끌에서 생계로', 급증하는 '불황형 대출'... 보험사 약관대출 '불티',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745>에서 2023년 9월 15일 검색.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educredit.or.kr/ccedu/cc/ccEduIntro.do>에서 2023년 9월 27일 검색.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crs.or.kr/main.do>에서 2023년 9월 23일 검색.

연합뉴스 (2023. 2.2). 전세사기 '먹잇감' 된 20·30대 무주택 청년 서민.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66000004?input=1195>에서 2023년 8월 20일 검색.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youthcenter.go.kr에서 2023년 5월 27일 검색.

청년센터 홈페이지. youthcenter.go.kr에서 2023년 7월 27일 검색.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I3에서 2023년 8월 14일 검색.

투데이신문 (2021.9.13). 구직자 10명 중 3명 취업사교육 받았다...연간 588만원 지출.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02>에서 2023년 9월 27일 검색.

한겨레 (2023. 5. 23). 대출 연체 이력까지...신용정부 20만건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2733.html에서 2023년 8월 30일 검색.

헤럴드경제 (2023.9.17). 이자 낼 돈 '10만원'이 없어 파산하는 20대...야금야금 빌린 돈에 발목 잡혔다. <https://v.daum.net/v/20230917080104670>에서 2023년 9월 27일 검색.

KOSIS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I3에서 2023년 8월 14일 검색.

IMF (2023). Household debt, all instruments (percent of GDP).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HH_ALL@GDD/SWE?year=2022에서 2023년 9월 16일 검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13호, 2022.1.4.,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법률 제12227호, 2014.1.14.,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 — 부 록

부록

1.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조사표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사는 청년의 부채 현황, 부채 계획, 재무관리 경험 및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약 20분 내외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며 언제라도 통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김성아 부연구위원
- 연구 관련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강예은 연구원
- 조사 수행기관: 엠브레인리서치
- 조사 기간: 2023. 4~5.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및 가구 일반현황, 부채 현황, 부채 계획, 재무관리 경험 및 인식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반영한 정책 방안 모색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SQ.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응답자 선정

SQ1. 귀하는 몇 년생입니까?

_____ 년생 [prog: 2004~1989년생]

SQ1_1. 연령 [자동코딩]

1. 만19-24세
2. 만25-29세
3. 만30-34세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1. 남자
2. 여자

SQ3.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실제 거주지를 응답해주시시오. [1개 선택]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 17. 세종 | | | |

SQ3-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주민등록지와 같습니까? [1개 선택]

1. 같다 → Q1로
2. 다르다 → SQ3-2로

SQ3-2. 귀하의 주민등록지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Q1.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Q2. 귀하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부채를 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부채는 학자금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연체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개인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 휴대폰 등 내구재 대출 등을 말합니다.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예정인 신용카드 대금은 부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있다
2. 없다 → A6으로

Q2-1. 귀하의 생애 최초 주된 부채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선택	부채 종류	설명
<input type="checkbox"/>	학자금 대출	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비 등 교육비에 대한 대출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담보대출	금융기관에서 물적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거래를 일컫는 말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포함)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해 해주는 대출을 일컫는 말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관련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과 같이 신용카드 관련 대출을 일컫는 말로,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 예정인 신용카드 대금은 부채로 포함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연체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포함한 카드 연체, 할부를 말하며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융이 포함됨.
<input type="checkbox"/>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등 내구재 대출	휴대폰, 가전 등과 같이 소비생활용 내구재 구매 시 할부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	

Q3. 2023년 4월 기준 귀하 명의의 부채가 있으십니까? [1개 선택]

1. 있다
2. 없다 → A6으로



A. 부채 현황

A1. 2023년 4월 기준 귀하의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채 건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 두 종류인 경우 각 신용대출에 대해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a. 부채 종류	b. 부채 기관	c. 담보 형태	d. 부채 용도	e. 대출 시점 (연도)		f. 최초 부채 금액 (금액 한글로 제시)		g. 부채 잔액 (금액 한글로 제시)	
					최초	만기				
1								만원		만원
2								만원		만원
3								만원		만원
4								만원		만원
5								만원		만원
6								만원		만원
7								만원		만원
8								만원		만원
9								만원		만원
10								만원		만원

a. 부채 종류	① 학자금대출 (→ c 제외) ② 금융기관 담보대출 ③ 금융기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포함) (→ c 제외) ④ 신용카드 관련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 d, f, g 만 해당) ⑤ 연체(신용카드 리볼빙)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자동차 할부금융) (→ d, f, g 만 해당) ⑥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 (→ d, f, g 만 해당) ⑦ 휴대폰 등 내구재 대출 (→ d, f, g 만 해당) ⑧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 (→ b, c 제외)
b. 부채 기관	① 제1금융권 (은행, 농협, 수협, 신협 포함) ② 제2금융권 (저축은행 포함) ③ 비은행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④ 증권회사 ⑤ 한국장학재단 ⑥ 보험회사 ⑦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등) ⑧ 사채 (미등록 대부업자) ⑨ 여신 전문기관 (캐피탈 등) ⑩ 각종 공제회 (연금공단, 교원공제회, 사회적 경제 조직 등) ⑪ 정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⑫ 기타 ()

c. 담보 형태	① 거주주택 ② 거주주택 이외 주택 ③ 주택 이외 부동산 ④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채권 ⑤ 기타 (전세권, 자동차 등)
d. 부채 용도	① 거주주택 구입 ②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주택 등) ③ 전세, 월세 보증금 ④ 금융자산투자 ⑤ 본인 부채 상환 ⑥ 부모 등 본인 외 부채 상환 ⑦ 결혼자금 ⑧ 사업자금 (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⑨ 교육비 (학자금 포함) ⑩ 본인 생활비 (의료비 포함) ⑪ 부모 등 본인 외 가구원 생활비 (의료비 포함) ⑫ 기타 ()

A2. (A1의 f의 합 > A1의 g의 합인 경우만) 부채를 상환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소득에 의한 상환
2. 금융자산 처분이나 퇴직(연)금 정산
3. 주거를 변경하여 상환 (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주거지역 이동, 주거 규모 축소, 주거 형태 변경 등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4.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처분 (거주주택 제외)
5. 상속이나 증여로 상환
6. 기타 ()

A3. 지난 1년 간(2022.5.~2023.4) 귀하께서는 3달/회 이상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지급 날짜를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1. 있음 → A3-1로
2. 없음 → A4로

A3-1. 3달/회 이상 납부일을 지나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
2. 자금용통 차질
3. 소득 감소
4. 가계지출 증가
5. 납부기일 착오

6. 기타 (_____)

A4.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1. 부담이 없다
2. 약간 부담스럽다
3. 매우 부담스럽다

A4-1. 원금과 이자를 내는 부담으로 생활비나 저축,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까? [1개 선택]

1. 줄이고 있다 → **A4-2로**
2. 줄이고 있지 않다 → **A5로**

A4-2. 다음 중 줄인 주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1.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
2. 레저, 여가, 문화비
3. 식품, 외식비
4. 의류 구입비
5. 교육비
6. 교통, 통신비
7. 내구재 구입비 (휴대폰, 자동차 등)
8. 기타 (_____)

A5. 귀하의 주된 부채를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1.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2.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
3.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A6. 귀하께서는 향후 부채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1. 있다
2. 없다

[prog: Q2=2 & A6=2 → B1로 이동]

A6-1. 귀하께서는 1년 후(2024.4~5.) 귀하의 부채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1. 감소할 것이다
2.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증가할 것이다 → **A6-2로**

A6-2. 1년 후(2024.4.)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개 선택]

1. 거주주택 구입
2.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주택 등)
3. 전세, 월세 보증금
4. 금융자산투자
5. 본인 부채 상환
6. 부모 등 본인 이외 부채 상환
7. 결혼자금
8. 사업자금 (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9. 교육비 (학자금 포함)
10. 본인 생활비
11. 부모 등 본인 이외 가구원 생활비
12. 기타 (_____)



B. 재무관리 인식 및 경험

B1. 다음에 대해 귀하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주시요. [항목별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1. 나는 장단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전반적인 재무상태(소득과 생활비, 재산과 부채 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X
2. 나는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한다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⑨비해당)	①	②	③	④	⑤	⑨

B2. 귀하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항목별 1개 선택]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1.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 (투자 포함)	①	②
2. 연금저축 등 노후설계 및 노후 준비	①	②
3. 청약통장 등 거주주택 마련	①	②

B3. 다음의 사항을 3달/회 이상 연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목별 1개 선택]

	있다	없다	비해당
1. 휴대폰 등 통신요금 (휴대폰이 없는 경우, ⑨비해당, 단 부모 등 다른 사람이 요금을 내는 경우 비해당 아님)	①	②	⑨
2. 월세 (월세 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 ⑨비해당)	①	②	⑨
3. 사회보험료 혹은 세금 (아직 사회보험료 혹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⑨비해당)	①	②	⑨

B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항목별 1개 선택]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②
2.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②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②

B5. 귀하는 소득과 지출 관리, 저축과 부채 등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1개 선택]

1. 부모 등 가족
2. 친구, 동료 등 지인
3. 인터넷 검색
4. 은행 등 금융기관
5. 공공기관(신용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등)
6. 기타 (_____)
7. 없음

B6. 귀하는 다음의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1개 선택]

		a. 이용 경험	(B6-a=1 응답자만) b. 교육 주제
1.	재무/금융교육 (금융소비자교육, 금융교육, 투자교육)	① 있음 ② 없음	① 학교, 평생교육기관 ② 지자체, 정부기관 ③ 금융기관(은행) ④ 기타 (_____)
2.	재무/금융상담 (재무설계사, CFP PB 등과 함께 진행하는 1:1 상담)	① 있음 ② 없음	① 학교, 평생교육기관 ② 지자체, 정부기관 ③ 금융기관(은행) ④ 기타 (_____)

B7. 귀하께서는 채무조정 및 법원에 의한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을 목적으로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채무조정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빛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를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 구제제도란 법원 등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있다 → B7-1로
2. 없다 → B8로

B7-1. 귀하께서는 채무조정 및 법원에 의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1. 있다 → B7-2로
2. 없다 → B8로

B7-2. 다음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셨습니까?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복수응답]

1.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2.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4.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분할상환유예제도
5.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6. 법원 개인 회생
7. 법원 개인 파산
8. 기타 (기관 및 제도 이름: _____)

B8. 귀하께서는 현재(2023.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1. 그렇다
2. 아니다



가구 일반 사항

HQ1. 귀하를 포함해 귀 가구의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 가구원 수 응답하는 방법

-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주말 부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면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셰어하우스, 기숙사 등에서 함께 사는 타인은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_____명

HQ2. 귀하는 귀 가구의 가구주입니까? [1개 선택]

1. 예 [prog: HQ1=1 → HQ2=1 자동 응답]
2. 아니오

HQ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개 선택]

1. 기혼(배우자 있음)
2. 사별, 이혼, 별거
3. 미혼
4. 기타(_____)

HQ4.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1개 선택]

1. 부모와 함께 거주
2.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음 (예. 본가로부터 용돈 받아 생활하는 자취생)
3. 부모로부터 독립함 (별도 가구)

HQ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떠하십니까? [1개 선택]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전문대학 재학/휴학
3. 대학/전문대학 졸업
4. 대학원 재학/휴학
5. 대학원 졸업

HQ6. 현재 귀하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개 선택]

1. 상용 임금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거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2. 임시 임금근로자 (1년 미만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3. 일용 임금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을 맺거나 일일 단위로 고용되는 경우)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한 실적만큼 소득을 얻고 근로 방법과 근로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 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와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 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에서 정규적인 임금과 급여 등 보수없이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 8. 실업자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한 경우)
- 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인 등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

HQ7. 귀 가구의 가구원(HQ1응답값 명) 전체 현재 월평균 가구소득(세금공제 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 가구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댁은 최근 3개월(2023년 1월~3월) 동안의 평균값을 적어주세요.

※ 가구소득 응답하는 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이자 소득 + 공적/민간연금 + 따로 사는 가족에게 받는 용돈 + 정부 지원금(생계급여, 양육아동수당 등)

- 1. 소득없음
- 2. 100만원 미만
- 3. 100~200만원 미만
- 4. 200~300만원 미만
- 5. 300~400만원 미만
- 6. 400~500만원 미만
- 7. 500~600만원 미만
- 8. 600~700만원 미만
- 9. 700~800만원 미만
- 10. 800~900만원 미만
- 11. 900~1000만원 미만
- 12. 1000만원 이상

HQ8. 귀하의 현재 월평균 총소득(세금공제 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은 최근 3개월(2023년 1월~3월) 동안의 소득을 3개월로 나눈 평균값을 적어주세요.

※ 총소득 응답하는 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이자 소득 + 공적/민간연금 + 따로 사는 가족에게 받는 용돈 + 정부 지원금(생계급여, 양육아동수당 등)

한 달 평균 _____ 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prog: HQ7 응답값 > HQ8 응답값 / HQ1=1인 경우, HQ8=HQ7 자동 응답]

HQ9. 귀 가구의 현재 총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 전월세 보증금,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실물자산과 예금, 주식,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부채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없음
2. 5천만 원 미만
3. 5천만~1억 5천만 원 미만
4. 1억 5천만~3억 원 미만
5. 3억~5억 원 미만
6. 5억~10억 원 미만
7. 10억 원 이상

HQ10. 귀하의 현재 총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 전월세 보증금,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실물자산과 예금, 주식,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부채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없음
2. 5천만 원 미만
3. 5천만~1억 5천만 원 미만
4. 1억 5천만~3억 원 미만
5. 3억~5억 원 미만
6. 5억~10억 원 미만
7. 10억 원 이상

[prog: HQ9 응답값 > HQ10 응답값 / HQ1=1인 경우, HQ9=HQ10 자동 응답]

HQ11.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있으면 투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1. 있다 (투자금: _____ 만원)
2. 없다

HQ12.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 가구라면 '자가'에 해당합니다.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연세, 사글세, 일세 포함)
5. 무상 거주(예: 부모 명의 주택, 사택 등에 무상 거주)

HQ13.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는 부모나 친지로부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십니까? [1개 선택]

※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목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있다'에 체크해주세요.
※ 상속 및 증여는 살아계셨을 당시 또는 돌아가시고 난 후 받은 결혼 및 사업자금, 기타 현물 및 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HQ15로

HQ13-1. 누구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으셨나요? 혹은 받을 예정입니까? [복수응답]

1. 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
2. 나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3. 나 또는 배우자의 친척
4. 기타 (_____)

HQ14.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는 부모나 친지로부터 부채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개 선택]

1. 있다
2. 없다 → HQ15로

HQ14-1. 누구로부터 부채를 상속·증여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속·증여 받은 총 부채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가 됩니까? [복수응답]

1. (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_____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2. (나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로부터 상속·증여 _____만원 (금액 한글로 제시)

HQ14-2.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께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채는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개 선택]

1. 전혀 부담 안됨
2. 별로 부담 안됨
3. 보통
4. 약간 부담이 됨
5. 매우 큰 부담이 됨

HQ15.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께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채는 없지만 상환해야 하는 부모나 친지의 부채가 있습니까? [1개 선택]

1. 있다
2. 없다

HQ16.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복수응답]**

1. 해당없음 (→중복응답 불가능)
2. 장애인
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4. 가족돌봄청년(장애,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5. 한부모가구
6.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 자녀
8.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 긴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 처리되며, 정책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시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귀하의 휴대폰 번호는 무엇입니까? _____ - _____ - _____

2.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IRB 승인 결과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제2023-017호	발송일자	2023.04.12.
연구과제명	청년의 금융소의 실태와 정책과제		
과제번호	[수탁23-009-00]		
연구책임자	(성명) 김성아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 부연구위원		
심사일자	2023.04.05-04.12	심사형태	신속심사
심사결과	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심의(보완) <input type="checkbox"/>
총 연구기간	2023.02.10.-2023.09.30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3.04.12부터 2024.04.11까지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IRB의 권고사항, 변경요청사항 등 결정사항을 기재)			
<input type="checkbox"/> 심의위원 의견의 반영 검토를 전제로 심의결과를 '승인'으로 결정함.			
심사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1 ○ 전반적으로 연구윤리 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조사를 승인함. - 다만, 첨부 심의의견서(1) 내용의 보완 및 수정후 조사진행요망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2 ○ 전반적으로 본 조사는 IRB 심의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고 규정을 준수 하고 있으며, 면접 문항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본 신청내용을 승인함. - 다만, 첨부 심의의견서(2) 내용의 보완 및 수정후 조사진행 요망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실 경우 다시 심의를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구윤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통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2023년 04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직인)



3. <청년의 금융생활 실태조사> 부록표

<부표 1> 부채 건수별 부채 현황

(n=1,590)

구 분	보유 부채 건수						
	2건 이하 (n=1,252)		3~5건 (n=295)		6건 이상 (n=43)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부채 종류 (복수 응답)	소계	1,682	100.0	1,043	100.0	317	100.0
	학자금 대출	523	31.1	243	23.3	317	21.8
	금융기관 담보대출	314	18.7	136	13.0	35	11.0
	금융기관 신용대출	431	25.6	366	35.1	121	38.2
	신용카드 관련 대출	128	7.6	103	9.9	41	12.9
	연체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119	7.1	67	6.4	28	8.8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갯돈을 탄 후 낼 돈	57	3.4	26	2.5	9	2.8
	휴대폰 등 내구제 대출	73	4.3	40	3.8	12	3.8
	캐피탈, 사채, 대부업체대출 및 작업대출	37	2.2	62	5.9	2	0.6
부채 기관 (복수 응답)	소계	1,268	100.0	744	100.0	225	100.0
	제1금융권	705	55.6	383	51.5	70	31.1
	제2금융권	87	6.9	117	15.7	61	27.1
	비은행금융기관	14	1.1	15	2.0	6	2.7
	증권회사	5	0.4	2	0.3	2	0.9
	한국장학재단	394	31.1	170	22.8	64	28.4
	보험회사	8	0.6	10	1.3	5	2.2
	대부업체	3	0.2	4	0.5	9	4.0
	여신전문기관	3	0.2	5	0.7	3	1.3
	각종 공제회	14	1.1	7	0.9	4	1.8
	정부기관	35	2.8	29	3.9	1	0.4
	기타	-	-	2	0.3	-	-

담보 형태 (복수 응답)	소계		314	100.0	136	100.0	35	100.0
	거주주택		191	60.8	46	33.8	7	20.0
	거주주택 이외 주택		25	8.0	18	13.2	1	2.9
	주택 이외 부동산		13	4.1	4	2.9	3	8.6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채권		53	16.9	52	38.2	19	54.3
	기타 (전세권, 자동차 등)		32	10.2	16	11.8	5	14.3
부채 용도 (복수 응답)	소계		1,682	100.0	1,043	100.0	317	100.0
	거주주택 구입		137	8.1	57	5.5	9	2.8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50	3.0	24	2.3	2	0.6
	전세, 월세 보증금		286	17.0	88	8.4	12	3.8
	금융자산투자		69	4.1	68	6.5	24	7.6
	본인 부채 상환		104	6.2	126	12.1	19	6.0
	부모 등 본인 외 부채 상환		45	2.7	38	3.6	16	5.0
	결혼자금		12	0.7	7	0.7	6	1.9
	사업자금		33	2.0	42	4.0	7	2.2
	교육비		387	23.0	146	14.0	59	18.6
	본인 생활비		513	30.5	391	37.5	153	48.3
	부모 등 본인 외 가구원 생활비		46	2.7	56	5.4	10	3.2
부채 금액 (만원)	최초 부채금액	평균 (표준편차)	4,576.73 (7,889.26)	8,112.93 (11,646.66)	9,010.23 (9,006.64)			
		최솟값	10	45	582			
		최댓값	61,000	76,000	37,650			
	부채 잔액	평균 (표준편차)	3,873.52 (7,313.77)	7,961.29 (11,886.97)	7,216.09 (7,602.87)			
		최솟값	1	13	393			
		최댓값	58,000	65,900	33,255			

〈부표 2〉 향후 부채 계획

(n=2,281)

구 분		부채있음		부채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향후 부채 계획	있음	823	51.8	339	49.1
	만 19~24세	230	27.9	92	27.1
	만 25~29세	274	33.3	110	32.4
	만 30~34세	319	38.8	137	40.4
	없음	767	48.2	352	50.9
1년 후 예상되는 부채 규모	감소 예상	835	52.5	34	4.9
	변화 없음	332	20.9	161	23.3
	증가 예상	423	26.6	216	31.3
	응답 안함	-	-	280	40.5
(“증가 예상”으로 응답한 경우) ↳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	거주주택 구입	140	33.1	72	33.3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주택 등)	24	5.7	12	5.6
	전세, 월세 보증금	114	27.0	76	35.2
	금융자산투자	10	2.4	9	4.2
	본인 부채 상황	13	3.1	2	0.9
	부모 등 본인 이외 부채 상황	7	1.7	-	-
	결혼자금	12	2.8	6	2.8
	사업자금 (사업용 자산구입 및 운용자금 포함)	11	2.6	9	4.2
	교육비 (학자금 포함)	50	11.8	7	3.2
	본인 생활비	30	7.1	21	9.7
	부모 등 본인 이외 가구원 생활비	10	2.4	2	0.9
	기타	2	0.5	-	-

〈부표 3〉 재무관리 현황

(n=2,281)

구 분		부채있음		부채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장단기 재무목표 수립, 재무상태 정기적 점검 정도	평균	3.6		3.5		
	전혀그렇지 않다	56	3.5	27	3.9	
	그렇지 않다	201	12.6	121	17.5	
	보통이다	422	26.5	164	23.7	
	그렇다	616	38.7	253	36.6	
	매우 그렇다	295	18.6	126	18.2	
전체		1,590	100.0	691	100.0	
신용카드 결제 마감일 준수 정도	평균 (비해당 제외)	4.3		4.4		
	전혀그렇지 않다	18	1.1	5	0.7	
	그렇지 않다	51	3.2	7	1.0	
	보통이다	160	10.1	45	6.5	
	그렇다	365	23.0	123	17.8	
	매우 그렇다	701	44.1	270	39.1	
	비해당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295	18.6	241	34.9	
재무관리 계획	소득의 일정 부분 저축 (투자 포함)	있음	1,186	74.6	587	85.0
		없음	404	25.4	104	15.1
	연금저축 등 노후설계 및 노후 준비	있음	625	39.3	294	42.6
		없음	965	60.7	397	57.5
	청약통장 등 거주주택 마련	있음	1,128	70.9	504	72.9
		없음	462	29.1	187	27.1

〈부표 4〉 재무 관련 교육 및 상담 경험

(n=2,281)

구 분		부채있음		부채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재무/금융교육 이용경험	있음	363	22.8	123	17.8	
	없음	1,227	77.2	568	82.2	
↳ “있음” 경우, 해당 교육 주체	학교, 평생교육기관	149	41.1	74	60.2	
	지자체, 정부기관	109	30.0	30	24.4	
	금융기관(은행)	89	24.5	12	9.8	
	기타	유튜브, SNS 등	7	1.9	5	4.1
		교육기관	3	0.8	-	-
		보험/재무설계사	1	0.3	-	-
		대외 활동	2	0.6	2	1.6
		회사	3	0.8	-	-
	소계		363	100.0	123	100.0
	재무/금융상담 이용경험	있음	192	12.1	46	6.7
없음		1,398	87.9	645	93.3	
↳ “있음” 경우, 해당 교육 주체	학교, 평생교육기관	61	31.8	17	37.0	
	지자체, 정부기관	56	29.2	11	23.9	
	금융기관(은행)	55	28.7	9	19.6	
	기타	유튜브, SNS 등	4	2.1	2	4.4
		교육기관	2	1.0	-	-
		보험/재무설계사	8	4.2	5	10.9
		대외 활동	4	2.1	2	4.4
		회사	2	1.0	-	-
	소계		192	100.0	46	100.0

〈부표 5〉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경험

(n=2,281)

구 분		부채있음		부채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문의 혹은 상담 경험	있음	262	16.5	54	7.8	
	이용경험	있음	158	60.3	19	35.2
		없음	104	39.7	35	64.8
	없음	1,328	83.5	637	92.2	
소계(복수응답)		246	100.0	36	100.0	
채무조정 및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경험 “있음” 응답자의 이용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51	20.7	7	19.4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38	15.4	5	13.9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58	23.6	11	30.6	
	서민금융진흥원 분할 상환제도/ 분할상환 유예제도	40	16.3	5	13.9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 관리공사) 채무조정	23	9.3	5	13.9	
	법원 개인 회생	28	11.4	2	5.6	
	법원 개인 파산	8	3.3	1	2.8	

〈부표 6〉 가구 현황

(n=2,281)

구 분		부채있음		부채없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590	100.0	691	100.0
가구원 수	1명	445	28.0	93	13.5
	2명	281	17.7	105	15.2
	3명	354	22.3	199	28.8
	4명	387	24.3	224	32.4
	5명 이상	123	7.7	70	10.1
가구주 여부	해당	846	53.2	210	30.4
	비해당	744	46.8	481	69.6
혼인상태	기혼	255	16.0	73	10.6
	사별, 이혼, 별거	21	1.3	5	0.7
	미혼	1314	82.6	613	88.7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함께 거주	679	42.7	440	63.7
	따로 살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음	151	9.5	78	11.3
	부모로부터 독립함	760	47.8	173	25.0

4.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지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초점집단 인터뷰(FGI) 조사 설문동의서 및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년의 금융취약성과 정책소의 실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취약청년의 특성과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 설계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될 것입니다. 본 인터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셔도 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본 면담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하여 인터뷰 녹음파일과 전사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캐비닛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파일로 작성된 자료는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터뷰 자료 보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3년간 보관되며 이후 문서파쇄기로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답례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응답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는 용도 이외, 수집하거나 분석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별도의 서류를 통해 한 번 더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연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044-287-8304), 김문길 연구위원(044-287-8354), 나원희 부연구위원(044-287-8498), 강예은 연구원(044-287-8400)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금융취약청년 및 가구 배경, 금융취약 경로 및 경험, 대응 전략, 지원 경험, 미래 계획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금융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들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수행하여, 금융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은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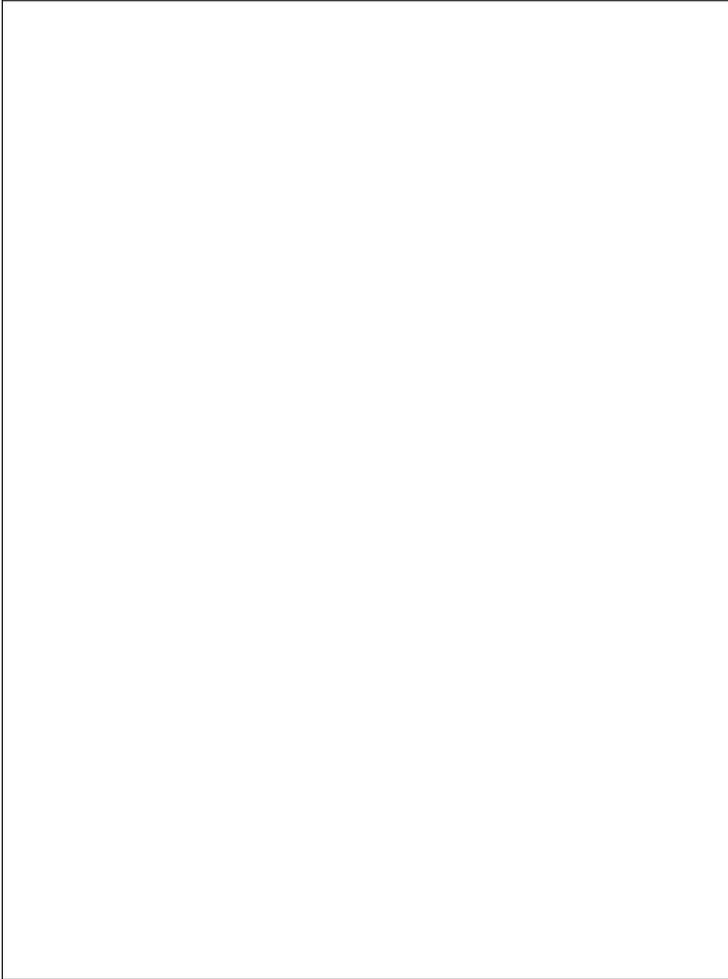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념) 금융취약청년은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가요?

○ 금융취약성의 유형과 성별, 연령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 배경 등을 포함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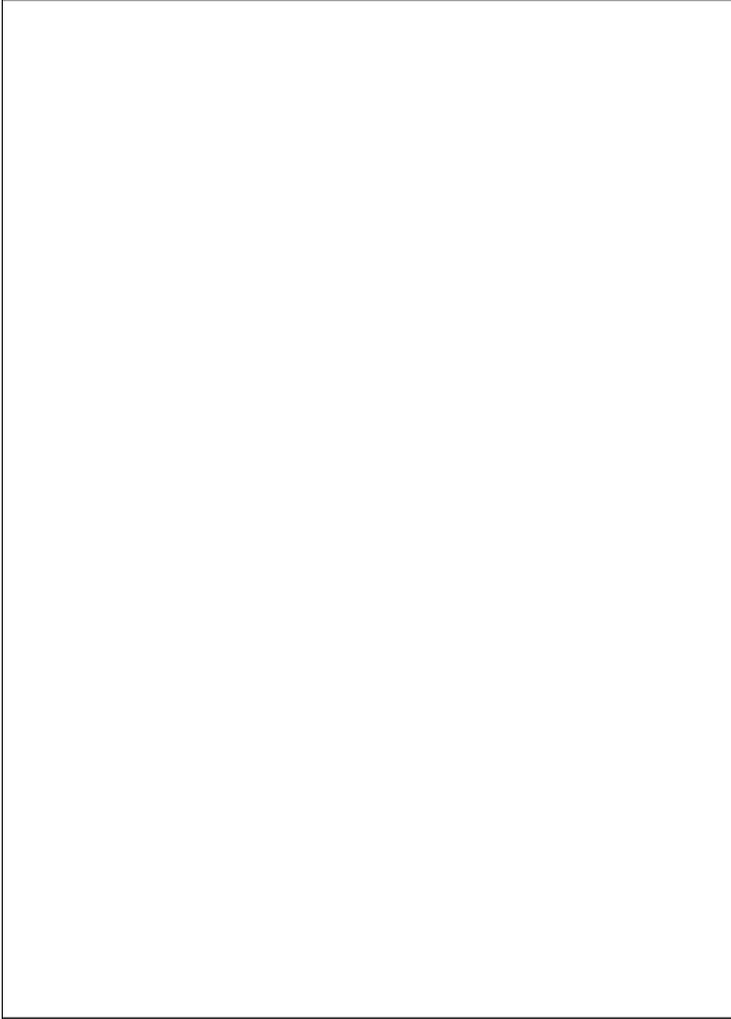


□ (경로) 청년이 금융취약에 이르는 경로는 어떠한가요?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 (사적 대응방안) 금융취약청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주로 대응하나요?

○ 개인적인 노력,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적인 지지체계 등



□ (공적 지원방안) 금융취약청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 발굴, 지원 내용과 방법, 사후관리 등



□ (기타 의견) 금융취약청년 지원과 관련해 연구진에게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5.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초점집단 인터뷰> IRB 승인 결과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舊 제2023-058호 (新 제2023-0064호)	발송일자	2023.06.27
연구과제명	[수탁23-009-00]청년의 금융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과제번호	P202300085		
연구책임자	(성명)김성아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부연구위원		
심사일자	2023.6.21~2023.6.26	심사형태	신속심사
심사결과	승인 <input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심의(보완)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총 연구기간	2023-02-10 ~ 2023-09-30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3.6.27부터 2024.6.26까지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IRB의 권고사항, 변경요청사항 등 결정사항을 기재) □ 심의위원 의견의 반영 검토를 전제로 심의결과를 '시정승인'으로 결정함.			
심사의견	[검토의견 1] - 본 조사는 청년의 금융소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취약 청년 지원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FGI 조사임. - 서울, 부산, 광주 지역별로 3~4명씩 10명 내외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됨. - 동의서가 조사 목적, 방식, 대상자의 권리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안내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구윤리 상의 문제점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조사를 승인함.		
	[검토의견 2] □ 동의서에는 주요한 내용이 대체로 잘 포함되어 있음.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응답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는 용도 이외, 수집하거나 분석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별도의 서류를 통해 한 번 더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별도로 동의를 구하는지 확인 바람. - 이 문장은 다음 단락으로 옮겨서 앞의 조사 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해주시면 좋겠음. - 아울러 아래 예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서 예시> 본 조사는 약 90~1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윤리위원회 지침 하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녹음된 내용은		

	<p>인터뷰 종료 후 녹취록으로 작성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 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녹음 및 녹취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서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예, 참여자 A)으로 처리되어 포함될 것입니다.</p> <p>연구의 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p> <p>조사 참여시 당레로 15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되며, 사례비 지급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 소, 계좌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정보는 사례 비 지급만을 위해 활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와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활용 및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p>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며, 녹음을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녹음이 취소됩니다. 또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셔도 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p>
--	---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제출하신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실 경우 다시 상의를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구윤리를 위하여 관련부처가 필요시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2023년 06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세대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년의 금융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청년의 금융 취약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소위 금융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실태와 정책 간 간극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은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자산은 중년 후기에 최고점을 보이며, 노년기에는 점차 감소하는 모델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과 유사한 실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난 10년 간 청년 부채의 양상은 다소 변화했다. 예전 청년의 부채는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주된 이유로 했다. 최근 청년의 부채도 여전히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거주주택이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졌다.

금융취약청년의 실태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23년 4~5월 동안 부채가 있거나 없는 청년 2,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있는 청년보다 부채가 없는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이 다소 높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청년에게 있어 부채가 긍정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부채를 가진 청년 중 재무교육이나 상담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은 22.8%에 불과한데, 절반 정도에 달하는 금융 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나 정보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

봄청년 등 다른 유형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청년은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의 약 15% 정도로 나타나, 청년의 금융취약성이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취약성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금융정책은 약 67개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정책은 300개를 넘는다. 대출성의 사업이 약 45% 정도로 절반 정도이고, 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사업은 7% 정도에 불과하다. 공공에 의한 금융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비영리 분야의 금융 지원은 미진한 상황이다.

종합하면, 첫째, 전 생애 금융 건강성 확보를 위한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 원가족 등 보호를 받는 미성년기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생애 경제적 웰빙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부채를 형성해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지우는 청년정책의 금융화를 지양하고 청년의 실제 삶에 가닿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금융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과중채무, 다중채무, 악성채무, 연체 등 다양한 금융취약 유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한 청년이 낙인감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고,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과 실무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다중 취약청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의 금융취약성은 사회적 고립이나 저소득, 경제활동 중단 등의 또 다른 유형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심리, 도박 및 중독, 자활, 복지 등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금융취약성 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기반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청년 인적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금융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 관련 정보의 질 관리와 규제를 통해 청년의 금융 건강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the current generation of young adults and produce evidence f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olicies. To this end,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to understand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young adults and developed a three-dimensional picture of their financial vulnerabilit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so-called financial policies available to young people and explored the gaps between reality and policy.

The study found that young adults begin to build assets as they enter the workforce to prepare for an independent life as adults. We found that these assets peak in late middle age and gradually decline in old age, similar to Modigliani's life-cycle hypothesis. We also found that young adults debt has changed over the past decade. In the past, the main reasons for young adults debt were education and living expenses. While a high proportion of young people's debt is still for education and living expense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is for housing, real estate, and rent deposits.

As part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young adults Financial Lif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April and May 2023 among 2,281 young adults with and without debt, and found that young adults without debt were somewhat more likely than young adults with debt

to say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and have a support system to help them through difficult times. This may indicate that debt may not be used in a positive way for young adults. Only 22.8% of young adults with debt have ever received financial education or counseling, and nearly half of the sources of financial information are internet searches, indicating that the quality of information needs to be managed. Young adults with other types of vulnerabilities, such as disabilities, young adults preparing for independence, and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members, account for about 15% of young adults with debt, suggesting that financial vulnerability is not exclusive to young adults, but can overlap with other types of vulnerability and undermine their lives.

Currently, there are about 67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policies and more than 300 local government financial policies available to young people, but about 45% of them are loan programs, and only 7% are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support from the nonprofit sector, which can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in public financial policies, is still lacking.

Taken together, there is a need to support young people's financial health throughout their lives. Social safety nets are needed to support young people's healthy financial lives as they begin to build the assets that underpin their lifelong economic well-being. In particular, it would be effective to move away from the financialization of young adults policies that create new debt and burden young people with interest and principal repayments, and towards policies that are more in touch with their real lives.

Second, customized support for financially vulnerable young adults is needed.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the support measures available to address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vulnerability, including

over-indebtedness, multiple debts, bad debts, and delinquency. A young adults-specific approach is needed to ensure that young people can access support systems without feeling stigmatized.

Third, comprehensive support for young people with multiple vulnerabilities is needed. Young people's financial vulnerability can lead to other types of vulnerability, such as social isolation, low income, and economic inactivity. Comprehensive support that responds to multiple needs is needed, not only for debt consolidation, but also for mental health and psychology, gambling and addiction, self-sufficiency, and support for wom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ll of which are available locally.

Finally, we need to build a foundation for reducing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operate locally-based young adults-friendly delivery systems for financial access, train young adults cognitive experts, and improve the harmonization of legal bases for supporting financially vulnerable young adults. In addition, quality control and regul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that young people have access to quality information.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 정책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외 실태와 정책과제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자·김지연·서고운·이정만·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승아·문미혜·윤애영·김주아·조성윤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울·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유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슝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3-88-03
연구보고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11-1 94330

979-11-5654-408-1 (세트)

연구보고 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11-1
ISBN 979-11-5654-408-1(세트)